

서한

06-정책-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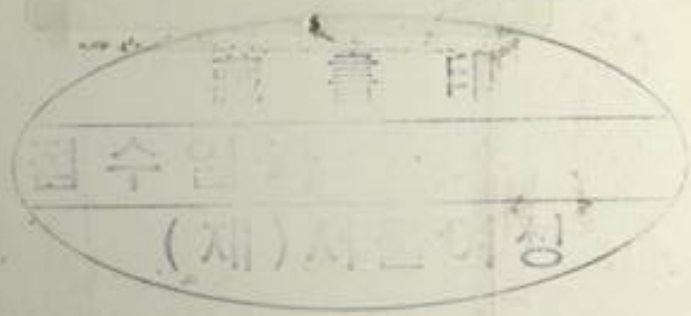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가족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성평등도서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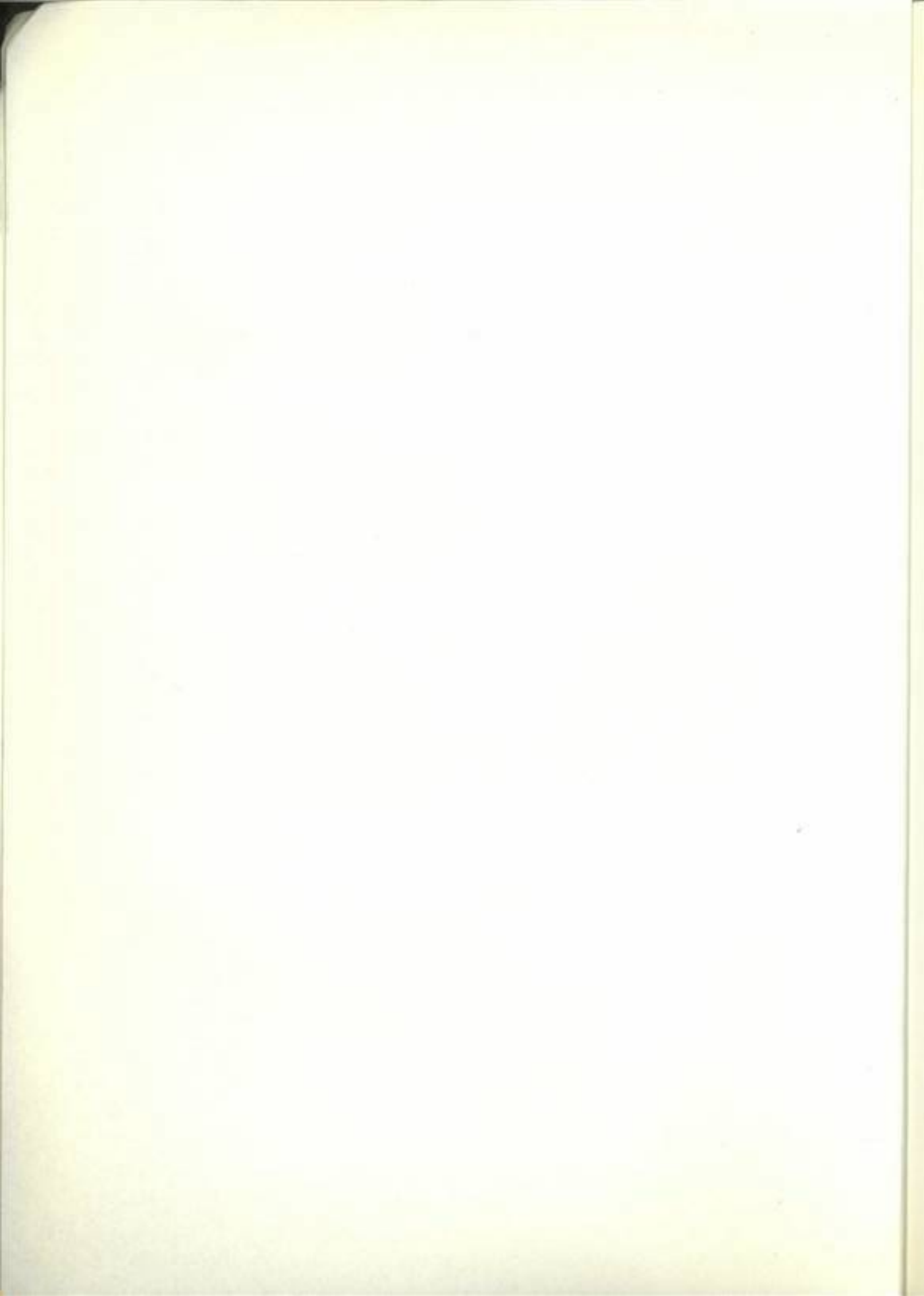


GL0000485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시 : 2006년 9월 26일(화) 14:00 ~ 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가족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1권 1책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2권 2책

프 로 그 램

14:00~14:10 개 회 식

14:10~14:20 인사말씀

신 언 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14:20~15:30 서울특별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초안발표

발표 1. 「서울시 가족정책 환경변화」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발표 2. 「서울가족의 현황 및 전망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진 미 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발표 3.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고 선 주 (재단법인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15:30~15:40 휴 식

15:40~16:40 지정토론

강 창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선 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 다 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윤 석 (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혜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전공 교수)

황 정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6:40~17:00 종합토의 및 폐회

版二第

版一第 00.01-00.01

版二第 00.01-00.01

版三第 00.01-00.01

版四第 00.01-00.01

版五第 00.01-00.01

版六第 00.01-00.01

版七第 00.01-00.01

版八第 00.01-00.01

版九第 00.01-00.01

版十第 00.01-00.01

版十一第 00.01-00.01

I.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개요	1
1.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1
2. 연구 방법 및 절차	2
II.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4
1. 서울시 가족환경의 변화	4
2. 서울시 가족정책의 필요성	21
III. 서울시 가족 특성 및 정책 수요	25
1. 서울시 인구 및 가족추이 전망	25
2. 서울시 가족 생활시간 조사	35
3.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결과	45
4. 서울시 가족정책수요 조사	81
IV.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87
1. 서울시 가족정책 환경분석 및 현황	87
2.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구조	95
V. 핵심영역별 세부과제	98
1. 가족돌봄의 사회화	98
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14
3. 건강한 가족문화 정립	124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140
5.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153
참고문헌	165

1.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개요

1.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법의 15조~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관련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2003년에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2005년 12월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2006년 4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음.
- 경기도는 2005년 경기도민의 가족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2006년 2월에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를 완료하였음.
- 서울시는 민선 4기 출범에 즈음하여 서울시의 가족특성을 파악하고 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만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기반한 민선4기 2007-2010년도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1. 기본계획 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07~2010년 (4개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가족 유형별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이 전망
서울시 가족 유형별 가족실태 조사 및 분석
서울시민의 가족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방안(계획)
가족정책 영역 및 영역별 과제 도출 및 연차별 추진계획(계획)

1.2.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15~16조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 조성'
-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시정 4개년계획(안)

2. 연구 방법 및 절차

2.1.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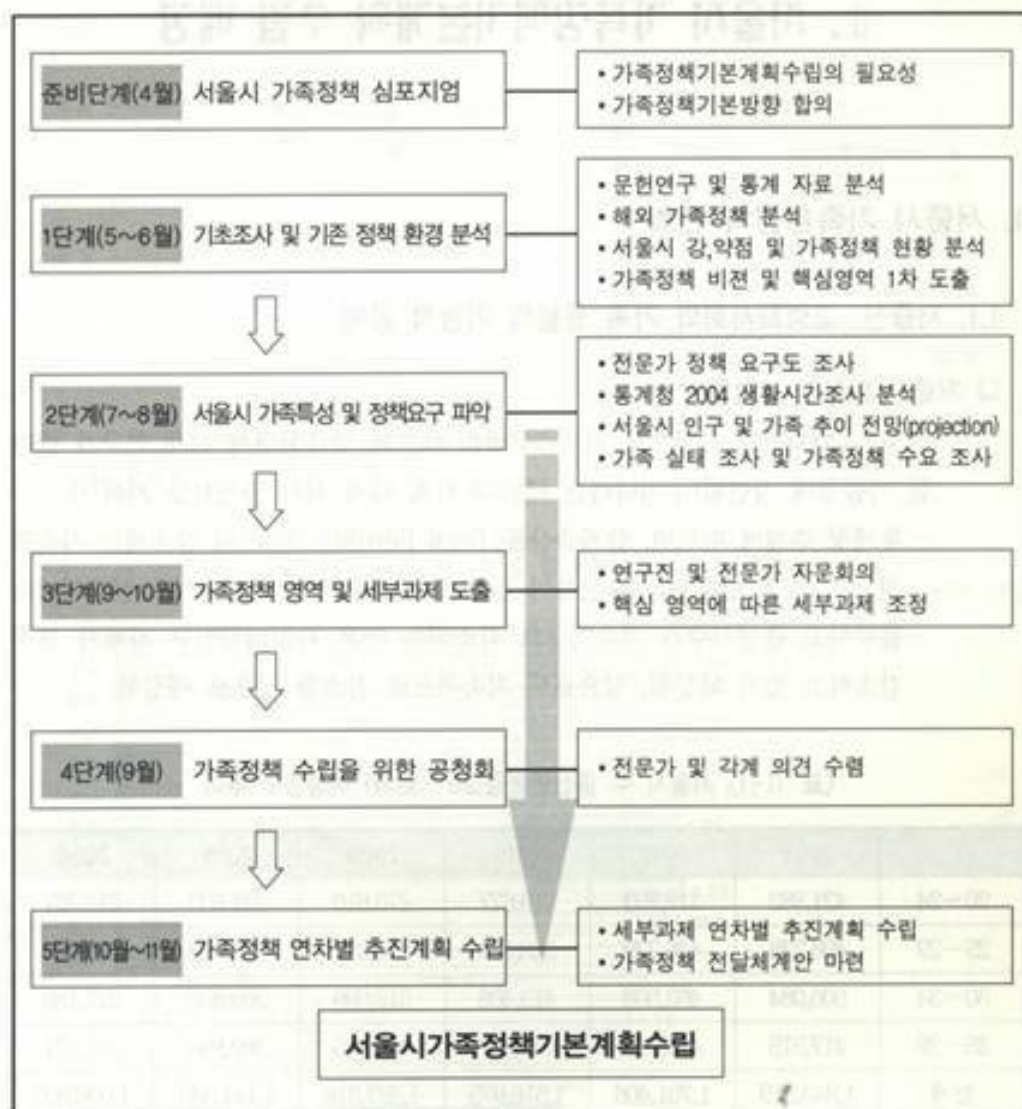
- 서울시 가족특성 파악을 위한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 통계청 2004 생활시간 조사
 - 통계자료에 근거한 서울시 인구 및 가족 추이 전망(projection)
 - 문헌 연구에 기초한 가족 환경 변화 분석
 - 보육 관련 현황 분석
- 서울시 가족형태별 실태 및 가족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여성 및 가족관련 전문가 대상의 정책 요구도 조사
 - 서울시민의 가족형태별 가족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민의 가족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가족 정책 현황 파악 및 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행정자료 분석
 - 서울시 가족정책 심포지엄 마련
 - 가족관련 과별 업무 보고 및 사업계획서 분석
 - 전문가 자문

2.2. 연구기간 : 2006년 5월 ~ 12월

2.3. 연구 절차

-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은 <그림 1-1>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었음.

〈그림 1-1〉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절차



2.4. 연구진

고선주, 조영미, 김유나(재단법인 서울여성)

김혜영, 류연규(한국여성개발원)

조영태, 진미정(서울대학교)

이완정(인하대학교)

II.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1. 서울시 가족환경의 변화

1.1.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

□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

-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에 직면함(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¹⁾).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향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가임여성인구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 서울시 주 출산연령층(20~39세) 여성인구 추이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24	421,882	312,703	319,677	276,610	231,033	219,467
25~29	498,238	446,279	328,793	334,014	287,018	238,274
30~34	506,084	463,508	419,408	312,699	320,402	277,188
35~39	417,315	478,916	442,197	403,995	302,896	311,871
합계	1,843,519	1,701,406	1,510,075	1,327,318	1,141,349	1,04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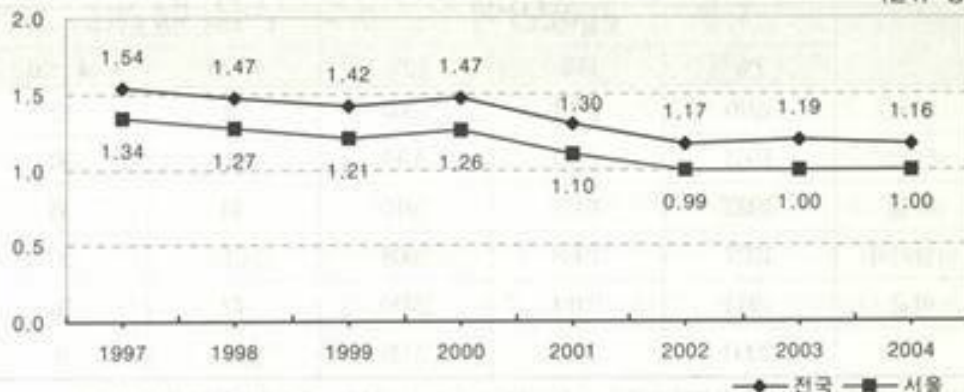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연령별 시도 추계인구」

-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0.99까지 낮아졌으나 2003년 이후 1.00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합계출산율이 1.00명으로 부산(0.9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음.

1) 미국인구통계연구소 인구조화국(PRB)의 '2006 세계 인구통계표' 발표

〈그림 II-1〉 서울시 합계출산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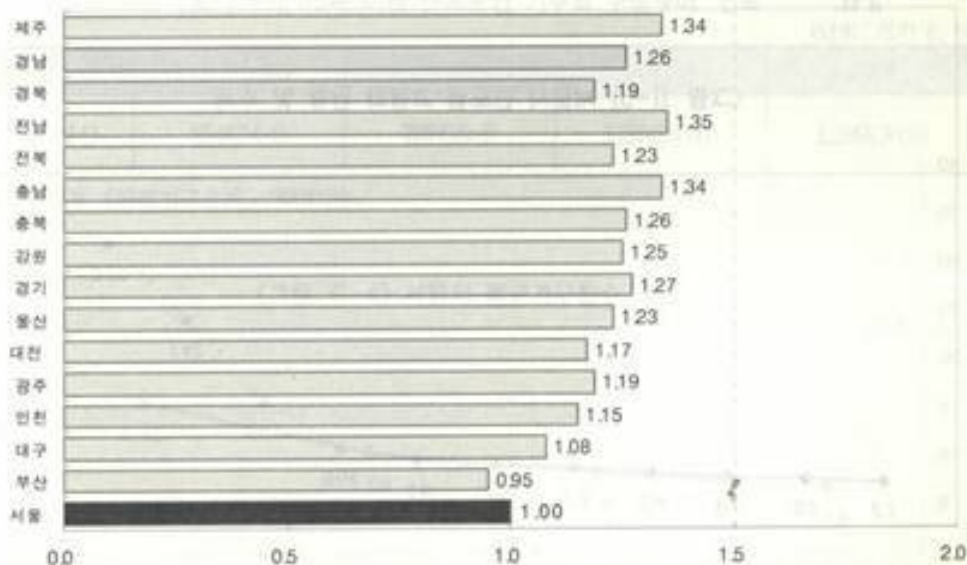
(단위: 명)



^{a)} 가임여성(15~49세)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5)」

〈그림 II-2〉 시·도별 합계출산율 비교(2005)

(단위: 명)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다른 국가의 선례에 비해 압축적으로 진행됨.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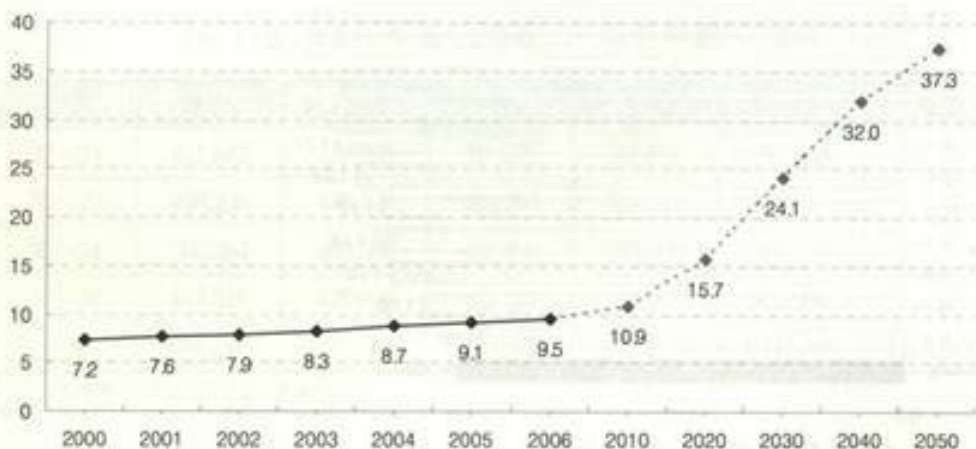
〈표 II-2〉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도달년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한국개발원2006서 재인용

- 서울시 역시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²⁾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그림 II-3〉 서울시 연도별 고령화 현황 및 추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5)」

- 2)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함.

□ 돌봄의 수요 증가와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노동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족규모의 지속적인 축소와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족의 돌봄노동의 기능적 공동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됨.

- 가족구조변화에 비추어 볼때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거주형태는 단독가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2010년의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고령 및 와병노인의 간호와 부양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
-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가족규모의 감소, 그리고 1인(독신)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현재 가족형태변화의 추세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기제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 II-3〉 65세 이상 단독노인 가구의 구성추이: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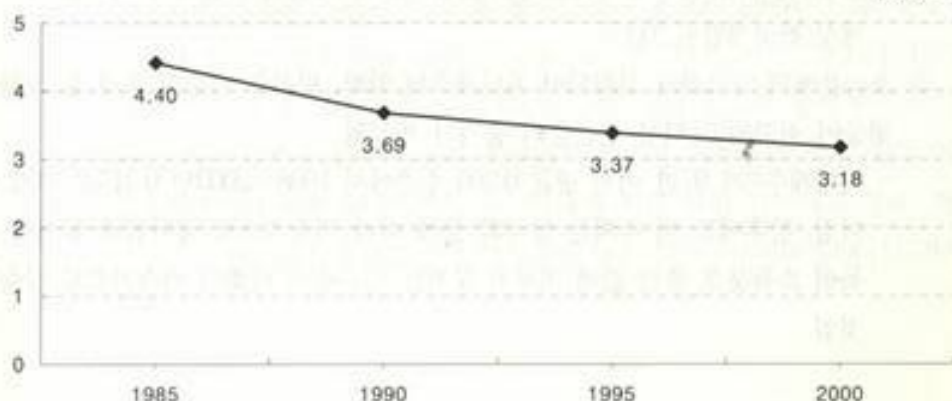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
65세 이상	554(24.4)	787(29.4)	1,044(33.6)	1,289(36.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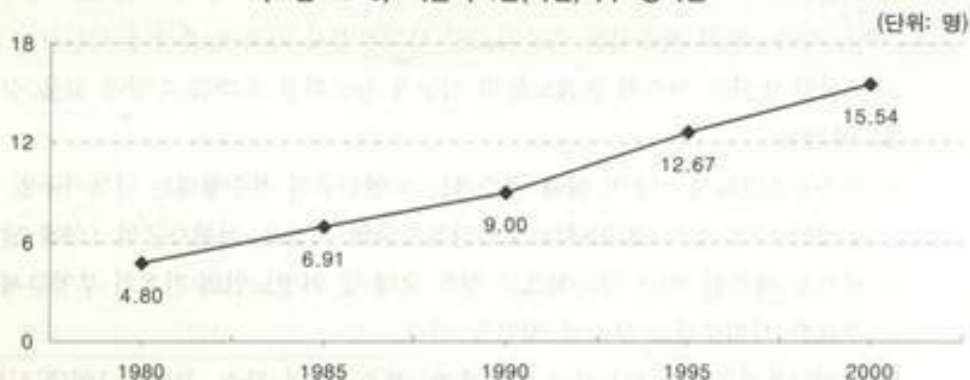
〈그림 II-4〉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그림 Ⅱ-5〉 서울시 1인(독신)가구 증가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00)」

1.2. 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와 2인 생계부양자가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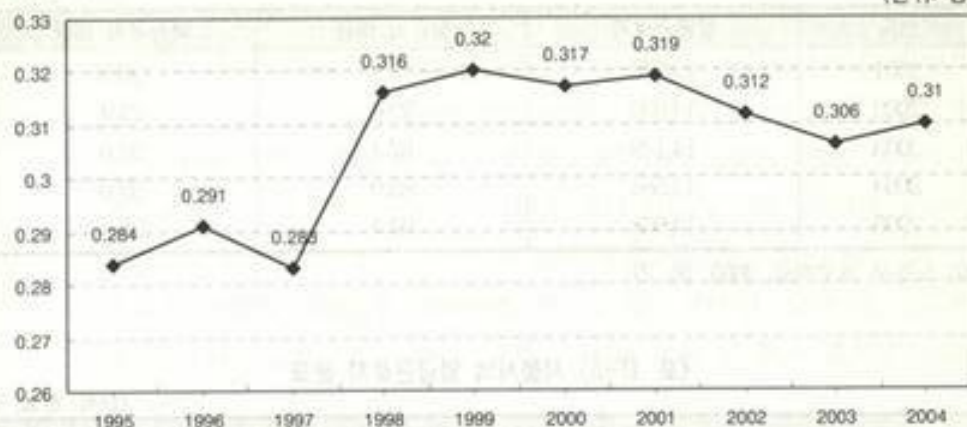
□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성의 심화

- 저성장 시대 진입로의 진입: 자본과 노동투입의 기여율 감소로 현재 잠재성장률은 4% 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03~2010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4.7~5.2% 수준으로 예측됨.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무엇보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및 저축감소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6년부터 생산인력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원, 2006).
-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니계수의 악화, 빈곤층 비중의 증가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여성 빈곤층의 증가가 예상됨.
 - 지니계수³⁾가 97년 이전 평균 0.286 수준에서 1998~2003년 0.315로 크게 높아짐. 향후에도 이 수치는 양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소득이 소득분포 중간 값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임.

3) 지니계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함. 0이 완전평등, 1이 완전불평등.

〈그림 II-6〉 지니계수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2005)」

○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위축됨.

-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고용불안은 경기회복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됨. 특히,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 명예퇴직 증가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비중이 더욱 증가함.

-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낌. 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에서 한국은 세계 32위(2004)를 차지함(삼성경제연구소, 2005).

- 서울시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 총수가 1989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외환위기에 따라 1997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1999년 최저수를 기록한 후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의 경우 50%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58.9%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음. 전반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과반수가 안정성이 낮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표 II-4〉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의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2001	13,540	73.2	26.8
2002	14,030	72.6	27.4
2003	14,149	67.4	32.6
2004	14,584	63.0	37.0
2005	14,968	63.4	36.6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2005. 10. 27.

〈표 II-5〉 서울시의 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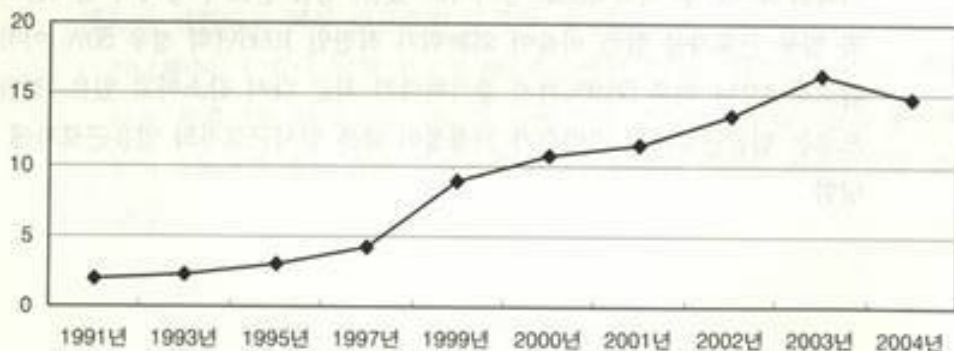
			1989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5
임금근로자	상시	상용근로자	1,477	1,542	1,738	1,654	1,426	1,302	1,341	1,640
		임시근로자	1,096	1,111	1,211	1,260	1,165	1,227	1,347	1,329
	일용		476	5,29	418	458	462	590	573	553
비율(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51.5	51.5	48.4	50.9	53.3	58.2	58.9	5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9~2005)

□ 가족의 경제적 기반약화와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증가

- 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로 가족갈등도 증가하는 추세임. 예컨대, IMF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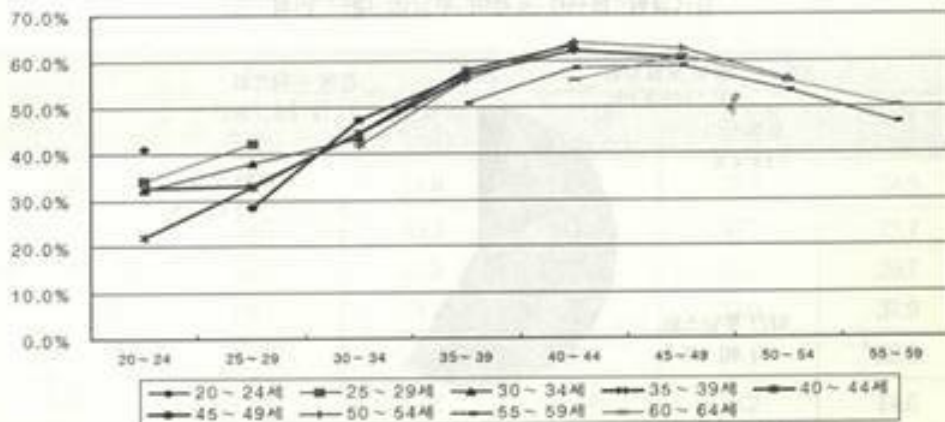
〈그림 II-7〉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비율의 증가(1990~200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5.

-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족생계유지의 주요한 원천이 됨에 따라 가족구조는 2인 생계부양자모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로 변화되면서 점차 여성노동력은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맞벌이 가족 90년 27.4%, 2000년 35.4%로 증가세임(여성가족부, 2006, 내부자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보조소득원의 지위에서 점차 가구전체의 소득수준을 변화시키는 주생계부양자의 지위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추세로 2005년 52.0%로 전국평균 50.1%보다는 높으나 15-64세 기준으로 산출한 OECD 평균 60.1%(2004) 보다 낮음.
- 대부분의 코호트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 U자 모양을 가져와 40~44세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40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50대 초반이 되면 좀 더 빠르게 참가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넘는데 비해 30대 초반의 경우 40% 중반에 불과함.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대부분의 코호트가 연령대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20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최근의 코호트라도 30대 초반의 참가율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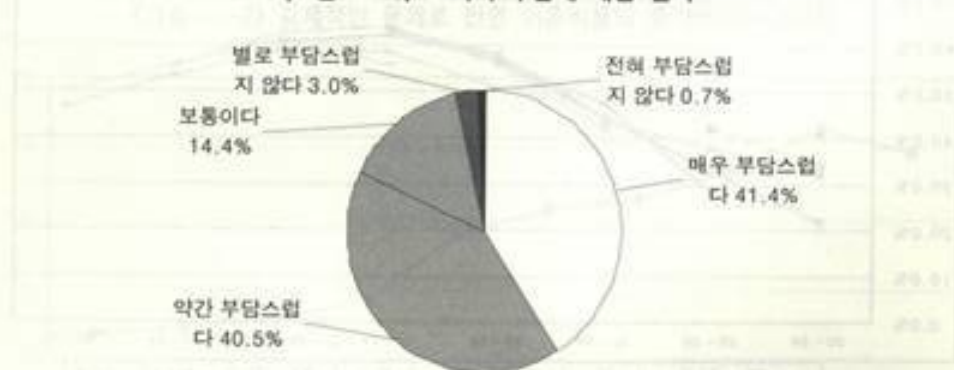
〈그림 II-8〉 기혼여성의 코호트별·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이인재(2006)서 재인용

- 결혼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장벽은 결과적으로 결혼의 기피와 연기와 같은 여성개인의 생애전략의 변화를 초래함. 예컨대 연령대별 미혼자의 비율 변화 최근 20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미혼 비율은 3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5~29세의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5~29세 연령대의 미혼비율은 1985년 30% 수준에서 2005년에는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좁아짐.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에 크게 기인했으며 결과적으로 관측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30~34세의 미혼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년 전 10% 이하이던 비율이 최근 30%에 육박하고 있음.
- 미혼여성이 3년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경우 애초에 취업한 이와 미취업한 이의 상태변화를 이행확률로 표현하였을 때
 - 결혼전에 취업상태였으나 결혼후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은 56%임. 미혼을 유지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인 20%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임. → 결혼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확률을 크게 높임.
 - 결혼전 미취업상태였다가 결혼후 취업을 할 확률은 32% 정도로서 미혼자의 취업확률 49%에 비해 낮음. 결혼은 노동시장으로의 유입확률 또한 낮춤.
- 이에 비해 다양한 소비내구재와 소비문화의 발달로 가족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히 자녀수가 적어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9〉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자녀교육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가구부담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을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가구경제의 합리성의 차원에서 자녀출산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초래함. 서울시민의 경우 응답자의 약 92%가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정도는 급격히 증가. 1980년도에는 전국 중학교 학생의 20.3%가 사교육을 받은 반면에 1990년에는 전체 중학교 학생들의 31.0%까지 증가하였고 1999와 2000년도에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근 2003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75.3%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평균은 13.1%이고, 서울의 강남권이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광역시나 기타지역은 11.5%, 10.4% 였음. 또한 강남권이 가구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2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강남권 가구들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교육비에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 이후 서울지역의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의 변화양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사교육비의 지출액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 월평균 18만 3천원이었던 것이 2001년에 23만2천원으로 32.2%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32.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양정호, 2004).

〈표 II-6〉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의 증가율

		2000년	2001		2002년	
		사교육비 (만원)	사교육비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사교육비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14.9	17.8	19.5	22.4	24.9
서울	강남	30.5	33.2	11.3	58.7	73.7
	비강남	15.9	21.2	33.3	27.5	29.7
	전체	18.3	23.2	32.2	32.0	37.9
광역시		15.1	15.3	10.1	26.1	32.5
기타		11.7	13.2	12.8	15.2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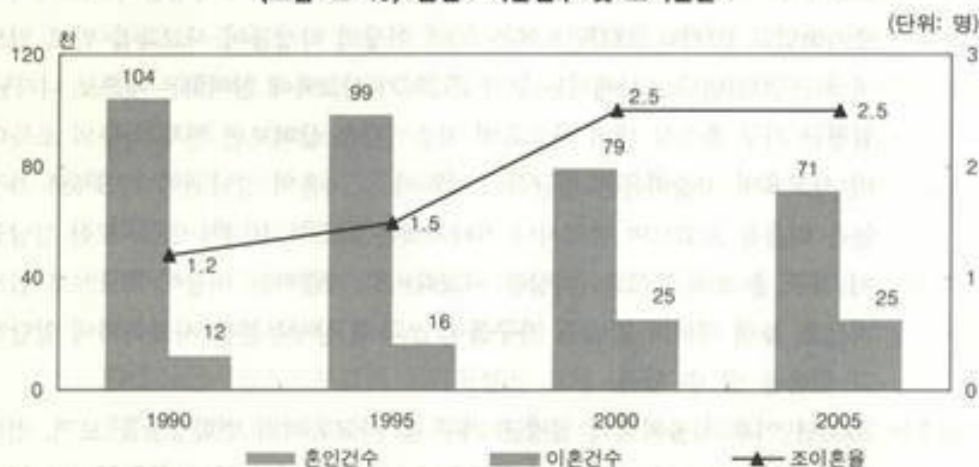
자료: 김지경, 2003.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1.3.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 혼인건수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 서울시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이혼건수는 증가세를 보임. 조이혼율의 경우 1995년 1.5에서 2005년의 경우 2.5로 증가.

〈그림 II-10〉 혼인·이혼건수 및 조이혼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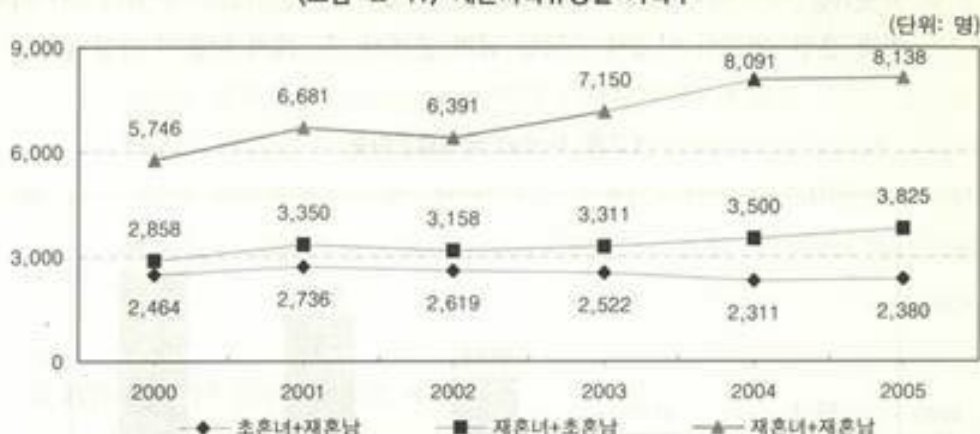
^{b)} 조이혼율(%) = (당해 발생한 총 이혼건수) / (당해년도 연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1990~2005)」

□ 재혼가족, 한부모, 국제결혼 가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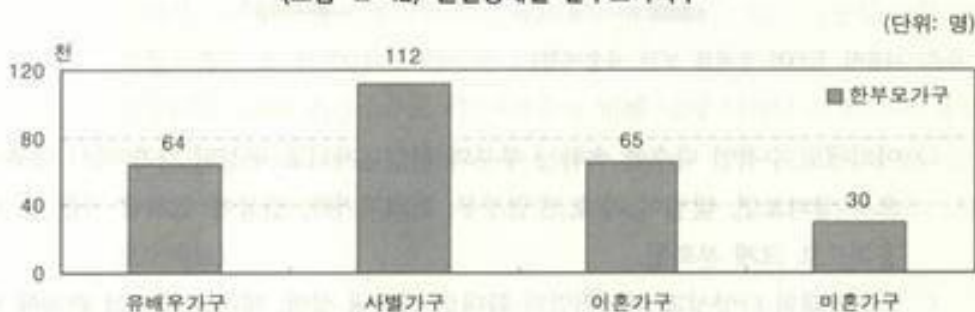
- 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혼가족 역시 증가. 부부 중 어느 한편이라고 재혼인 경우가 2000년의 전체 혼인의 14%에서 2005년에는 20.4%로 증가(특히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와 여성이 재혼이면서 남성이 초혼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은 전체 서울시 가족 중 2000년 기준 9.8%를 차지하는데 이는 1980년 7.4%, 1990년의 8.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00년 기준 서울시 한부모 가족의 80.8%가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임.

〈그림 II-11〉 재혼가족유형별 가족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5)」

〈그림 II-12〉 혼인상태별 한부모가족수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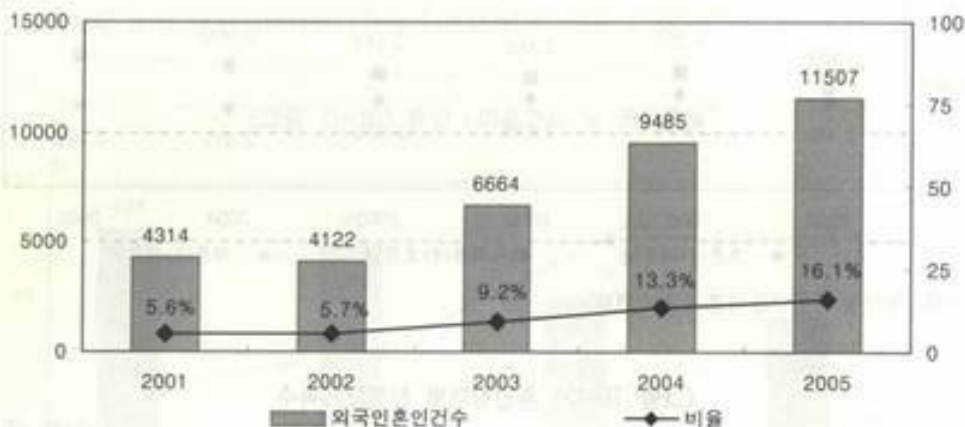
〈그림 II-13〉 혼인상태별 남성·여성가구수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국제결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의 경우 전체혼인건수 중 16.1%가 외국인인과 혼인.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중에서 중국계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II-14〉 국제결혼비율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이외에도 수적인 다수에 속하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족 역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 주말부부, 기러기가족, 연상여-연하남 커플 등 내용적으로 크게 분화됨.
-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여성취업의 확대로 가족내 성별, 세대간 수평적 관계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산됨.

1.4. 정보네트워크의 발달과 가족문화의 부상

□ 정보기술의 발전과 공사 영역의 경계 이완

-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공간·시간이 갖는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거리 개념이 크게 약화됨.
 - 컴퓨터가 통신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단순한 정보처리 기능을 넘어서서 정보를 교류하는 새로운 매체로 부상함.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사회의 기본인프라로 구축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일상적으로 소통가능한 장으로 변화함.
 - ICT(정보통신기술)와 서비스로 과거에 비해 사람들은 교육과 일,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됨. 일과 삶이 융합되어가면서 근로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에 몰두하기 보다는 일의 접근성, 지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일과의 경계가 무의미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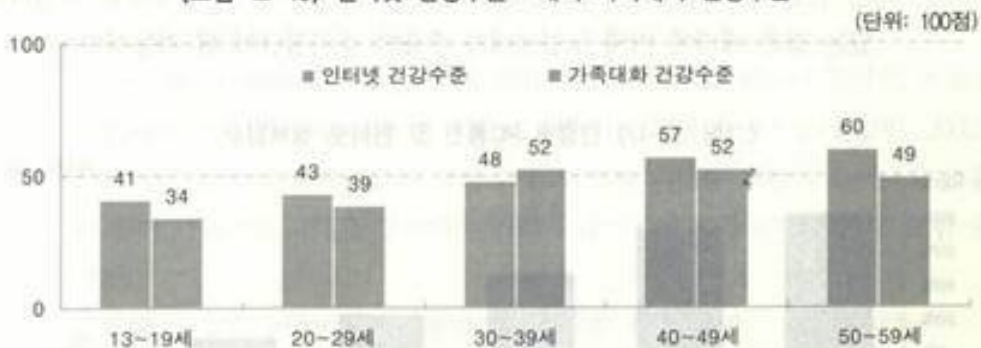
-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IT기술은 산업의 영역과 동시에 오락의 영역으로 빠르게 수용되고, 케이블 TV, 위성TV, 그리고 DMB방송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TV시청 행태가 변화되면서 TV 또한 1인 매체로의 시대를 열고 있음.

□ 개인화와 가족문화의 동시적 부상

○ 인터넷 보급 및 다양한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가족생활방식이 확산됨.

- 재택근무, 휴대용 PDA와 디지털 홈 등으로 가족의 결속력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고유기능과 역할이 가족외부의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가족구성원의 상호연대나 의존성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음.
- 여성가족부 조사(2004)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건강수준도 낮고 가족간 대화 건강수준도 타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상이(51.9%) 인터넷 사용에 따라 가족간 대화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강한 인터넷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여성가족부, 2005, 보도자료).

〈그림 II-15〉 인터넷 건강수준⁴⁾ 대비 가족대화 건강수준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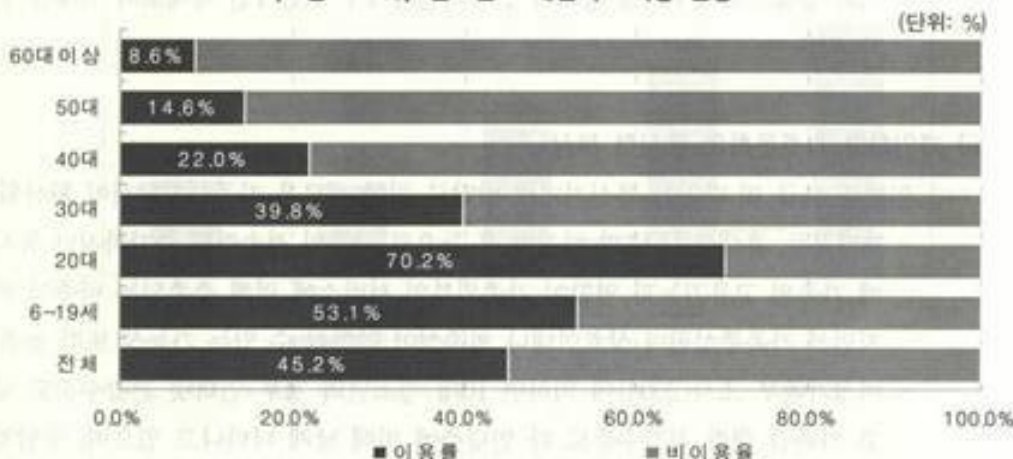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5.29)」

4) '인터넷 건강수준'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장애나, 강박적 집착 같은 중독현상 없이 얼마나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수준

5) '가족대화 건강수준'은 가족간에 대화가 단절 현상 없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측정한 수준

-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망이 더욱 확산됨.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소원해져가는 가족/친족공동체를 대신하는 강력한 관계망으로 발전. 이는 기존의 친족관계망들이 지원해 왔던 정서적 지지 등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영향권을 발휘함.

〈그림 II-16〉 인스턴트 메신저⁶⁾ 이용 현황



자료: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2005)」

- 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화폐와 재화의 방식으로 공유된다면, 정보의 공유와 접근에 있어 새로운 위력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보소유정도에 따른 빈부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데,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세대가 주요한 소외집단이 될 가능성이 큼.

〈그림 II-17〉 연령별 PC통신 및 인터넷 정보입수



자료: 서울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6)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개인끼리는 별도의 사이트 연결 없이 단말기 대 단말기로 자료들의 실시간 전송은 물론, 채팅 등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족문화 수요 증가

○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대표적인 경향으로 바로 웰빙, 건강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들 수 있음.

- 웰빙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단편적 의미 이상의 가치가 반영된 개념으로, 환경의 악화, 고령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웰빙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는 건강을 질환의 부재 상태로 보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속성의 전면적인 안녕상태라는 적극적 혹은 광의의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Jones, 1994; 이미숙 2004 재인용).

- 웰빙은 개인에서 사회로 확산되어 웰빙경영, 웰빙도시, 웰빙 소사이어티로 진화할 것이 예상되는데, 특히 웰빙도시는 현재 많은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태도시개념을 뛰어넘어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며, 웰빙 소사이어티란 개인이 행복추구를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도 웰빙을 복지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것(전영옥, 2005).

○ 이는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지역 및 사회 전체로의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기체적인 인간 존재의 삶의 질을 높히려는 보편적인 인간욕구에 기인하는 것임.

- 민선4기 방향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도시,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행복도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은 이러한 웰빙, 건강 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기업, 지역, 개인의 경쟁력 원천이 물질적, 기술적 힘에서 점차 감성적·문화적 힘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함(심상민, 2002).

○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홀히 했던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적 욕구 또한 증가됨.

- 특히 주 5일 수업으로 가족동반 여가활동은 더욱 증가.

- 국민여가조사(2006)에 의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이후로 생활에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39%)를 꼽음.

-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전체 38.5%가 부모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TV보기' '외식' '쇼핑'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소년의 48.1%

가 '여행' '영화보기' 등의 여가활동을 부모와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이 더욱 길어지는 추세(empty nest : 자녀 결혼후 노년부부만 남는 시기를 지칭)에 따라 새로운 노인세대의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문화가 요청됨
 - 따라서 은퇴후 경제적 활동의 비중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에 고령연애, 이혼, 재혼, 사교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등 노인문화의 활성화가 시작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여가기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미흡.
- 여가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소(McGuire,1996;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 2005서재인용)라는 점에서 건강 유지함과 아울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문화가 필요함.

성공적 노화 = 건강×의미있는 활동×남들에게 필요한 것×재정적 안정성

-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여가활동시간을 분석한 연구(박미석·이유리,2003)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학습활동, 문화관람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은 거의 하지 않고 하루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가장 많게 나타남.
-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여가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 가족결속의 근원이 됨. 또한 가족여가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여가에 관한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주제에 관한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적이고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의사소통기술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각자의 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인 기능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을 습득하게 하여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할 수 있음(문숙재 등, 2005).

2. 서울시 가족정책의 필요성

□ 가족의 구조변동에 따른 가족불안정 증가: 가족안전망으로서의 가족정책

○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자율적 선택에 의한 행복추구가 개인의 고유한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가족생활 역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며, 친족 및 공동체로부터의 자율성의 확보는 물론 부부 및 부모자녀간의 민주적 관계는 가족생활의 주요구성원리로 작동함. 따라서 현대 가족의 안정성은 역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감정적 변화에 의해 좌우됨.

- 결혼이나 가족생활의 지속여부는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녀의 원만한 사회화 과정이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고려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선택으로 인한 자녀복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종식되지만 부모로서의 자녀양육 책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는 이혼남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사회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후기근대적인 다양한 가족가치와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개별 가족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해 수 있는 가족정책의 실시를 통해 전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별가족에게는 자녀양육 및 사회화와 노약자 돌봄과 같은 가족기능의 약화를 방지함은 물론 개인의 정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음.

□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와 사회적 분담기제로서의 가족정책

○ 급속한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가족은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의 세대 구성이 점차 단순화되면서 전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해 왔던 기능의 상당부분은 사회로 이양되거나 다양한 제도와 공유되어 왔음. 그러나 친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크게 감소한 오늘날의 핵가족은 여전히 가족원을 둘러싼 다양한 돌봄 노동의 유일한 전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기관으로 이전된 가족기능의 조차도 여전히 가장 주요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가족은 생산 및 재생산, 돌봄 노동 등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음. 더욱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에 대한 욕구증가로 오히려 개인의 가족에 대한 기대수준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가족은 기능적인 과부하 현상이 나타났고 있음.

- IMF 이후 급속하게 가시화된 글로벌 시장경제는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압박하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여줌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로 대별되어온 가족구조 또한 크게 불안정해 짐. 한편 소자녀화 추세로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사교육비의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및 생활수준의 상승과 같은 가족의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가족생활 유지비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임.
-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맞벌이 가족도 증가추세에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제까지 여성이 수행해온 가족내 돌봄노동의 전담자 부재로 이어짐. 그러나 이에 비해 자녀사회화에 평균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인구 노령화로 인한 가족 내 노인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족내 돌봄노동의 기능적 공백이 우려됨.

□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서울시 환경조성으로서의 가족정책

-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일중심의 생활이 내면화된 남성 장년세대와 달리 현재의 사회문화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가부장적 성역할이 유연한 성역할 의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등 가정생활에 참여하려는 남성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서울시 2005년 기준 52.0%에 달하게 됨으로써 가족내 여성의 역할 및 지위변화는 물론 유연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함.
-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옴. 예컨대 여성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북유럽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나 여성의 재취업이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여성노동력은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어 주변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됨. 여성노동력의 주변화, 비정규직화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및 가족내 평등성의 정도는 사회정책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한국의 여성개발지수(GDI)는 세계 30위로서 한국여성의 능력 개발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같은 성역할분담이 가정과 일터에서 지속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되지 않은 채 여성 개인에게 경력단절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음. 장차 여성들의 취업예측 및 취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결과 여성들의 생애전략의 하나로 나타나는 결혼이나 출산기피 현상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구미 선진국 정부는 출산 후 여성 고용의 계속, 자녀의 부양,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출산의 자유'와 '육아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정비에 전념하기 시작함. 이것은 또 사회와 가정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개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성취업의 일반화를 전제로 하여 육아와 취업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유급육아휴가와 공적보육서비스의 확충에 크게 좌우됨.

-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일과 가정의 조화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임.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구성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가족정책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선도하는 가족친화적인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함.

□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기제로서의 가족정책

○ 한국은 그동안 후발 산업국가로서 성장제일주의 가치에 경도되어 왔음.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위한 목표 추구하고 경쟁 중심적 사고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기초적인 재생산 능력을 소홀하게 만들. 한국은 현재 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재생산위기를 초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가족정책의 보편성이 미비하고 요보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가족정책만이 존재함. 그 결과 가족지원 관련 지출은 GDP대비 0.1에 불과하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무름(장혜경, 김혜영 외, 2005).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개별 가족에서 수행되어온 재생산 관련 노동 및 비용 부담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성원의 충원기제를 확보함.

○ 고령사회와 저출산국가로의 급속한 진입이라는 범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여성 친화적인 출산 및 자녀양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 노동이 사회적인 가치재평가와 함께 개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분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을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가족원의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를 실현케 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서울시 가족 특성 및 정책 수요

1. 서울시 인구 및 가족추이 전망

□ 서울시 인구 추이 전망 자료

2002년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인구의 크기와 구조의 변화를 기술함. 통계청에서 사용한 가정인 합계출산율 1.3을 기준으로 추계를 계산하였음.

□ 서울시 인구 추이

전체 서울시 인구는 2005년에 비해 2010년 다소 커진 후 다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030년 서울시의 인구는 약 9백 5십만 명 내외가 것으로 추산. 그러나 실제 인구는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들(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음.

□ 연령구조

0-4세 인구의 크기가 향후 약 20여 년간 크게 줄어든 것이 예상되고 반대로 노인인구의 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 40-50대 중년층의 인구비중이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베이비 붐 세대로 알려진 1960년대 출산한 인구와 출산아 수가 많았던 197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2015년 즈음하여 중년층에 포함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현상임.

〈표 III-1〉 서울시장래인구추계결과

(단위: 명, %)

	2001	2005	2010	2015
합계	10,081,047	10,033,274	10,072,098	10,055,002
0-4 세	587,634 (5.83)	494,310 (4.93)	477,255 (4.74)	443,771 (4.41)
5-9 세	645,638 (6.40)	551,607 (5.50)	460,188 (4.57)	448,539 (4.46)
10-14세	609,794 (6.05)	637,797 (6.36)	547,281 (5.43)	455,703 (4.53)
15-19세	758,864 (7.53)	612,075 (6.10)	643,793 (6.39)	549,990 (5.47)
20-24세	963,976 (9.56)	852,925 (8.50)	636,065 (6.32)	663,615 (6.60)
25-29세	1,095,987(10.87)	1,002,333 (9.99)	904,967 (8.98)	668,902 (6.65)
30-34세	977,116 (9.69)	1,072,316(10.69)	957,625 (9.51)	868,381 (8.64)
35-39세	858,027 (8.51)	862,986 (8.60)	992,945 (9.86)	899,054 (8.94)
40-44세	877,418 (8.70)	822,640 (8.20)	833,894 (8.28)	964,876 (9.60)
45-49세	723,468 (7.18)	831,693 (8.29)	798,283 (7.93)	813,035 (8.09)
50-54세	579,813 (5.75)	643,241 (6.41)	794,627 (7.89)	766,945 (7.63)
55-59세	461,128 (4.57)	526,121 (5.24)	601,155 (5.97)	748,912 (7.45)
60-64세	368,660 (3.66)	408,536 (4.07)	481,213 (4.78)	556,864 (5.54)
65-69세	246,495 (2.45)	305,600 (3.05)	367,384 (3.65)	439,764 (4.37)
70-74세	149,591 (1.48)	193,388 (1.93)	268,422 (2.67)	327,572 (3.26)
75-79세	96,414 (0.96)	114,183 (1.14)	161,821 (1.61)	227,623 (2.26)
80-84세	51,681 (0.51)	65,359 (0.65)	86,208 (0.86)	125,468 (1.25)
85+	29,343 (0.29)	36,164 (0.36)	58,972 (0.59)	85,988 (0.86)

주: ()는 전체인구에서 해당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부양지수

2005년 현재부터 2030년까지 유년부양비의 감소보다 노년부양비의 증가가 훨씬 증가함. 이러한 추세는 유년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2005년에는 42.3에서 2015년에는 89.6, 2030년에는 215.2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II-2〉 서울시 연령구성의 변화 추이

	2001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0~14세 (%)	18.3	16.8	14.7	13.4	12.4	11.4	10.5
15~64세 (%)	76.0	76.1	75.9	74.6	72.5	69.5	66.9
65세이상 (%)	5.7	7.1	9.4	12.0	15.1	19.1	22.6
유년부양비	24.1	22.1	19.4	18.0	17.1	16.4	15.7
노년부양비	7.5	9.3	12.4	16.1	20.8	27.5	33.8
노령화지수	31.2	42.3	64.0	89.6	121.8	167.5	215.2

자료: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 서울시 가구 추이

먼저 전체 가구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약 3백 3십만 가구가 있음. 1세대 가구는 1995년 약 31만 가구에서 10년 동안 약 16만 가구가 증가하였음(증가율 51%). 1인 가구 역시 같은 기간에 약 38만 가구에서 68만 가구로 약 30만 가구가 증가하여 77%의 증가율을 보임.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10년 동안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2세대 가구의 경우 약 3.6%, 3세대 가구는 약 17%, 4세대 이상 가구는 38%가 감소하였음.

□ 세대별 가구구성의 추이

2세대 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수는 1995년 약 156만에서 2005년 144만으로 약 12만 가구가 감소함. 부부가 양친을 모시고 사는 가구의 수도 1995년 (3,626)에 비해 2000(4,366)년 다소 늘었지만 2005(3,915)년 다시 감소함. 그러나 편부나 편모가 자녀를 키우는 형태의 2세대 가구와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의 수는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의 2세대 가구는 약 86%의 증가추세를 보임.

〈표 III-3〉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

	1995	2000	2005
가구수 계	2,965,794 (100)	3,085,936 (100)	3,309,890 (100)
1세대가구	311,765(10.5)	378,000(12.3)	472,253 (14.3)
부부	228,585 (7.7)	287,461 (9.3)	364,596 (11.0)
기타	83,180 (2.8)	90,539 (2.9)	107,657 (3.3)
2세대가구	1,972,161(66.5)	1,942,354(62.9)	1,901,791 (57.5)
부부, 자녀	1,561,650(52.7)	1,535,514(49.8)	1,442,057 (43.6)
편부, 자녀	44,924 (1.5)	51,978 (1.7)	63,445 (1.9)
편모, 자녀	196,468 (6.6)	218,221 (7.1)	254,161 (7.7)
부부, 양친	3,626 (0.1)	4,366 (0.1)	3,915 (0.1)
부부, 편부모	10,889 (0.4)	13,029 (0.4)	15,724 (0.5)
부부, 자녀, 부부의형제	39,176 (1.3)	24,338 (0.8)	17,226 (0.5)
조부모, 손자녀	3,875 (0.1)	5,224 (0.2)	7,207 (0.2)
기타	111,553 (3.8)	89,684 (2.9)	98,056 (3.0)
3세대가구	253,780 (8.6)	224,496 (7.3)	211,118 (6.4)
부부, 자녀, 양친	29,992 (1.0)	29,633 (1.0)	25,836 (0.8)
부부, 자녀, 편부모	144,507 (4.9)	123,110 (4.0)	107,893 (3.3)
기타	79,281 (2.7)	71,753 (2.3)	77,389 (2.3)
4세대이상가구	3,765 (0.1)	3,201 (0.1)	2,340 (0.1)
1인가구	382,024(12.9)	502,245(16.3)	675,739 (20.4)
비혈연가구	42,299 (1.4)	35,640 (1.2)	46,649 (1.4)

주 ()는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

1인 가구의 경우 1995년 약 38만 가구였던 것이 2005년 약 68만 가구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43만 가구에서 약 67만 가구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4인가구는 같은 기간 약 8만 정도 그 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그 수가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평균 가구원 수도 1995년 3.4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감소함. 적어도 구조면에서는 확대가족의 해체가 서울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가구원 수의 감소와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만을 가지고 서울의 가족 가치관 변화를 결론짓기는 어려움.

□ 부부가구의 연령별 추이

서울시 총 가구 중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비율이 증가하여왔고, 이를 반영하여 2010년과 2015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연령별로는 20대의 부부가구의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30대 특히 30-35세의 부부가구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65세 이상 노년층의 부부가구 수의 증가함.

〈표 III-4〉 부부가구의 연령별 변화추이

(단위: 명, %)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시 가구총계	2,965,794	3,085,936	3,309,890	3,372,800	3,547,500
부부가구 계	228,585 (7.7)	287,461 (9.3)	364,596(11.0)	465,851(13.8)	609,354(17.2)
15세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5-19세	337 (0.0)	152 (0.0)	46 (0.0)	0 (0.0)	0 (0.0)
20-24세	6,979 (0.2)	3,092 (0.1)	1,969 (0.1)	3,373 (0.1)	3,548 (0.1)
25-29세	52,312 (1.8)	45,632 (1.5)	29,613 (0.9)	21,586 (0.6)	16,319 (0.5)
30-34세	42,556 (1.4)	51,483 (1.7)	62,704 (1.9)	74,876 (2.2)	91,880 (2.6)
35-39세	15,622 (0.5)	18,211 (0.6)	25,763 (0.8)	28,736 (0.9)	32,176 (0.9)
40-44세	7,806 (0.3)	12,105 (0.4)	14,701 (0.4)	15,852 (0.5)	19,511 (0.6)
45-49세	7,288 (0.3)	11,438 (0.4)	20,311 (0.6)	28,669 (0.9)	42,570 (1.2)
50-54세	10,658 (0.4)	14,688 (0.5)	22,869 (0.7)	31,367 (0.9)	43,634 (1.2)
55-59세	17,706 (0.6)	23,101 (0.8)	29,305 (0.9)	37,438 (1.1)	48,246 (1.4)
60-64세	24,219 (0.8)	36,019 (1.2)	46,438 (1.4)	63,071 (1.9)	88,333 (2.5)
65-69세	19,728 (0.7)	33,938 (1.1)	50,036 (1.5)	69,142 (2.1)	99,330 (2.8)
70-74세	13,797 (0.5)	20,815 (0.7)	34,525 (1.0)	47,556 (1.4)	70,596 (2.0)
75+	9,577 (0.3)	16,787 (0.5)	26,316 (0.8)	44,184 (1.3)	53,213 (2.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 ()는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일인가구의 연령별 추이

2005-2010년 사이에 25-29세 그리고 30-34세 층에서 일인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0-2015년에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조혼인율, 조이혼율의 변화추이

전체 인구 1,000명 중에서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이는 만혼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혼인 적령기 이상 연령층의 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과 관련됨. 가장 이혼율이 높은 30대와 40대는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이혼율이 약간 늘어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임.

〈표 III-5〉 조혼인율, 조이혼율의 변화추이

(건수=조혼인/조이혼율)

	혼인	이혼
1997	93,810 (9.0)	20,391 (2.0)
1999	85,215 (8.3)	25,917 (2.5)
2001	77,376 (7.5)	28,962 (2.8)
2003	72,750 (7.1)	32,499 (3.2)
2005	71,286 (7.0)	25,300 (2.5)
2010 (R1)	67,184 (6.7)	26,404 (2.6)
2015 (R1)	59,623 (5.9)	26,794 (2.7)
2010 (R2)	68,410 (6.8)	23,117 (2.3)
2015 (R2)	62,583 (6.2)	23,826 (2.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주 R1: 2005년도의 연령별 혼인/이혼율을 근거로 산출

R2: 2000년과 2005년도의 연령별 혼인/이혼율의 변화를 근거로 산출

□ 혼인상태의 변화추이

유배우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혼의 경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다시 안정상태에 머물고 있음. 사별자는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I-6〉 혼인상태의 변화추이

(단위: 명, %)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1995	9,725,107(100)	2,818,650(29.0)	6,341,982(65.2)	466,542(4.8)	97,933(1.0)
2000	8,035,616(100)	2,810,217(35.0)	4,593,286(57.2)	456,965(5.7)	175,148(2.2)
2005	8,143,250(100)	2,882,222(35.4)	4,526,590(55.6)	481,211(5.9)	253,227(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분포

가구의 혼인상태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표 III-7), 모든 혼인상태에 걸쳐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수와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1995년 약 9.7%이던 여성 이혼가구주는 2005년 15.6%로 증가하였음.

(표 III-7)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분포

(단위: 명, %)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1995	계	2,965,794(100.0)	374,347(12.6)	2,273,227(76.7)	240,498 (8.1)	77,720 (2.6)
	남성	2,469,546 (83.3)	222,848 (9.0)	2,179,218(88.2)	38,117 (1.5)	29,363 (1.2)
	여성	496,248 (16.7)	151,499(30.5)	94,009(18.9)	202,381(40.8)	48,357 (9.7)
2000	계	3,085,936(100.0)	439,425(14.2)	2,250,339(72.9)	255,066 (8.3)	141,105 (4.6)
	남성	2,483,401 (80.5)	248,550(10.0)	2,140,298(86.2)	39,048 (1.6)	55,505 (2.2)
	여성	602,535 (19.5)	190,875(31.7)	110,041(18.3)	216,018(35.9)	85,600(14.2)
2005	계	3,309,890(100.0)	581,975(17.6)	2,227,652(67.3)	298,078 (9.0)	202,185 (6.1)
	남성	2,529,317 (76.4)	317,335(12.6)	2,082,259(82.3)	49,065 (1.9)	80,658 (3.2)
	여성	780,573 (23.6)	264,640(33.9)	145,393(18.6)	249,013(31.9)	121,527(15.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애인구추계

□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의 변화 추이

서울의 경우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음. 2001년 약 4천 건이던 국제결혼은 그 수가 2005년 2배 이상 증가한 약 만 천 건에 육박하여 5.1%에서 16.1%로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표 III-8)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국제결혼 건수	4,314 (5.6)	4,122 (5.7)	6,664 (9.2)	9,485 (13.2)	11,507 (16.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조사

주 ()는 총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

□ 서울시 구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25개 각 구에 신고된 국제결혼 건수와 그것이 구별 전체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종로구의 국제결혼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은 약 66%로 나타남. 중구와 용산구 동대문구 그리고 금천구 등도 전체 혼인보고 건수의 20% 이상이 국제결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서울시 구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이름	등록건수	국제결혼건수	국제결혼비율
강남구	3,946	271	6.86771
강동구	3,015	404	13.3997
강북구	2,310	396	17.1429
강서구	3,781	375	9.91801
관악구	5,848	637	10.8926
광진구	2,730	297	10.8791
구로구	3,727	607	16.2866
금천구	1,796	363	20.2116
노원구	3,798	373	9.82096
도봉구	1,886	261	13.8388
동대문구	2,873	660	22.6244
동작구	2,983	345	11.5665
마포구	3,283	427	13.0064
서대문구	2,141	376	17.5619
서초구	3,393	212	6.24816
성동구	2,776	429	15.4539
성북구	3,119	479	15.3575
송파구	4,279	370	8.64688
양천구	2,683	283	10.5479
영등포구	4,011	709	17.6764
용산구	2,490	665	26.7068
은평구	3,000	407	13.5667
종로구	7,045	4,622	65.6068
중구	1,643	460	27.9976
중랑구	2,704	386	14.2751

□ 외국인 처의 국적분포 변화 추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한 건수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약 81%). 그 외 베트남과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외국인 남편의 경우, 2001년에는 일본(54%)과 미국(23%) 남편이 많았던 반면 2005년으로 올수록 중국(51%)이 가장 많고 일본(21%)과 미국(13%)이 뒤를 따름.

〈표 III-10〉 외국인 처의 국적분포 변화 추이

(단위: 명, %)

	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기타
2001	2,527 (100)	236 (9.3)	1,804 (71.4)	110 (4.4)	53 (2.1)	47 (1.9)	31 (1.2)	42 (1.7)	26 (1.0)	178 (7.0)
2002	2,649 (100)	231 (8.7)	1,731 (65.4)	108 (4.1)	115 (4.3)	85 (3.2)	57 (2.2)	76 (2.9)	65 (2.5)	181 (6.8)
2003	4,744 (100)	260 (5.5)	3,643 (76.8)	137 (2.9)	101 (2.1)	176 (3.7)	52 (1.1)	77 (1.6)	84 (1.8)	214 (4.5)
2004	6,565 (100)	221 (3.4)	5,356 (81.0)	129 (2.0)	125 (1.9)	279 (4.3)	49 (0.8)	73 (1.1)	112 (1.7)	221 (3.4)
2005	7,637 (100)	242 (3.2)	6,177 (80.9)	125 (1.6)	114 (1.5)	478 (6.3)	36 (0.5)	62 (0.8)	129 (1.7)	274 (3.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조사

□ 서울시 출산력의 변화와 전망

서울시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26에서 2001년 1.10으로 그 이후 약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2004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16).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구는 노원구로서 1.19를 나타낸 반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은 강남구로서 0.78임. 노원구의 비교적 낮은 부동산 및 전세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지역의 특성이 출산 즈음 연령대의 인구를 많이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강남구는 높은 집값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 젊은 연령대의 거주지로서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I-11〉 서울시 구별/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특별시	1.26	1.10	0.99	1.00	1.00
종로구	1.08	0.95	0.85	0.86	0.83
중구	1.20	1.08	1.00	0.90	0.98
용산구	1.21	1.08	0.91	0.92	0.96
성동구	1.33	1.18	1.08	1.09	1.05
광진구	1.31	1.10	1.00	1.02	0.97
동대문구	1.16	1.03	0.97	0.91	0.94
중랑구	1.21	1.03	0.98	0.93	1.00
성북구	1.17	1.03	0.89	0.99	1.01
강북구	1.06	0.98	0.91	0.98	0.91
도봉구	1.34	1.16	1.05	1.05	1.07
노원구	1.51	1.34	1.17	1.20	1.19
은평구	1.24	1.06	1.00	1.06	1.03
서대문구	1.19	1.07	1.00	0.99	0.98
마포구	1.22	1.06	0.97	0.92	1.01
양천구	1.24	1.13	1.05	1.04	1.01
강서구	1.39	1.17	1.07	1.09	1.08
구로구	1.19	1.25	1.13	1.12	1.14
금천구	0.74	1.11	0.98	1.01	1.05
영등포구	1.35	1.18	1.07	1.09	1.09
동작구	1.31	1.14	0.99	0.99	1.05
관악구	1.68	1.07	0.97	0.98	0.97
서초구	1.08	0.94	0.88	0.87	0.90
강남구	1.21	0.91	0.79	0.81	0.78
송파구	1.43	1.12	1.02	1.02	0.98
강동구	1.38	1.13	1.05	0.71	1.03

□ 서울시 출산력의 변화와 전망

1980년에는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1990년에는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2000년에 중고등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출산이 높았다가 2003년에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은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남. 서울의 최근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여성들의 출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I-12〉 교육수준별 연도별 연령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서울)

(per 1,000)

	ASFR					
	1980			1990		
	초등	중,고등	초대학	초등	중,고등	초대학
15 - 19	25.1	5.8	1.8	31.2	2.7	0.4
20 - 24	191.9	98.0	32.5	135.9	79.8	23.9
25 - 29	274.3	208.9	225.4	109.9	161.1	188.6
30 - 34	106.1	94.9	98.5	26.9	50.4	91.8
35 - 39	34.3	28.7	23.2	5.0	8.8	14.8
40 - 44	11.2	8.1	5.1	0.9	1.3	1.7
45 - 49	4.6	3.1	2.1	0.2	0.3	0.2
TFR	3.2	2.2	1.9	1.6	1.5	1.6

	ASFR					
	2000			2003		
	초등	중,고등	초대학	초등	중,고등	초대학
15 - 19	25.8	1.5	0.2	8.1	0.7	0.2
20 - 24	73.5	51.1	9.5	31.5	25.6	6.8
25 - 29	77.1	154.5	108.3	38.0	72.0	84.1
30 - 34	48.1	68.9	111.6	24.7	68.9	129.4
35 - 39	13.3	16.9	25.2	6.3	14.0	28.3
40 - 44	2.0	2.2	3.6	1.5	2.0	4.6
45 - 49	0.1	0.1	0.2	0.1	0.2	0.4
TFR	1.2	1.5	1.3	0.6	0.9	1.3

2. 서울시 가족 생활시간 조사

2.1. 생활시간 조사 자료 및 응답자의 특성

□ 국민생활시간조사 개요와 분석단위

-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제공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주민의 가족유형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분포를 분석하였음.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약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32,000명의 생활시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있으며, 여기서는 2004년 자료 중 서울시 거주자 총 8072명에 대

한 자료와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음. 가구주와의 관계를 질문한 항목의 응답에 기초하여 가구주와 가구주의 부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의 경우 남성 2392명과 여성 2752명, 총 514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서울시 주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56세이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434명(8.4%), 기혼이 4308명(83.8%),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이 402명(7.8%)을 차지하였음.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가 11.6%, 중졸 이하가 12.6%, 고졸 이하가 38.8%, 대졸이하가 30.4%, 대학원 이상이 4.7%, 그리고 현재 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2%임.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2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함.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고, 100만원 미만이 16.40%, 100만원 이상 200만원이 25.5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2.8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5.40%, 400만원 이상이 3.81%를 차지함

□ 생활시간의 분류와 평균 계산

- 생활시간은 통계청에서 분류한 대분류 행동코드 즉 (1) 개인유지, (2) 일, (3) 학습, (4) 가정관리, (5) 가족 보살피기, (6) 참여 및 봉사활동, (7) 교제 및 여가활동, (8) 이동, (9) 기타의 행동코드 별로 분석하였음. 개인유지에는 주로 수면, 식사, 개인위생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고, 일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주업, 부업, 구직활동이 포함된다. 학습에는 수업, 학교행사, 강습 등이 포함되고, 가정관리에는 식사준비, 청소, 세탁, 정리, 시장보기 등이 포함되고, 가족 보살피기에는 미취학 아이 보기, 가족구성원 간호, 가사활동 돕기 등이 포함됨. 참여 및 봉사활동에는 의무적 활동이나 자원봉사가 포함되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취미관련 강습, 일반인의 강습, 신무, TV, 종교활동, 스포츠, 문화관람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됨. 이동에는 출퇴근 관련, 그리고 나머지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이동한 시간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을 포함하는 행위자 평균 대신 전체 평균을 계산하였고, 응답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평일, 주말, 요일평균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음.

〈표 III-1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20대	516 (10.3)
	30대	1,352 (26.28)
	40대	1,532 (29.78)
	50대	904 (17.57)
	60대	522 (10.15)
	70대 이상	190 (3.69)
성별	여성	2,752 (53.50)
	남성	2,392 (46.50)
교육수준	초졸 이하	598 (11.63)
	중졸 이하	648 (12.60)
	고졸 이하	1,994 (38.76)
	대졸 이하	1,564 (30.40)
	대학원 이상	240 (4.67)
	학생	100 (1.94)
결혼상태	미혼	434 (8.44)
	기혼유배우	4,308 (83.75)
	사별 혹은 이혼	402 (7.81)
미취학아동 여부	있음	1,082 (21.03)
	없음	4,062 (78.9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098 (60.23)
	가구주의 배우자	2,046 (39.77)
월평균소득	없음	1,848 (35.93)
	100만원 미만	844 (16.40)
	100~200만원 미만	1,316 (25.58)
	200~300만원 미만	662 (12.87)
	300~400만원 미만	278 (5.40)
	400만원 이상	196 (3.81)
총		5,144

2.2. 서울시 주민의 가구 특성별 생활시간 사용 분포

1) 전체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요일평균을 보면 남성들은 개인유지를 위하여 하루에 10시간 39분을 사용하였으며, 일에 5시간 13분을 사용하였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평균 5시간 11분을 사용.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

은 하루 약 26분이었으며,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은 약 13분임. 주말에는 개인유지에 사용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많아지고 대신 일에 사용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적어짐. 대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약 2시간 증가하고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에 사용되는 시간도 약간 증가함.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여성들의 경우에는 요일평균 개인유지에 10시간 29분을 사용하고, 일에는 2시간 42분을 사용함. 매일 평균적으로 가정관리에는 3시간 8분, 가족보살피기에는 약 56분을 사용함.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4시간 52분을 사용하였음. 주말에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42분 증가하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약 52분 증가한 반면 일에 사용된 시간은 1시간 38분 감소. 가정관리에 사용된 시간은 약간 증가한 반면 가족보살피기에 사용된 시간은 약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

〈표 III-14〉 전체인구의 생활시간 사용 분포

	남성			여성		
	요일평균	평일	주말	요일평균	평일	주말
개인유지	10:39	10:16	11:13	10:29	10:13	10:55
일	5:13	6:28	3:23	2:42	3:20	1:42
학습	0:02	0:02	0:00	0:02	0:02	0:01
가정관리	0:26	0:21	0:33	3:08	3:04	3:14
가족보살피기	0:13	0:08	0:19	0:56	0:59	0:52
참여 및 봉사활동	0:02	0:02	0:01	0:02	0:02	0:02
교제 및 여가활동	5:11	4:25	6:19	4:52	4:32	5:24
이동	2:08	2:11	2:05	1:38	1:37	1:39
기타	0:06	0:06	0:07	0:11	0:11	0:11
N	2392	1419	973	2752	1684	1068

2)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개인유지활동을 위해 매일 평균적으로 10시간 37분을 사용하였고, 일에는 5시간 56분을 사용하였음. 교제 및 여가활동에 약 4시간, 이동을 위해서는 매일 2

시간 20분을 사용하였음. 가족 내에서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19분,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은 37분으로 총 56분을 가정 내에서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평일에는 일에 7시간 50분을 사용한 반면 주말에는 3시간 8분을 사용하였음. 일하는 시간이 감소한 대신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이 1시간 28분이 더 많았고,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된 시간도 50분이 더 많았음. 교제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은 주말이 평일보다 약 2시간 30분이 더 많았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평균적으로 개인유지를 위하여 10시간 26분을 사용하였고, 일에는 1시간 37분을 사용하였음. 가정관리에는 3시간 19분, 가족보살피기에는 약 3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약 3시간 55분을 사용하였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평일보다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약 1시간이 더 많았고, 교제와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도 약 42분이 더 많음. 반면 가정관리에 사용되는 시간은 13분, 가족보살피기에 사용된 시간은 22분이 더 적어서 여성들이 주말에 가정 내에서 사용한 시간은 평일보다 약 35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가구의 특성

-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대체로 성별에 따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성들은 가정 외부의 일에 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가정 내부의 일에 주로 시간을 사용함.
-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남성들이 전체가구의 남성 평균에 비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일 44분 더 많았고,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매일 25분 더 많았음. 반면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1시간 8분이 더 적음. 여성들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여성들은 전체 가구의 여성 평균에 비해 일에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더 적은 반면,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많았고,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도 1시간 더 적게 나타남. 즉, 미취학자녀가 있는 연령층이 낮은 가구의 남성들은 평균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성들은 평균보다 일을 더 적게 함.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돌보기에 사용되는 시간 때문에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표 III-15〉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의 생활시간 사용분포

	남성			여성		
	요일평균	평일	주말	요일평균	평일	주말
개인유지	10:37	10:02	11:29	10:26	10:03	11:01
일	5:56	7:50	3:08	1:37	2:08	0:50
학습	0:02	0:03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0:19	0:11	0:30	3:19	3:23	3:11
가족보살피기	0:37	0:25	0:56	3:04	3:13	2:50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00	0:00	0:02	0:01	0:02
교제 및 여가활동	4:03	3:02	5:32	3:55	3:38	4:20
이동	2:20	2:22	2:18	1:28	1:24	1:34
기타	0:05	0:05	0:07	0:11	0:11	0:10
N	526	313	213	556	333	223

3) 맞벌이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매일 평균적으로 개인유지를 위하여 10시간 30분을 사용하였고, 일을 위해서는 6시간 16분을 사용함.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서 4시간 21분을 사용하였고, 이동을 위해 2시간 16분을 매일 사용함.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은 하루에 31분이었음. 일하는 시간이 평일 7시간 41분에서 주말 4시간 7분으로 약 3시간 34분 적고,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주말에 1시간 10분이 더 많고, 교제나 여가를 위한 시간도 2시간 13분이 더 많음. 남성들이 평일에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14분,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7분으로 총 20여분에 불과하였음. 주말에는 약 44분을 가족 내에서 가정관리나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데 사용하였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맞벌이 가구의 여성들은 개인유지 활동에 10시간 16분을 사용하였고, 일과 관련된 활동에 4시간 55분을 사용함. 매일 평균적으로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 41분이며,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45분, 교제 및 여가활동에 쓰는 시간은 3시간 32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매일 1시간 40분임. 주말에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약 3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 개인유지에 사용된 시간이 1시간 많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된 시간도 1시간 33분이 더 많았음.

주말에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평일보다 44분이 더 많고 가족돌보기에 사용한 시간은 거의 비슷함. 평균적으로 보면, 맞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일에 사용한 시간이 더 적고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특징

-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여성들은 모두 전체 가구의 남성과 여성들보다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고,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더 적었음. 맞벌이 가구의 남성들은 전체가구의 남성들보다 매일 평균적으로 1시간 더 일을 하였고, 교제와 여가활동은 50분 덜 사용하였음.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에 사용되는 시간은 매일 8분 정도 적었음.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은 전체 가구의 여성들에 비해 매일 평균적으로 2시간 13분 더 일을 하였고, 여가나 교제를 위해서는 1시간 20분을, 가정관리나 가족 돌보기에 대해서는 매일 평균적으로 39분을 덜 사용하였음.

〈표 III-16〉 맞벌이가구의 성별 시간사용 분포

	남성			여성		
	요일평균	평일	주말	요일평균	평일	주말
개인유지	10:30	10:01	11:10	10:16	9:52	10:52
일	6:16	7:41	4:07	4:55	6:09	3:03
학습	0:00	0:00	0:00	0:01	0:01	0:00
가정관리	0:19	0:14	0:27	2:41	2:28	3:01
가족보살피기	0:11	0:07	0:17	0:45	0:46	0:43
참여 및 봉사활동	0:02	0:02	0:01	0:01	0:01	0:01
교제 및 여가활동	4:21	3:28	5:41	3:32	2:55	4:28
이동	2:16	2:18	2:12	1:40	1:39	1:42
기타	0:05	0:05	0:05	0:10	0:10	0:10
N	830	498	498	830	332	332

4) 노인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남성의 경우, 개인유지에 사용한 시간은 매일 평균적으로 10시간 55분이었으며, 일에 사용한 시간은 약 3시간이었음.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43분,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은 10분 정도로 가정 내에서 가사와 돌봄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총 53분임.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7시간 20분이었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여성노인의 경우, 매일 평균적으로 수면, 식사 등의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10시간 50분,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2시간이며,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14분 정도임.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매일 6시간 35분 정도임.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일과 주말 동안 사용하는 시간의 사용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개인유지와 일,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약간 많고,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22분 정도 더 적었음.

□ 노인가구의 특징

- 노인가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많은 것임. 남성들은 전체 남성들의 평균에 비교해서 매일 평균 2시간 8분이 더 많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사용되는 시간은 2시간 이상 적고, 가정관리 및 가족원 돌보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매일 14분이 더 많았음. 노인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에 비해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일 22분 더 많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38분이 더 많고, 가정관리 및 가족원 돌보기에 사용한 시간은 1시간 45분이 더 적었음.

〈표 III-17〉 노인가구의 성별 시간사용 분포

	남성			여성		
	요일평균	평일	주말	요일평균	평일	주말
개인유지	10:55	10:51	11:02	10:50	10:50	10:57
일	3:05	3:23	2:34	2:30	1:39	1:10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0:43	0:43	0:44	2:05	3:25	3:03
가족보살피기	0:10	0:07	0:14	0:14	0:22	0:21
참여 및 봉사활동	0:01	0:02	0:01	0:04	0:05	0:00
교제 및 여가활동	7:20	7:10	7:38	6:35	6:02	6:47
이동	1:37	1:35	1:40	1:31	1:26	1:30
기타	0:08	0:09	0:07	0:10	0:11	0:12
N	324	207	117	338	216	122

2.3. 전국 가구와의 생활시간 사용 비교

1) 전체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 남성들의 시간사용과 전국남성들의 시간사용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 남성들의 경우 평일에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약 19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19분이 이 더 많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18분이 더 적었음. 반면, 주말에는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약 10분, 교제 및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3분이 더 많고,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6분이 더 적었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평일에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21분,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9분 더 적은 반면,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5분, 교제 및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4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13분이 더 많았음. 주말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어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은 가족보살피기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2)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 남성은 평일동안에는 매일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24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19분 더 많은 반면, 교제와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34분,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5분, 가정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3분 더 적었음. 주말에는 전국평균에 비해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20분,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11분, 여가시간이 5분 더 많은 반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40분이 더 적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 여성들은 전국평균보다 평일동안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5분, 가족보살피기에 9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9분 더 많은 반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10분,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5분 더 적었음.

3) 맞벌이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맞벌이를 하는 서울시 남성들은 평일에 전국평균보다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19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20분이 더 많았고,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26분,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6분이 더 적었음. 주말에는 개인유지 시간이 13분, 여가시간이 6분이 더 많은 반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20분 더 적었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여성은 평일동안 일하는 시간이 13분,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11분,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7분 더 많은 반면, 여가시간은 10분, 가정관리 시간은 12분 더 적었음. 주말에는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12분,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41분, 여가시간이 21분이 더 많은 반면, 일하는 시간은 25분, 가정관리 14분이 더 적었음.

4) 노인 가구

□ 남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 남성 노인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개인유지에 9분, 평일에 일하는 시간은 3분, 가사나 가족원 돌보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4분이 더 적은 반면, 교제와 여가 시간은 22분이 더 많았음. 주말에도 일하는 시간은 20분은 더 적은 반면, 교제와 여가 시간은 15분이 더 많았음.

□ 여성들의 시간사용 분포

- 서울시의 여성 노인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평일에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46분이 더 적은 반면, 가정관리에 10분, 가족 보살피기에 7분,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33분 더 많았음. 주말에는 개인유지에 18분, 가족돌보기에 7분, 여가에 사용되는 시간이 44분 더 많고,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51분,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10분이 더 적었음.

3.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결과

3.1.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기혼(이혼/사별/별거 포함) 남녀 2500명을 성, 연령, 지역별 기혼자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2006년 8월 3일에서 8월 21일 사이에 면접조사 하였음. 서울시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사 항목이 있는 경우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가족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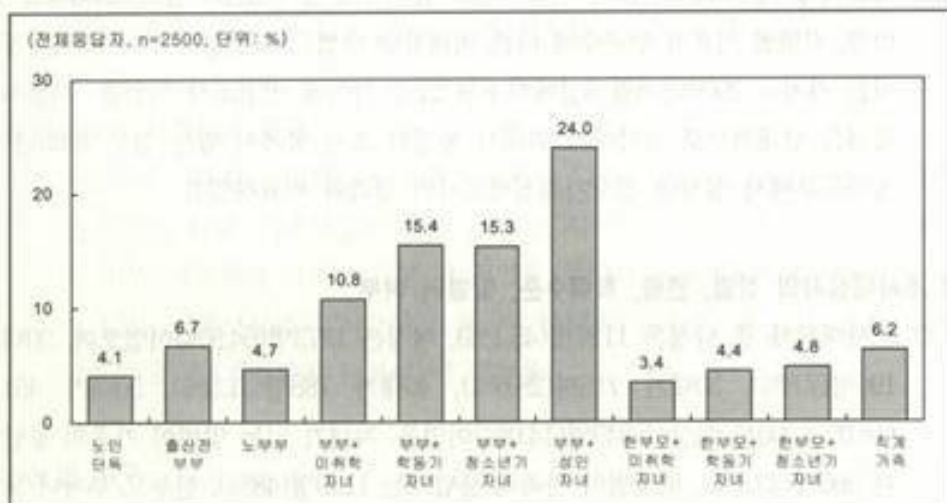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맞벌이 여부

-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127명(45.1%), 여성은 1373명(54.9%)이었으며, 20대가 196명(7.8%), 30대가 716명(28.6%), 40대가 788명(31.5%), 50대가 451명(18.0%), 60세 이상이 349명(14.0%)이었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응답자는 596명(23.8%), 비맞벌이 가족의 응답자는 1199명(48%), 한부모/무자녀/노인 가구의 응답자가 705명(28.2%)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학력은 '중졸 이하' 9.4%, '고졸 이하' 41.8%, '전문대졸 이하' 8.3%, '대졸/대재' 37.7%, '대학원졸/대학원재' 2.2% 등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이 각각 절반 정도씩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구유형

- 1인 가구인 '노인단독' 가족이 4.1%, 1세대 가구인 부부가족 가구 중 '출산전 부부' 가족이 6.7%, '노부부' 가족이 4.7%였음. 가장 구성비율이 높았던 가구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이며, 이 중 '부부+미취학 자녀' 가족이 10.8%, '부부+학동기 자녀' 15.4%, '부부+청소년기 자녀' 15.3%, '부부+성인 자녀' 24.0%로 총 65.6%를 차지하고 있음. '한부모+자녀' 가족은 '한부모+미취학 자녀' 가족이 3.4%, '한부모+학동기 자녀' 4.4%, '한부모+청소년기 자녀' 4.8% 등으로 총 12.7%를 차지하였음. 또한 '노인+기혼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직계가족'의 구성비는 6.2%였음(자녀의 경우 첫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음). 서울시 가족형태 구성을 전국과 비교해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족이 4.1%로 전

국(11.3%)보다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남. 노부부 가족 역시 4.7%로 전국(11.5%)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남. 반면 부부+자녀(65.6%), 한부모+자녀(12.7%)는 각각 전국(45.7%, 6.8%)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서울시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가족형태별 표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조사대상자의 직업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의 직업은 '자영업'이 3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22.4%, '판매/서비스직' 9.5%, '기능직/ 단순 노무직' 8.1%, '기술직' 8.0%, '경영/관리/전문/자유직' 7.4% 등의 순이었음.

□ 가구유형에 따른 건강수준

- 평소 자신의 건강이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는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13.5%('매우 나쁘다' 2.2%+'약간 나쁘다' 11.2%)였고, '보통이다'는 36.6%,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48.8%('약간 좋다' 36.8%+'매우 좋다' 11.9%)로, 5점 척도로 환산된 평균은 3.46점이었음. 가족형태별로는 노인단독 가구의 건강평가 점수가 2.49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노부부가족 3.02점, 한부모+자녀-청소년기자녀 가족 3.13점, 직계가족 3.28점, 부부+자녀-성인자녀 3.41점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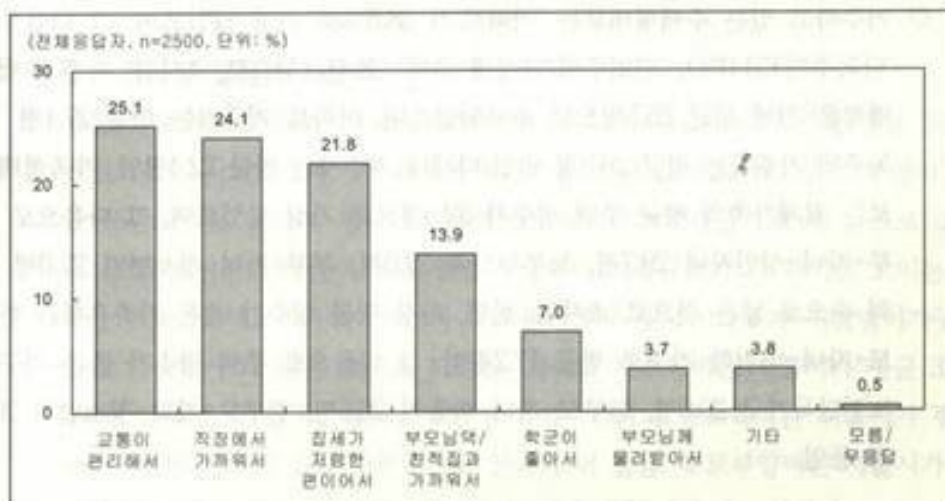
3.2. 거주지역 실태 및 만족도

□ 거주기간

-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22.5%), '5년 이상~10년 미만'(22.2%), '10년 이상~20년 미만'(22.6%) 등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4.4%, '1년 이상~3년 미만'은 14.0%, '1년 미만'은 4.3%로 조사됨.

□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 현 거주지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서'(25.1%)와 '직장에서 가까워서'(24.1%)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세가 저렴한 편이어서' 21.8%, '부모님댁/친척집과 가까워서' 13.9%, '학군이 좋아서' 7.0% 등의 순으로 조사됨.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직장에서 가까워서'의 비율이 27.0%로 맞벌이 가구 23.2%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음. 가족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집세가 저렴한 편이어서'의 응답률이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으며, 부부가족-출산전과 부부+자녀-미취학의 경우 '직장에서 가까워서'의 응답률이 각각 30.4%와 32.5%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부부+자녀-청소년기의 경우는 '학군이 좋아서'의 응답률이 1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자녀-미취학의 경우는 '부모님댁이나 친척집과 가까워서'의 응답률이 32.6%로 매우 높았음.



□ 현재 거주지 평가

-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먼저 '우리 가족이 사는 동네는 안전한 편이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3.59점, '스쿨존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3.35점, '공원/운동장/놀이터가 많은 편이다' 3.42점 등이었으며, '우리 동네에 만족한다' 항목은 만족도 점수가 3.51점으로 조사됨.

3.3. 생활수준과 소득계층

□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

-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중'을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50.8%였으며, '최하'(8.5%)와 '하'(30.8%) 등 중간 이하를 답한 경우는 39.3%임. 한편 중간 이상인 '최상'과 '상'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0.4%와 8.6%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는 부부+자녀-성인자녀의 경우가 2.79점으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족-출산전(2.78점), 직계가족(2.76점), 부부+자녀-청소년기(2.74점) 순임. 반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경우는 한부모+자녀-미취학(1.95점) 가족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가족형태는 한부모+자녀-청소년기(2.03점), 단독가구-노인단독(2.08점), 한부모+자녀-학동기(2.13점) 등임.

□ 주택형태 및 면적

-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로는 '아파트'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31.0%),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28.4% 등으로 조사됨. 거주 주택의 평형은 전체 평균 25.5평으로 조사되었으며, 아파트 거주자는 평균 27.1평, 단독주택 거주자는 평균 26.3평 연립/다세대 거주자는 평균 22.4평임. 가족형태별로는 직계가족의 평균 주택 평수가 32.5평으로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자녀-성인자녀 29.7평, 노부부가족 27.5평, 부부+자녀-청소년기 27.0평 등의 순으로 넓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가장 평균 평수가 좁은 가족유형은 한부모+자녀-미취학 가구로 평균 17.2평임. 그 다음으로 주택 평수가 좁은 가구는 노인단독가구 20.0평, 한부모+자녀-학동기 20.5평, 한부모+자녀-청소년기 20.8평 등임.

□ 월평균 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과 '300~399만원'이 각각 26.8%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원' 14.7%, '100~199만원' 12.6%, '500~599만원' 8.2% 등으로 조사됨.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을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 89.3%, 노부부가족 72.7%, 한부모+자녀-미취학 53.5%, 한부모+자녀-학동기 40.0%, 한부모+자녀-청소년기 47.1% 등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전국 응답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100~199만원이 24.7%, 200~299만원이 22.4%, 300~399만원이 11.3%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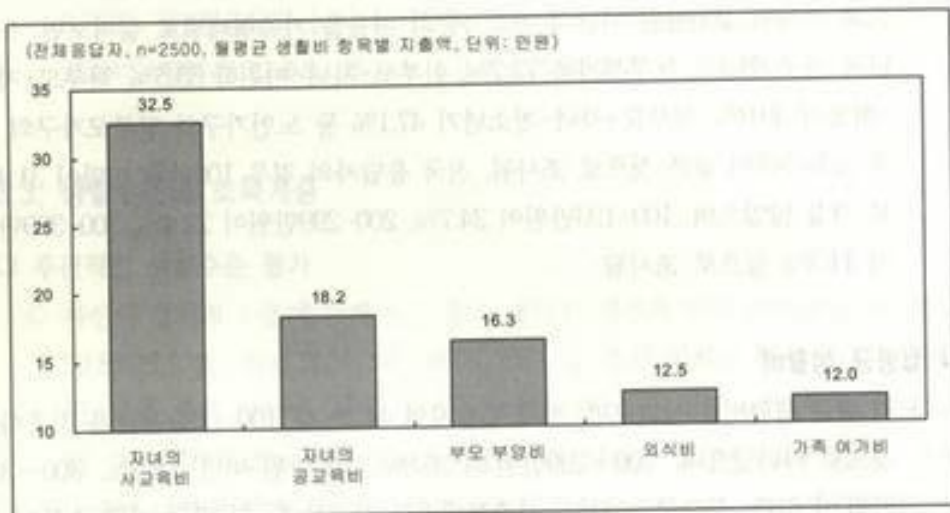
□ 월평균 생활비

- 월 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4.3%가 '100~19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99만원'이 26.8%, '100만원 미만' 18.4%, '300~399만원'이 6.4% 등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적었던 노인단독가구, 노부부가족 등은 '10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자녀의 나이가 미취학,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 등으로 갈수록 생활비 지출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월 평균 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부+자녀가 한부모+자녀 가족 보다 생활비 지출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 전국 응답자의 58.4%가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33.8%가 100~199만원을 13.3%가 200~299만원을 3.1%가 300~399만원이 2.6% 등으로 조사됨.

□ 생활비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 생활비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자녀의 사교육비'가 전체 평균 32만5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의 공교육비'는 평균 18만2천원, '부모 부양비' 평균 16만3천원, '외식비' 평균 12만5천원, '가족여가비' 평균 12만원 등으로 조사됨. 맞벌이 여부에 따른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자녀의 사교육비'와 '자녀의 공교육비'로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사교육비는 서울시가 평균 32만5천원, 전국은 31만5천원으로 비슷한 수준. 자녀의 공교육비는 서울시가 평균 18만2천원, 전국은 25만9천원으로 전국이 더 높음. 부모부양비는 서울시가 평균 16만3천원, 전국은 13만8천원으로 서울시가 더 높음. 외식비는 서울시가

평균 12만 5천원, 전국은 7만 3천원으로 서울시가 더 높음. 가족여가비는 서울시가 평균 12만원, 전국은 5만 9천원으로 서울시가 더 높음.



□ 금융관련 월평균 지출액

-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저축액' 규모는 평균 50만9천원이며, '각종 연금 및 보험료'는 평균 32만3천원, '부채상환액'은 평균 14만7천원임.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저축액'은 출산전 부부가족이 평균 86만5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부부+자녀-성인자녀 가족이 67만2천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부채상환액'은 부부+자녀-학동기(22만6천원), 부부+자녀-청소년기(19만4천원), 직계가족(18만7천원)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연금 및 보험'은 부부+자녀 가족 유형과, 부부가족-출산전, 직계가족 등에서 높았음.

3.4. 출산(45세 미만 응답자들만 조사)

□ 이상적인 자녀 수 및 향후 출산 계획

-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이 61.0%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1명' 17.8%, '3명' 14.0%, '4명 이상' 3.9% 등이었으며, '무자녀'에 대한 응답률은 2.7%로 조사됨.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무자녀'와 '1명'의 응답률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2명'과 '3명'의 응답률이 높았음. 만45세 미

만 응답자의 향후 출산계획은 '있다'가 19.6%였으며, 79.9%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양육/교육비가 부담되어서'가 38.6%로 가장 응답을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미 낳은 자녀수로 충분해서' 29.4%, '나이가 많아서' 13.5%,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므로' 9.8% 등의 순으로 조사됨. 부부+자녀 가족 유형에서는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한부모+자녀 가족 유형에서는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므로'가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로 조사됨.

〈표 III-18〉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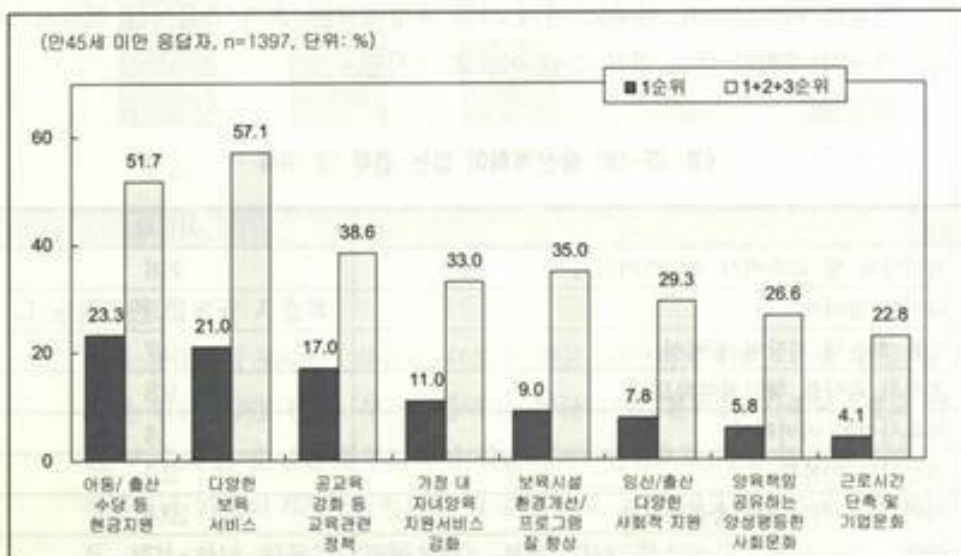
	서울시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38.6
나이가 많아서	13.5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3.7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하므로	9.8
보육시설이 미비해서	.4
건강상의 이유로	2.0
이미 낳은 자녀수로 충분하므로	29.4
기타	.7

□ 향후 출산지원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시 출산계획

- 향후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출산계획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25.6%였으며, '없다'는 72.5%로 조사됨.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자녀수를 물어본 결과는 '1명'이 63.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2명' 30.5%, '3명 이상' 3.1% 등으로 평균 1.4명으로 조사됨.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비맞벌이가구의 '그렇다' 응답률이 23.4%로 맞벌이가구 18.1% 보다 더 높았으며, 향후 희망하는 평균 출산 자녀수는 맞벌이가구가 1.3명으로 비맞벌이가구 1.2이었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 '아동/출산 수당 등 현금 지원'이 23.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21.0%, '공교육 강화 등 교육관련 정책' 17.0%, '가정 내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1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직장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25.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아동수당/출산수당 등 현금지원'의 응답률이 23.8%로 가장 높았음.



3.5. 가족가치관

□ 가족가치관

-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개인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도는 5점 척도 평균 4.03점이었으며, '어려운 일에는 이웃/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이 된다'는 3.58점, '부부관계보다는 부모 자녀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항목은 3.37점, '사회보다는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3.91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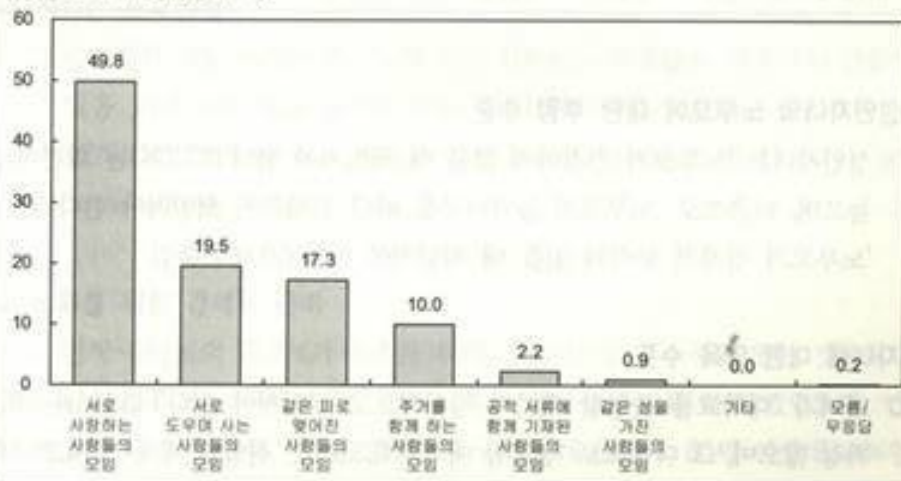
□ 가족환경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

- 가족환경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30.8%)가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이혼율의 증가'(21.5%), '출산율 감소'(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 반면, 20대에서는 '출산율 감소'(29.6%), 30대에서는 '이혼율의 증가'(24.2%)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고 있음.

□ '가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

- '가족'에 대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4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음. 다음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19.5%),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17.3%) 등의 순임. 성별로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조상을 같이 하는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남성(20.1%)이 여성(15.0%)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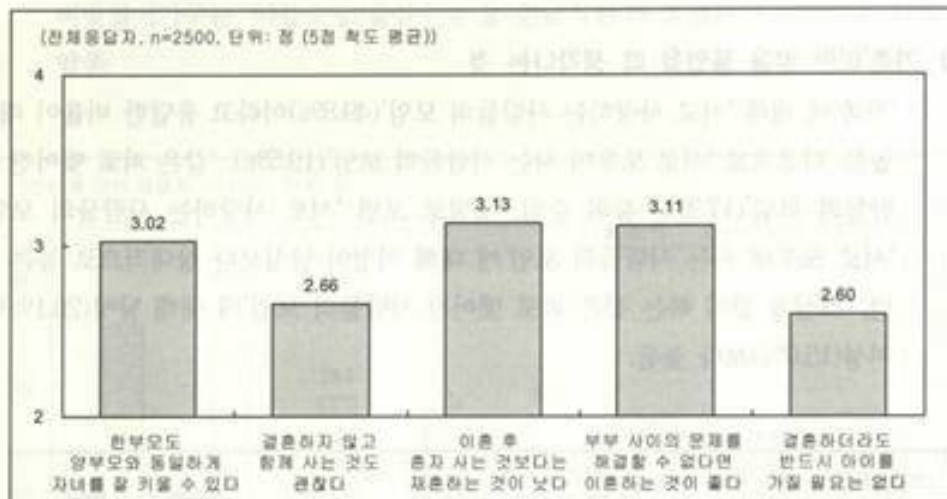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n=2500, 단위: %)



□ 결혼/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 결혼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

다' 항목은 평균 3.02점이었으며,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2.66점의 동의도를 보임.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것이 낫다'에 대해서는 3.13점,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항목은 3.11점의 동의도를 보임.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2.60점의 동의도를 보임.



□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담 수준

- 성인자녀는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27.2%)는 의견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책임져야 한다'(25.7%),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21.9%)순임.

□ 자녀에 대한 양육 수준

-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45.1%)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할 때까지'(23.9%), '취업할 때까지'(14.2%)의 순으로 조사됨. 부부+자녀의 가족형태에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를 양육시기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독립시킨 부부가족-노부부가족에서 양육수준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29.9%)보다 '결혼할 때까지'(39.3%)라고 응답하고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를 더 길게 보고 있음.

□ 노인부양의 가장 큰 책임

- 37.8%가 '아들 딸 모두'에게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노인자신'(22.0%), '정부나 사회'(17.8%), '능력있는 자녀'(12.3%)의 순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함. 단독가구-노인단독(12.6%)와 부부가족-노부부가족(15.4%)에서는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여전히 '장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전국은 '능력 있는 자녀(39.1%)'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 응답한 비율(6.4%)이 낮은 반면 전국은 그 비율이 2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

-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는 방법으로 31.8%가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들이 번갈아 돌본다'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병원, 요양시설에서 돌보게 한다'(28.1%)와 '자녀와 가까운 곳에 모시며 가족이나 간병인이 돌본다'(27.1%)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와 함께 살며 간병인이 돌본다'는 12.1%였음.

□ 원하는 노후생활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0.7%가 가장 원하는 노후생활로 '배우자와 단둘이'를 꼽았음. 다음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16.9%), '나혼자'(8.2%), '무료 노인복지시설'(6.4%), '형편이 되는 자식과 함께'(3.4%), '만아들과 함께'(2.4%) 등의 순으로 노후생활을 원하고 있었음.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 전체 응답자의 73.2%가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남성의 73.2%, 여성의 73.1%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 20대 67.9%, 30대 72.5%, 40대 77.5%, 50대 83.4%, 60세 이상 54.4%임. 맞벌이가구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의 응답률은 80.7%로 비맞벌이가구 77.2% 보다 더 높았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응답률은 서울시(73.2%)가 전국(52.5%)보다 높게 나타남.

(전체응답자, n=2500, 성·연령별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단위: %)



3.6. 가족부양

□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보육방법

-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의 보육방법(주된 보육방법+두번째 보육방법)을 살펴보면, '사설학원'이 70.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 44.7%, '개인교육' 23.0%, '자녀의 어머니' 20.0%,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4.1%, '자녀의 조부모' 3.8%, '자녀의 외조부모' 3.8%, '해당 자녀의 순위 형제/자매' 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월평균 이용 시간과 비용

- 주요보육방법별 주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친척에 의한 보육방법이 아닌 것 중에는 '보육/교육기관'이 약31시간으로 가장 평균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설학원' 약12시간, '방과 후 교실' 약 11시간, '개인교육' 약4시간 등으로 조사됨. 월평균 총 이용비용은 '사설학원'이 평균 25만4천원으로 가장 이용비용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의 조부모' 22만9천원, '보육/교육기관' 21만7천원, '자녀의 외조부모' 18만8천원, '방과후 교실' 16만원, '개인교육' 12만6천원 등으로 조사됨.

(주요 보육방법별 이용시간 및 이용 비용)

주평균 총 이용 시간(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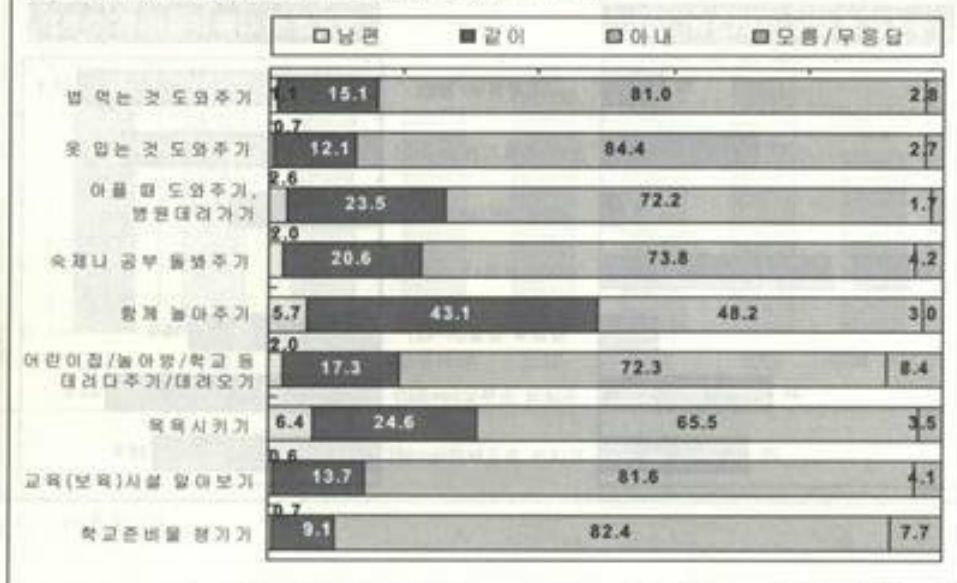
월평균 총 이용 비용(단위: 만원)



□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

- 부부간 어린 자녀 돌보기에 대한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함께 놀아주기'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함께 놀아주기'의 경우는 '아내가 한다'가 48.2%였으며, '부부가 함께'의 응답률이 43.1%를 차지함. 비교적 '부부가 함께'의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목욕시키기'(24.6%), '아플 때 도와주기, 병원대러가기'(23.5%),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20.5%) 등임. 맞벌이여부별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부부에 비해 '부부가 함께'의 응답률이 높고, '아내가 한다'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비맞벌이가구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아내가 한다'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응답자, n=809, 단위: %)



□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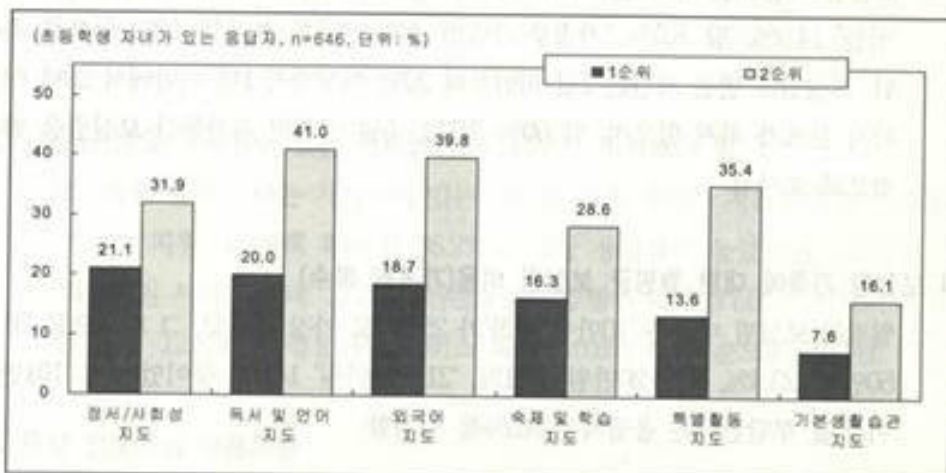
○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가 67.6%로 '충분히 있다' 20.4% 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불충분한 부분으로는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38.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보육시설' 25.6%,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19.9%,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2.8%,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2.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운영시설/프로그램의 필요성

○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후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9.3%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함. 한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로 조사됨. 방과후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2.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원이 많아서' 18.2%, '집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11.6%, '프로그램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9.9%, '질적 수준을 믿어 수 없어서' 9.9%, '특기적성 교육만으로 충분해서' 6.6% 등의 순임.

□ 선호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으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 '정서/사회성 지도'(21.1%), '독서 및 언어지도'(20.0%), '외국어 지도'(18.7%) 등이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숙제 및 학습지도'(16.3%), '특별활동 지도'(13.6%), '기본생활습관지도'(7.6%) 등의 순으로 조사됨.



3.7. 가족부양 : 돌봄노동(장애인, 노인)

□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족 유무

-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족원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임. 가족형태 별로는 직계가족이 1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부 가족 2.6%, 부부+자녀-청소년기 1.3%, 부부+자녀-성인자녀 1.3% 등임.⁴⁾

□ 보살핌 필요 가족원에 대한 일반사항

-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과의 관계는 '배우자의 어머니' 27.7%, '본인의 어머니' 23.4%, '배우자의 아버지' 14.9%, '본인의 아버지' 8.5% 등 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많았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이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각각 12.8%와 10.6%로 조사됨.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의 연령대는 80세 이상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0대 27.7%, 60대 23.4% 순임. 30세

미만과 30~59세 연령층은 각각 8.5%로 조사됨. 보살핌 필요 가족원의 불편사유는 '중풍/뇌졸중'이 27.7%였으며, '중풍/뇌졸중 이외의 질병' 14.9%, '내부기관 장애' 12.8%, '신체의 기능장애' 10.6%, '정신장애/발달장애' 8.5% 등으로 조사됨.

□ 주로 돌보는 사람과 돌본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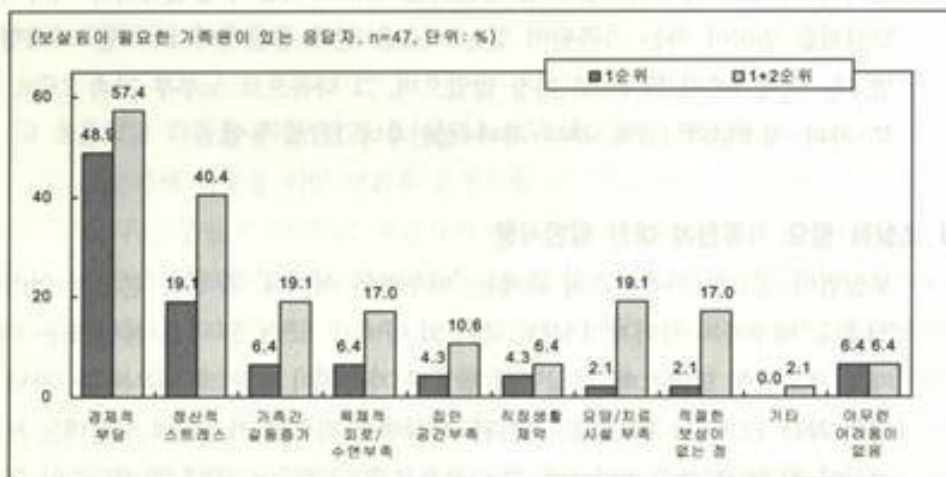
-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며느리' 31.9%, '배우자' 23.4%, '아들' 14.9%, '딸' 8.5%, '가정부/간병인' 4.3%, '다른 친인척' 4.3% 등으로 조사됨. 보살핌을 받은 기간은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1년 미만에서 20년 이상까지 분포가 퍼져 있으며, 약 60% 정도는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보살핌 가족에 대한 월평균 보살핌 비용(가족원 복수)

- 월평균 보살핌 비용은 '10만원 이하'가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1~50만원' 23.4%, '11~20만원' 19.1%, '21~30만원' 14.9% 등이었으며, '101만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응답자는 8.5%를 차지함.

□ 몸이 불편한 가족원을 보살피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몸이 불편한 가족원을 보살피는 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절반에 가까운 48.9%가 1순위로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19.1%, '가족간 갈등증가' 6.4%, '육체적 피로/수면부족' 6.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외부시설을 이용한 경험

-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외부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19.1%가 경험이 있었으며, 80.9%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외부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44.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 21.1%,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13.2%, '필요를 못 느껴서' 10.5%, '당사자가 싫어할까 봐' 5.3%, '가족/친척들의 반대로' 5.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보살핌 필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는 '경제적 지원 및 혜택 확대'가 36.2%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21.3%, '전문요양시설/병원 확대' 17.0%, '지역의 복지시설 확대' 12.8%, '가정봉사원 서비스 확대' 10.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요양 전문시설 이용의향

-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계실 경우 요양 전문시설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57.3%였으며, 34.7%는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요양전문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요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31~50만원' 43.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만원 이하' 27.6%, '51~80만원' 21.6%였으며, 81만원 이상을 응답한 경우 7.1%에 불과했음.

□ 주간보호시설 이용의향

- 낮 동안만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0%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는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연령별 주간보호시설 이용 의향율을 살펴보면, 20대 70.4%, 30대 64.0%, 40대 65.2%, 50대 59.4%, 60세 이상 49.6% 등으로 요양전문시설 이용 의향율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용 의향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주간보호시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역시 요양전문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44.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비용이 부담

되어' 21.6%, '시설의 질에 믿을 안가서' 11.2%, '어르신이 싫어할까봐' 9.6%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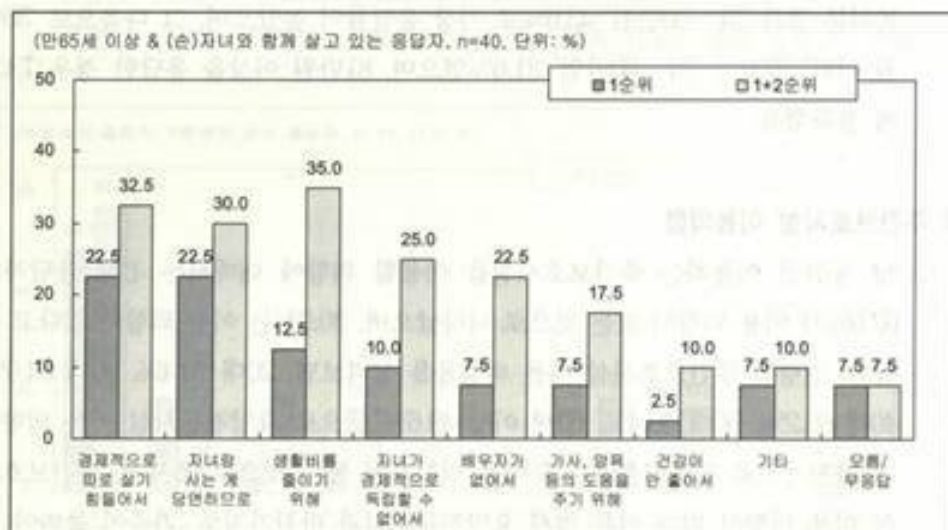
□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월평균 최대 지불의향 비용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 이용 요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0만원 이하'가 절반 이상인 55.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31~50만원'이 34.1%로 응답자의 약 90% 정도가 50만원 이하를 응답함.

3.8. 노인생활 실태(65세 응답자만 조사)

□ (손)자녀와의 동거여부와 함께 사는 이유

- (손)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6.5%였음.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1순위)로 '경제적으로 따로 살기 힘들어서'(22.5%)와 '자녀랑 사는 게 당연하므로'(22.5%)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12.5%),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서'(10.0%)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가 동거의 우선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임.



□ 함께 살지 않는 (손)자녀 중 가장 자주 왕래하는 사람

- 응답자의 37.9%가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 중 장남과 가장 자주 왕래하고 있으며, 장녀(21.4%), 차녀이하(8.6%), 차남이하(8.2%)순으로 자주 왕래하고 있었음. 자녀가 있으나 왕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장녀(24.1%)와, 여성(38.5%)은 '장남'과 상대적으로 더 자주 왕래하고 있었으며, '차녀이하'와 왕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5.6%)에 비해 여성(11.1%)이 매우 높음. 가족형태별로 노인단독가구(47.6%)에서 '장남'과, 직계가족(42.4%)에서 '장녀'와 자주 교류하고 있었음. 노인단독가구의 9.7%는 '자녀가 있으나 왕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함.

□ (손)자녀와의 왕래 정도

- 전체 응답자의 29.5%가 '한 달에 몇 번', 15.0%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손)자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14.5%), '일주일에 몇 번'(14.1%) 만나고 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는 응답은 8.6%, '일년에 한 번 이하'라는 응답은 5.9%임. 성별로 보면 '한 달에 몇 번'정도 왕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33.0%)이 여성(27.0%)보다 높음. '한 달에 몇 번' 이상을 만나고 있다는 응답 역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손)자녀와의 왕래는 남성이 더 잦은 것으로 보임. 가족형태별로 부부가족-노부부가족이 단독가구-노인단독가구보다 (손)자녀와의 왕래가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됨.

□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 - 집안일, 장보기, 식사준비

- 지난 1년간 '집안일, 장보기, 식사준비'를 함에 있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2%가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배우자'와 '며느리'를 도왔다는 응답은 각각 23.0%, 8.6%로 나타남. 또한 '집안일, 장보기, 식사준비'를 위해 '배우자'(23.5%)와 '며느리'(22.6%)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었음. 성별로 남성은 '배우자'(도움을 줌 39.8%, 도움받음 41.7%)와, 여성은 며느리(도움을 줌 12.6%, 도움받음 31.9%)와 '집안일, 장보기, 식사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로 주고받고 있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57.8%)이 남성(40.7%)보다 높게 나타남. 가족형태별로 '단독가구-노인단독'과 '직계가족'에서는 '며느리'(각각 25.2%, 57.6%)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었음. '단독가구-노인단독'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78.6%로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매우 높음.

□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 -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 들어주기

-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 들어주기'에 대해 주로 '배우자'(도움을 줌 24.3%, 도움받음 23.5%)와 '딸'(도움을 줌 12.8%, 도움받음 19.8%)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조사됨.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39.9%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배우자'(도움을 줌 41.7%, 도움받음 42.6%)와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줌'보다는 '도움받음'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여성은 '딸'(도움을 줌 17.0%, 도움받음 28.1%)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도움을 받기'(8.1%)보다 '도움을 주는 편'(10.4%)인 것으로 보임.

□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 - 용돈,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

-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9.9%)와 '아들'(9.9%)였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아들'(38.3%)로 나타남.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6.4%임. 성별로 남성은 '배우자'(17.6%)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아들'(33.3%)에게 도움을 받음. 여성은 '딸'(8.1%)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아들'(42.2%)에게 도움받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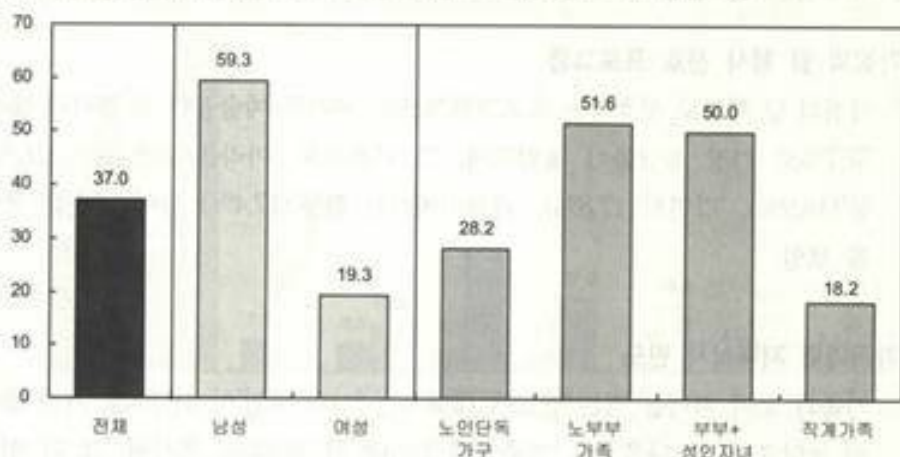
□ 건강관련 가장 어려운 점

-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치료비가 걱정된다'(34.6%)로 조사됨. 다음으로 '외로움을 느낀다'(28.8%), '일상생활이 불편하다'(18.1%),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5.3%)순임.

□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의 유무

-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37.0%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절반 이상인 59.3%가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9.3%만이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음. 가족형태별로 '부부가족-노부부가족'(51.6%)와 '부부+자녀-성인자녀'(50.0%)에서는 절반 정도가 소득이 되는 일이 있었음. '직계가족'에서는 18.2%만이 일이 있다고 응답함.

(만65세 이상 응답자, n=243, 성·가족유형별 소득이 되는 일이 '있음' 응답비율, 단위: %)



□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41.8%)와 '적당한 일을 못 찾아서'(31.4%)인 것으로 조사됨.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적당한 일을 못 찾아서'(43.2%)를, 여성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45.9%)를 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가족형태별로는 '단독가구-노인단독'(51.4%)과 '부부+자녀-성인지녀'(62.5%)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부가족-노부부가족'(38.6%)와 '직계가족'(37.0%)에서는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함. 특히 '직계가족'에서는 '자녀, 배우자가 못하게 해서'가 14.8%로 상대적으로 높음.

□ 노인부부/ 독거노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 노인부부/독거노인을 위해서 정부의 '금전적 지원'(26.7%)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취업지원'(22.6%), '노인 전문병원/요양시설 확대'(16.9%), '병간호 서비스 제공'(14.4%) 등의 순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취업지원'(31.5%)을, 여성은 '금전적 지원'(30.4%)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함.

3.9. 가족기능 및 생활

□ 가정의 달 행사 선호 프로그램

- 가정의 달 행사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콘서트/예술공연 등 볼거리 행사'가 37.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라톤/등반 등 스포츠 활동'(18.9%), '강연회'(17.8%), '레크리에이션 활동'(17.4%) 등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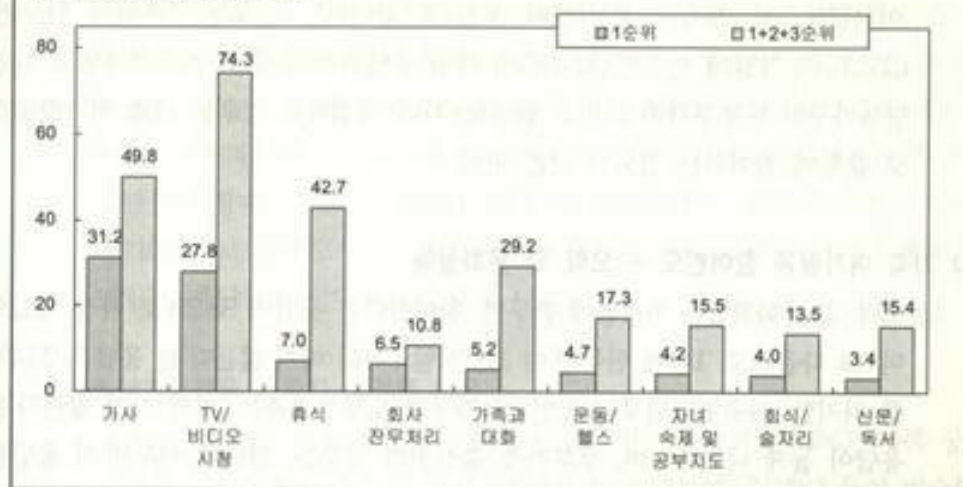
□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 가족과 모여 저녁을 먹는 빈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이 41.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2~3번'이 38.4%로 조사됨. 그 외 '한달에 3~4번'이 9.2%, '한달에 1~2번'이 5.7%였으며, '거의 없다'는 응답도 4.3%를 차지함. '거의 매일'의 응답률을 중심으로 가족형태별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를 살펴보면, 노부부가족이 '거의 매일'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계가족 53.5%, 부부+자녀-미취학 48.7%, 한부모+자녀-학동기 43.6%, 부부+자녀-청소년기 42.8%, 부부가족-출산전 41.1% 등의 순임.

□ 평일 저녁시간을 보내는 방법

- 평일 저녁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사'가 31.2%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TV/비디오 시청' 27.8%, '휴식' 7.0%, '회사 잔무처리' 6.5% 등의 순으로 조사됨. 여성의 경우는 1순위 응답으로 '가사'의 응답률이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TV/비디오 시청'이 34.4%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가사'의 응답률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TV/비디오 시청'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전체응답자, n=2500, 단위: %)



□ 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34.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분~1시간 정도' 27.8%, '1시간~2시간 정도' 19.7%, '30분 미만' 12.4% 등으로 조사됨. 한편, 4.7%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함. 가족형태별로는 노부부가족, 부부+자녀-미취학, 부부+자녀-학동기, 직계가족 등에서 '2시간 정도'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 가족 유형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됨.

□ 주말 가족 여가활동

- 주말 가족 여가활동으로는 1순위 응답으로 'TV시청/비디오'가 44.8%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활동' 18.8%, '스포츠활동' 7.5%, '쇼핑' 6.1%, '여행' 5.8%, '공원가기' 5.8%, '외식' 4.8%, '문화생활' 2.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족-출산전인 경우 '쇼핑'과 '여행가기'의 1순위 응답률이 각각 14.9%와 12.5%로 다른 가족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자녀-미취학, 부부+자녀-학동기의 경우는 '공원가기'의 비율이 각각 13.3%와 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노부부가족의 경우는 'TV시청/비디오'의 응답률이 64.1%로 매우 높았음.

□ 가족 여가활동 참여빈도 - 운동

- 여가활동으로 가족과 운동(산책 포함)에 참여하는 빈도는 '1주일에 한두번' (35.2%)과 '1달에 한두번' (31.4%)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가족형태별로 노인 단독가구와 노부부가족 그리고 한부모+자녀-미취학의 경우는 가족 여가활동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편임.

□ 가족 여가활동 참여빈도 - 오락 및 문화활동

- 오락 및 문화활동은 '6개월에 한두번' 참여한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달에 한두번'이 31.4%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를 차지함. 가족형태별로는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가족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족-출산전의 경우는 '한달에 한두번'의 응답률이 57.7%로 가장 참여빈도가 높았음. 전반적으로 부부+자녀 가족유형이 한부모+자녀 가족유형 보다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가족 여가활동 참여빈도 - 가족 나들이나 여행

- 가족 나들이나 여행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4%가 '6개월의 한두번'을 답했으며, '1달에 한두번'이 31.6%의 응답률을 보임. '거의 하지 않음'의 응답률은 12.7%임. 가족형태별로 '거의 하지 않음'의 응답률은 부부+자녀 가족유형의 경우 부부+가족-미취학 3.7%, 부부+자녀-학동기 3.9%, 부부+자녀-청소년기 8.1% 등 10% 미만인 반면, 한부모+자녀 가족유형의 경우는 한부모+자녀-미취학 30.2%, 한부모+자녀-학동기 16.4%, 한부모+자녀-청소년기 27.3% 등 부부+자녀 가족유형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가족 여가활동 참여빈도 - 가족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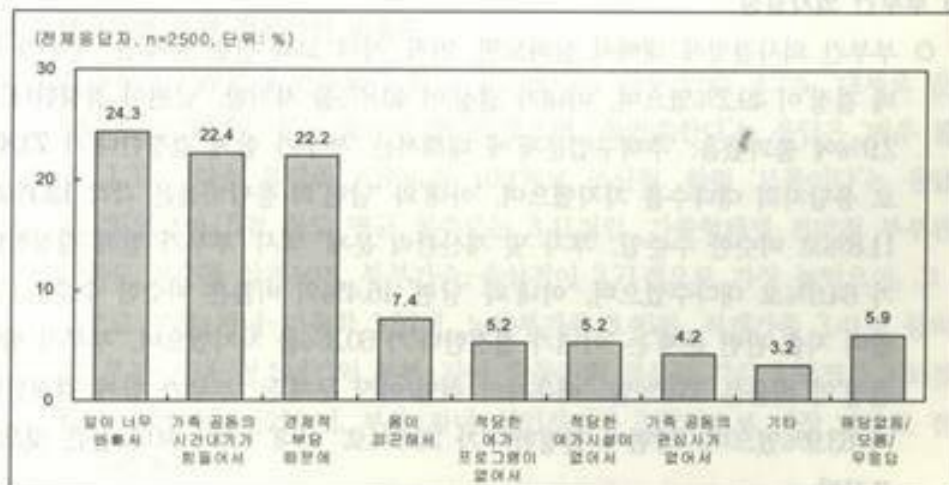
- 가족외식의 참여 정도는 '1달에 한두번'이 63.5%였으며, '6개월에 한두번'이 14.8%, '1주일에 한두번' 14.3%로 조사됨. 한편 '거의 하지 않음'의 응답률은 6.5%임.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족-출산전이 가장 가족외식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부+자녀-미취학, 부부+자녀-학동기, 한부모+자녀-학동기 등의 가족유형이 가족외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여가활동 참여빈도 - TV 혹은 비디오 보기

○ 가족여가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은 '거의 매일'이 52.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1주일에 한두번'이 36.3%, '1달에 한두번'이 6.2%의 응답률을 보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는 부부가족-출산전과 노부부가족의 경우 '거의 매일'(부부가족-출산전 69.0%, 노부부가족 69.2%)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한부모+자녀-미취학(34.9%) 한부모+자녀-학동기(43.6%), 한부모+자녀-청소년기(39.7%) 등 한부모+자녀 가족유형은 '거의 매일'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족여가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

○ 여가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일이 바빠서'(24.3%),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22.4%), '경제적 부담 때문에'(22.2%)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몸이 피곤해서' 7.4%,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5.2%, '적당한 여가시설이 없어서' 5.2%, '가족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4.2%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 부부가족-출산전, 부부+자녀-미취학, 한부모+자녀-학동기의 경우는 '일이 바빠서'가, 부부+자녀-성인자녀, 직계가족은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가, 노부부가족, 한부모+자녀-미취학, 한부모+자녀-청소년기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임.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더 적게 인식한 반면,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더 큰 가족여가의 장애로 보고 있음.



□ 향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44.0%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자녀 가족유형에서 50% 이상으로 높은 참여의향율을 보였으며, 노인단독가구, 노부부가족, 부부+자녀-성인자녀, 한부모+자녀-미취학, 한부모+자녀-청소년기 가족의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의향율이 낮은 수준임. 자원봉사 참여시 활동 희망 분야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등과 관련'이 36.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 등과 관련' 23.6%, '자녀 교육 관련' 22.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1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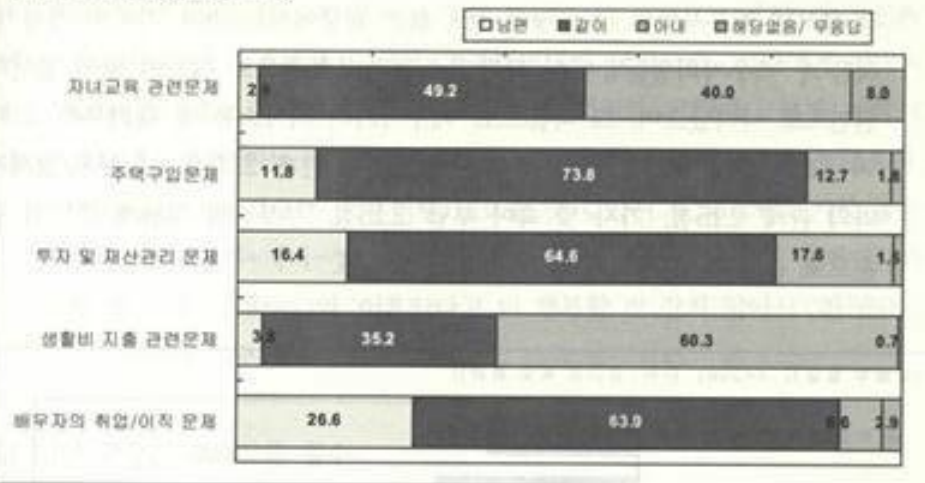
-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먼저 '동년배에 비해 삶의 질에 만족한다'에 대해서 5점 척도 평균으로 3.14점이었으며,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3.34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만족한다'는 3.25점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는 부부가족+출산전의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자녀 가족유형과 노인단독가구의 만족도 점수는 다소 낮은 편임.

3.10. 가족관계

□ 부부간 의사결정

- 부부간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자녀 교육 관련 문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이 49.2%였으며, '아내가 결정'이 40.8%를 차지함. '남편이 결정한다'는 2.9%에 불과했음. '주택구입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가 73.8%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아내'와 '남편'의 응답비율은 각각 12.7%와 11.8%로 비슷한 수준임. '투자 및 재산관리 문제' 역시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가 64.6%로 대다수였으며, '아내'와 '남편' 16.4%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생활비 지출 관련 문제'는 '아내가 결정한다'가 60.3%를 차지했으며, '부부가 함께 결정'의 비율은 35.2%임. '배우자의 취업/이직 문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가 63.9%였으며, '남편이 결정한다'가 26.6%로 '아내' 6.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배우 응답자, n=2081, 단위: %)



□ 배우자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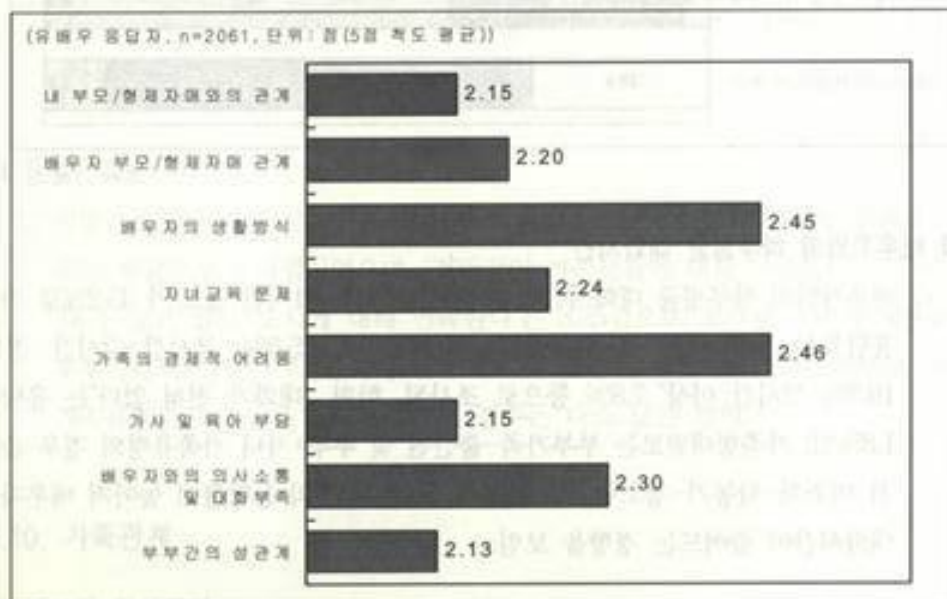
- 배우자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에 대해서는 '30분~1시간 정도'가 45.2%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분 미만' 25.0%, '1시간~2시간 정도' 19.3%, '2시간 이상' 7.8% 등으로 조사됨. 한편, '대화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임. 가족형태별로는 부부가족-출산전 및 부부+자녀 가족유형의 경우 출산 전-미취학-학동기-청소년기로 갈수록 '30분 미만'의 응답률이 높아져 배우자와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부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 4.2%, '대체로 만족' 44.2% 등 '만족한다'는 응답이 48.3%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매우 불만족' 1.3%, '다소 불만족' 8.8% 등 10.1%로 조사됨.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1.2%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41점임. 가족형태별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부부가족-출산전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자녀-미취학 3.57점, 노부부가족 3.46점, 직계가족 3.41점 등의 순임. 부부+자녀-청소년기와 부부+자녀-학동기의 경우는 각각 3.38점과 3.36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부부+자녀-성인자녀가 3.32점으로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았음.

□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정도

- 각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정도 묻는 질문에서는 먼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생활방식'이 각각 2.46점과 2.45점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 2.30점, '자녀교육 문제' 2.24점, '배우자 부모/형제자매 관계' 2.20점,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2.15점, '가사 및 육아 부담' 2.15점, '부부간의 성관계' 2.13점 등의 순으로 갈등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년간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 경험 여부

- 지난 1년간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0.2%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는 부부+자녀-학동기가 13.8%로 가장 '경험이 있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직계가족 13.5%, 부부+자녀-청소년기가 12.8%, 부부+자녀-미취학 9.6%, 부부+자녀-성인자녀 8.2% 등으로 조사됨.

□ 갈등이 있음에도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아빠/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가 35.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모두하기 힘들어서' 15.6%, '이혼한다고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15.2%, '경제적으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10.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가 필요할 것 같아서'는 부부+자녀-미취학(42.3%), 부부+자녀-학동기(43.4%), 부부+자녀-청소년기(38.8%) 가족에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부+가족-출산전의 경우는 '이혼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가 3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부부+자녀-성인자녀 가족의 경우는 '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가 필요할 것 같아서'(28.6%)와 '이혼한다고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26.5%)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지난 한달간 부부싸움 횟수

- 지난 한달간 부부싸움 횟수에 대해서는 '없음'이 절반을 약간 넘는 51.5%였으며, '1회' 29.3%, '2~3회' 15.8%, '4~5회' 1.7% 등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부+자녀-미취학의 경우가 한달 동안 1회 이상 부부싸움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자녀-학동기, 부부+가족-출산전, 부부+자녀-청소년기 등의 순임. 지난 1년간 부부싸움 중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임.

□ 가사노동 분담

- 부부간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함. 특히, '식사준비'(89.9%), '세탁'(87.1%), '설거지'(85.3%), '다림질'(84.4%) 등은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쓰레기 분리수거'(12.1%),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7.7%), '집안청소'(6.9%) 등임. 또한 '시장보기'와 '집안청소'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각각 33.8%와 30.1%로 비교적 높은 편임. 맞벌이 여부별로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아내가 한다'의 응답률이 낮고 '부부가 함께'와 '남편이 한다'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3.11. 자녀양육

□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 '경제적 부담'이 39.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18.2%, '진로문제' 15.1%, '컴퓨터 게임/오락' 4.1%, '이성관계' 3.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자녀 가족유형의 경우 부부+자녀 가족유형보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임. 부부+자녀-성인자녀의 경우는 '진로문제', '이성관계' 등의 응답률이 다른 가족유형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의사소통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먼저 '본인의 장래에 대해 나와 상의하는 편이다'는 5점 척도 평균으로 3.38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편이다' 3.34점,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와 의논한다' 3.27점 등으로 조사됨. 가족형태별 살펴보면, '본인의 장래에 대해 상의한다'는 한부모+자녀-학동기(3.64점)와 '직계가족'(3.63점)에서 높았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한부모+자녀-학동기'(3.65점)과 부부+자녀-학동기(3.61점)에서 높았음.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논한다' 역시 한부모+자녀-학동기에서 3.64점으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한부모+자녀-학동기 가족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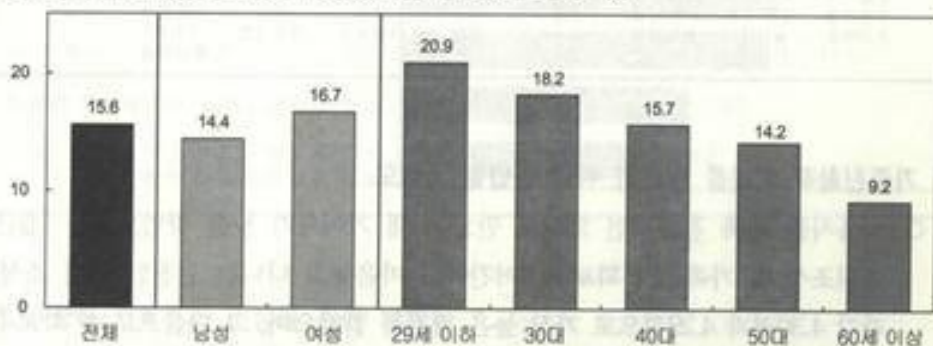
-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4.7%, '대체로 만족' 43.6% 등 '만족한다'는 응답이 48.2%였으며, '불만족한다'는 '매우 불만족' 0.2%, '다소 불만족' 6.8% 등 7.0%로 조사됨.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4.9%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51점임. 가족형태별로는 부부+자녀-미취학의 만족도 점수가 3.79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자녀-학동기 3.71점, 한부모+자녀-학동기 3.67점, 직계가족 3.64점 등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은 가족유형은 부부+자녀-성인자녀로 3.30점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가족유형은 한부모+자녀-청소년기로 3.40점임.

3.12. 가족정책

□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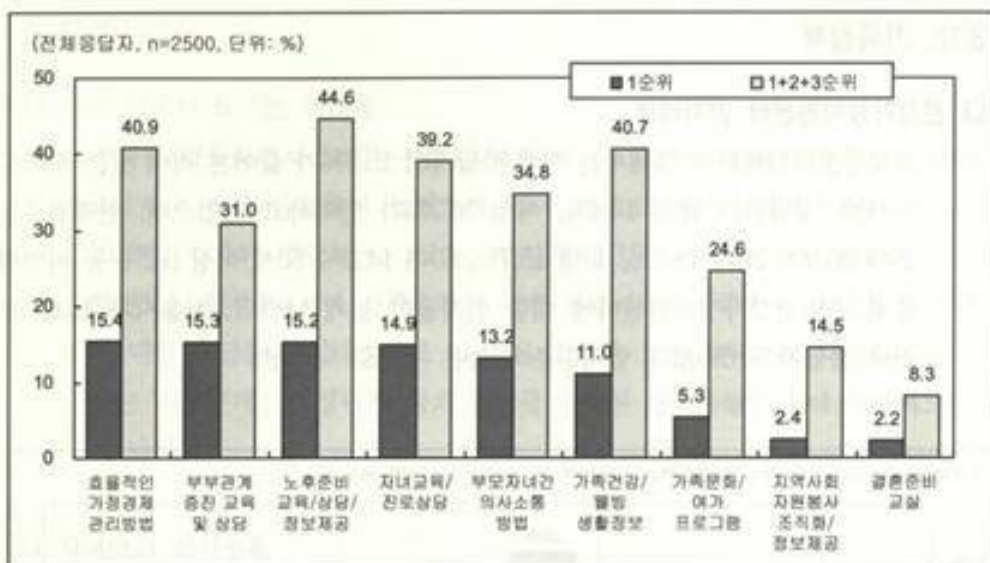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5.6%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별로는 남성 14.4%, 여성 16.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0.9%, 30대 18.2%, 40대 15.7%, 50대 14.2%, 60세 이상 9.2% 등 저연령 층일수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서울시가 15.6%로 전국 응답자(5.3%)보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응답자, n=2500, 성·연령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비율, 단위: %)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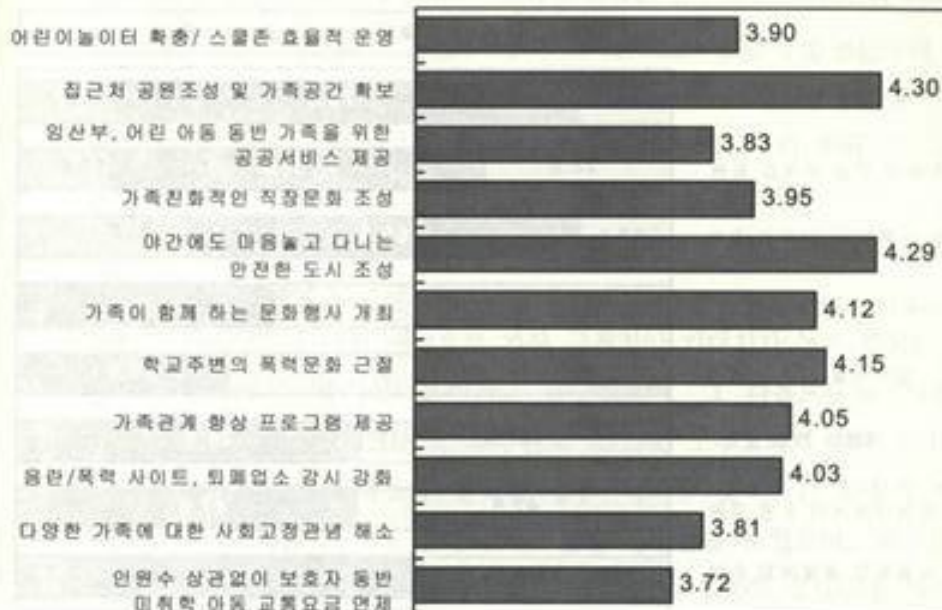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가족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는 '효율적인 가정경제 관리방법'과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 '노후준비 교육/상담/정보제공'이 각각 15.4%, 15.3%, 15.2%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교육/진로상담' 14.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법' 13.2%, '가족건강/웰빙생활정보' 11.0% 등의 순이었음. 전국의 경우 '가족건강/웰빙생활정보'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후준비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19.3%)', '자녀교육 및 진로상담(12.9%)' 등 순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별 기여도

○ 서울시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도가 높은 방법으로는 '접근처 공원조성 및 가족공간 확보'와 '야간에도 마음놓고 다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이 각각 4.30점과 4.2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주변의 폭력문화 근절' 4.15점,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 4.12점,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4.05점, '음란/폭력 사이트, 퇴폐업소 감시 강화' 4.0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전국의 경우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가족간호휴가제 등 관련 제도 확대 보급(15.6%)', '가족공원, 가족 극장 등 가족오락시설 확충(15.3)',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11.8%)', '학교주변 폭력문화 근절(11.6%)'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응답자, n=2500, 단위: 점(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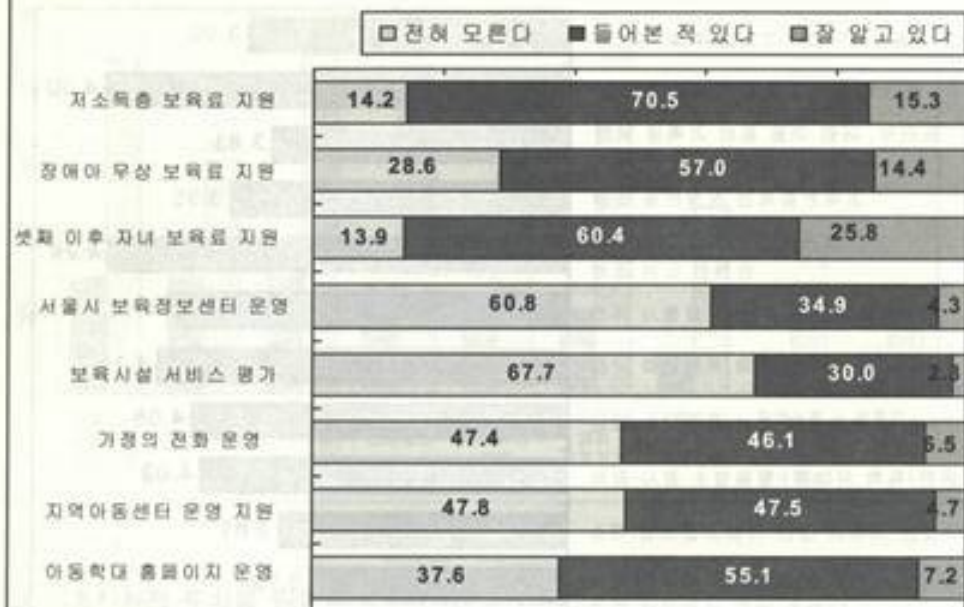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방법

-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방법으로는 '가족이 함께 누리는 여가문화 조성'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이 각각 4.02점과 4.0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과 이해' 3.79점,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3.75점 등의 순이었음.

□ 서울시 시행사업에 대한 인지

-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별 인지도(들어본 적 있다+잘 알고 있다)를 살펴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8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85.8%,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71.4%, '아동학대 홈페이지 운영' 62.4% 등의 순이었으며,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32.3%)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전체 응답자, n=2500, 단위: %)



□ 보육관련 정책 중 우선해야 할 일

○ 서울시가 보육관련 정책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시간제/야간 등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림' 22.2%, '보육시설 개선/ 프로그램 질을 높임' 13.6%, '보육시설의 수를 늘림' 10.4% 등의 순으로 조사됨. 1~3순위를 더한 응답률도 1순위 응답률 순위와 거의 같게 나타남.

□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이 있는 가족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

○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분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에 대해 1순위로 응답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 및 혜택 확대'를 꼽는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22.6%, '지역의 복지/요양시설 확대' 11.4%, '간병인 서비스 확대' 9.0%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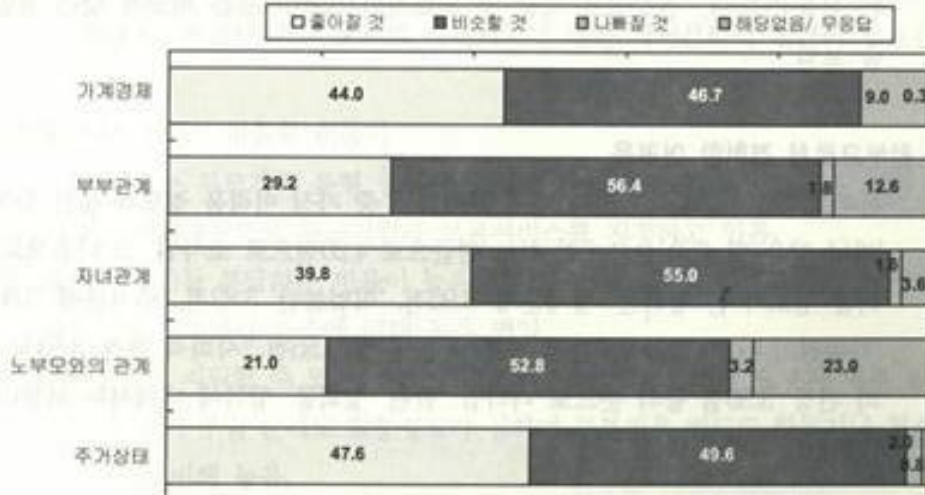
□ 노인가족 정책/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 노인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의료지원 서비스'가 31.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요양시설/전문병원 확대' 29.2%, '지역의 복지시설 확대' 15.4%, '간병인 서비스 확대' 14.1%, '주거 개선/보수 지원' 4.8%, '가사도우미 지원' 3.0%, '노인용 의료기기 지원' 1.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5년 후 가족생활 예상

○ 5년 후 가족생활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긍정적인 기대치가 높은 항목은 '주거상태'로 47.6%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계경제' 44.0%, '자녀와의 관계' 39.8%, '부부관계' 29.2%, '노부모와의 관계' 21.0% 등의 순이었음. 한편 '가계경제' 항목의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도 9.0%로 타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부관계'와 '노부모와의 관계'는 '모름/해당없음' 응답률도 각각 12.6%, 2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응답자, n=2500, 단위: %)



3.13. 한부모 가족 양육 서비스(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만 조사)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필요성

- 정부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각 정책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수당 지원'이 4.47점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4.20점, '건강 정보 제공 및 의료지원' 4.09점, '취업 상담/취업 교육' 4.08점, '부모의 홀로서기 및 현실 극복 프로그램' 4.07점, '보육 시설 이용' 4.06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한편, '문화 참여 프로그램'(3.62점), '법률상담'(3.69점), '가사 서비스 지원'(3.80점) 등은 4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 10개의 서비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으로는 '자녀양육 수당지원'이 31.2%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부모의 홀로서기 및 현실 극복 프로그램'(14.8%), '자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11.4%), '취업상담/취업교육'(9.1%), '가사 서비스 지원'(8.8%), '보육시설 이용'(8.8%) 등의 순으로 조사됨. 한편, '법률상담'(2.2%), '문화 참여 프로그램'(2.2%),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5.0%), '건강정보 제공 및 의료지원'(5.7%)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한부모로서 경험한 어려움

- 한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어려움 정도가 높은 항목은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5점 척도 평균으로 4.20점으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어려움 정도가 큰 항목은 '생계문제' 3.95점, '직업불안' 3.82점, '주거문제' 3.80점, '가족원의 건강' 3.58점, '가계 부채/대출 문제' 3.55점, '사회적 편견' 3.53점, '나의 건강'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성희롱'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3점) 미만인 2.79점으로 조사됨.

□ 자녀양육상 어려움

- 자녀양육상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료 및 보육비' 문제가 평균 3.99점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음

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 부족'과 '한쪽 부모의 역할 부재에 따른 지도 문제', 자녀의 성적 및 학습지도, 자녀의 교우관계 지도, 자녀의 이성 관계 지도, 자녀의 건강문제 등의 순이었음.

4. 서울시 가족정책수요 조사

4.1. 서울시 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정책 고려 사항

□ 부부 가족 : 출산전

- 주로 직장과 교통편리를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
- 저출산을 가족환경의 변화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무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저출산 해결정책으로는 현금지원을 들고 있음.
- 가계지출중에서 외식과 여가비 지출이 높고 저축액수도 높은 편
-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사노동분담 비율이 다른 가족보다 높고 부부간의 대화시간도 긴 편이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음.
-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보이며 이후의 가족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부모교육, 저출산 관련 홍보와 자녀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 부모 자녀 가족 : 미취학 아동기

- 자녀가 있는 부모가족 유형 중에서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임.
- 저출산 해결정책으로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지적하고 있음.
- 자녀 돌보기를 분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이로 인한 지각/조퇴/결근 정도가 학동기나 청소년기 가족에 비해 높은 편임.
-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 가사 및 육아 부담 문제로 갈등정도가 심하며 부부싸움 빈도도 학동기나 청소년기 가족에 비해 높음.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육아부담을 받고 있으며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부모 자녀 가족: 학동기

- 저출산 해결정책으로 교육관련정책 응답율이 높은 편임.
- 평일 저녁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자녀숙제/공부지도 응답율이 높고 다양한 활동과 동적인 가족여가활동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이혼 장애요인으로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율이 높은 편임.
- 다양한 영역에서의 방화후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음.
- 가족 부양을 위한 요양전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의향율이 가장 높음.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는 다른 주기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비해 높은 편임.
→ 자녀가 가족생활의 중심에 있는 가족특성으로 가족여가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부모 자녀 가족 - 청소년기

- 학군을 현 거주지 선택요인으로 드는 비율이 높음.
-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큼.
- 가정의 달 행사 선호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 선호비율이 높음.
-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적으며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음.
→ 자녀 교육 중심의 가족생활로 가족여가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가족간 유대 및 부모자녀간 소통 및 갈등 해결이 필요함.

□ 부모 자녀 가족 - 성인자녀기

- 교통의 편리함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임.
-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결혼할때까지로 보는 비율이 높은 편임.
-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려우며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을 충분하다고 보나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는 낮고 자녀와는 의사소통 정도도 낮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도 낮은 편임.
→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가족특성으로 평등지향적인 부부교육이 필요함.

□ 부부 가족 - 노인부부

-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가장 길고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자가

거주비용이 높음.

- 소득 및 지출규모는 낮은 편이나 과반수 정도가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와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 실제 여가 활동 참여도는 낮으나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은 많으며 부부간의 대화시간도 긴편이며 배우자와의 갈등빈도도 낮은 편임.
- 생활수준은 낮으나 정적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로 노인 취업 및 의료지원이 필요함.

□ 노인단독가족

-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절반정도가 정부의 보조금/수당을 수급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를 가족환경의 변화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함.
-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사회'로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낮고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 확대 가족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2세대 이상의 가족: 노부(모)+기혼자녀, 노부(모)+부모+손자녀)

-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주택규모가 모든 가족 유형중에서 가장 큰 편임. 다른 가족유형보다 개인의 관심보다 가족관심을 우선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 전문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가족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 노후 준비 교육 및 상담/정보제공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은 편임.
-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지닌 안정적인 가족특성으로 노후 준비 교육과 상담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 자녀 가족 : 미취학 아동기

- 이사빈도가 높으며 부모님댁이나 친척집과 가까운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음.
- 경제적 수준과 자가비율이 전체 가족유형중에서 가장 낮음.
- 가족환경의 변화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혼율의 증가'를 들고 있음.
- 가족을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족유형보다 높음.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각/조퇴/결근을 한 경험이 가장 많은 편임.
- 평일 저녁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가사'응답이 높으며 생활만족도도 가장 낮은 편임.
- 시간제/야간 보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 부모교육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 자녀 가족 : 학동기

- 가족환경의 변화로 '이혼율 증가'를 들고 있으며 가족이란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자녀돌보기로 인한 지각/조퇴/결근 정도가 양부모가 있는 학동기 가족보다 많은 편임.
- 경제적인 부담을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드는 비율이 학동기 양부모 가족보다 높은 편임.
- 자녀연령이 다른 한부모 가족에 비해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양부모가 있는 학동기 가족보다는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음.
- 자녀교육과 진로상담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문화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가 높은 편임.
-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 및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 및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 자녀 가족 : 청소년기

-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한부모 가족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나 양부모 청소년기 가족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 자녀를 돌보기 위한 지각/조퇴/결근 정도가 같은 자녀연령대인 양부모 가족에 비해 많은 편임.
-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응답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편임.
- 전반적인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다른 한부모 가족에 비해 낮은 편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가 높은 편임.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서비스 중 부모의 홀로 서기 및 현실 극복 프로그램,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 중심의 가족생활을 보이나 한부모 가족중에서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하므로 경제적 지원 및 자녀교육 지원, 한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함.

4.2. 전문가 정책요구 조사 결과

□ 전문가 정책요구조사 개요

- 서울시 가족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2006년 3월-4월 동안 서울여성위원회 위원, 여성 및 가족관련 학자, 관련단체 종사자, 관련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였음.

□ 가족정책의 필요성

- 전반적인 정책의 필요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 4.2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평균 4.5점 이상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항목은 보편적 아동양육 지원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확대,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반 구축, 방과 후 아동보육 서비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부분으로 나타남.

□ 가족정책 요구도의 우선순위

-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가족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평균 4.0점 이상인 영

역은 폭력예방 및 안전한 환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마련, 아동·청소년 보호, 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 이동권 보장, 평등하고 친밀한 가족문화, 경제적 안정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순으로 나타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한부모,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포함)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폭력, 문제 예방, 아동·청소년 보호 포함, 이동권),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평등하고 친밀한 가족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안전한 환경 확보, 가족친화적인 서울 만들기, 가족문화 활성화 등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표 III-19〉 정책 우선 순위 및 필요도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보편적 아동양육 지원체계 구축	47	4.79	.463
영유아 대상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	47	4.60	.648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47	4.57	.71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47	4.55	.653
방과 후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47	4.53	.747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	47	4.51	.621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환경 조성	47	4.43	.617
다양한 가족(빈곤가족, 장애인 가족, 새터민 가족, 독신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47	4.36	.67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조성	46	4.35	.795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46	4.35	.737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및 성보호 강화	47	4.34	.788
한부모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46	4.30	.785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확대	46	4.24	.947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	45	4.20	1.036
평등하고 친밀한 가족문화 조성	47	4.11	.938
가족의 경제적 안정 지원	46	4.07	.800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46	4.02	.715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의 도모	47	3.79	.720
가족친화적 공간 및 마을 만들기	47	3.77	.813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47	3.60	.970
가족친화적 사이버 문화 조성	47	3.40	.925

IV.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1. 서울시 가족정책 환경분석 및 현황

1.1. 서울시 가족정책 환경 분석(SWOT 분석)

강 점	약 점
• 예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높은편 • 높은 교육 수준 및 풍부한 인적자원보유 • 풍부한 교육 기반 시설 및 높은 교육의지 • 풍부한 교통·문화 인프라등 기반시설보유 • 앞선 정보화 기반 구축 • 가족관련 전문가 확보 • 가족정책전달체계 확보 • 보육 예산 및 시설 풍부	• 정책대상집단 및 정책요구의 다양성 증대 • 고급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기회 부족 • 지역별 사회경제적 수준 편차 심화 •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 자녀교육비 지출 과다 • 가족정책 전달조직 부재
기 회	위 험
• 민선4기 가족정책 관심 증대 • 여성가족부 설립으로 명시적가족정책 등장 •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가족정책 관심 증대 •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 증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합의 도출 •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기기 활용도 높음	• 성·세대간 갈등 • 가족에 대한 신화 잔존 • 가족관계 안정성 약화 • 공동체 의식부족 • 높은 생활비 및 주거비로 안정성약화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및 성상품화 확산 • 온라인상의 관계가 가족관계 대체가능성 증가

1.2.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 서울시 가족정책은 여성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2006년 최초의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1.2.1. 여성·가족 정책 조직

-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1947년 서울시에 부녀과가 설치되어 불우여성구호사업 및 일 반여성 지도·계몽 사업을 관장하였고, 6.25동란의 발발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구호행정에 중점을 두었음. 1960년대부터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가출여성과

저소득 근로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윤락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직업 보도사업 전개, 부녀상담소·시립부녀사업관·시립부녀보호소 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음.

- 1970년대에는 핵가족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생활방식이 변함에 따라 생활문화교육 및 여성들의 취업교육수요가 증가하였음. 이 시기에 시립여자기술원과 구로부녀복지관을 개관하였고, 각 구청에 부녀계가 신설되어 부녀교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음.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행정의 방향에 큰 전환이 있었음. 즉, 정책적 관심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부녀복지관을 대폭 정비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시기에 마포부녀복지관과 노원부녀복지관을 개관하였고, 1988년에는 서울시가정복지국과 각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음.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개편을 계기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인력활용,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1990년대는 민선 지방자치가 출발하였고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임. 1996년 부녀복지과의 명칭이 여성복지과로 바뀌었고, 같은 해 여성정책보좌관이 신설되고 서울여성위원회가 발족되었음. 이 시기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 1998년 민선2기의 출발과 함께 여성정책 추진부서가 확대 개편되었음. 조직이 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여성정책보좌관과 가정복지국의 여성복지과를 폐지하고 시장직속의 정규조직으로 1급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을 신설하였음.
- 1998년 8월 여성정책관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민선 2기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여성위원회의 건의로 추진된 서울여성의제 21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기계획인 서울여성정책3개년계획(200~2002)을 수립하였음.
- 1999년 여성보호기능과 아동보호기능이 보강되었으며 2000년 12월 성매매·가출여성 선도재활을 위한 종합정보 및 서비스 체계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음.
-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업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정책의 다양화, 아동안전업무의 종합추진, 서울여성플라자 건립운영,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여성·아동 복지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등을 위하여 2001년 7월 1일자로 가정복지담당관을 신설하였음.

- 민선3기를 맞아 2003년 1월자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총괄기능을 여성정책과로 개편하여 여성복지업무와 10대 청소년 선도재활업무를 함께 추진토록 하였으며 보육업무 강화를 위해 가정복지담당관을 보육지원과로 개편하였음. 이에 따라 별정1급인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하여 복지분야까지 관장토록 하였음. 따라서 기존의 여성정책관은 폐지되었으며 여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는 복지여성국 산하조직으로 전환되어 보건복지업무와 연계한 효율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 2005년1월 경영시정을 위한 민선3기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동안 복지·보건·여성·보육 등 기능이 혼재되어 비대화되어 있던 복지여성국에서 여성·보육 업무를 분리하고 문화국 소속의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별정 1급 상당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을 둬으로써 여성·보육·청소년 등 가족복지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되었음. 아울러 가족보육담당관에 '미래사회준비팀'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1.2.2. 민선 2기·3기의 여성정책 안에서의 가족정책

- 민선 2기 들어 여성정책 4개년계획 수립하였으며 총 4개분야 12개 과제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선 3기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의 경우 5개 분야, 14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민선 2기에 비하여 1개 분야 증가, 2개 과제 증가, 3 개의 세부사업이 감소한 것임.

〈표 IV-1〉 민선2기 3개년계획과 민선3기 4개년계획 구조

민선2기 3개년계획(2000~2002)		민선3기 4개년 계획	
목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 구축	목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양성평등도시 서울
기본전략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 여성의 삶의 질 향상 3. 소외 여성의 복지증진	기본전략	1.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확대 2.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기반 제공 3. 맞춤형 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4.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5.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6. 어려운 청소년·아동 건전육성
정책과제	12대 정책과제 43개 세부사업	정책과제	5개 분야 14개 과제 40개 단위사업

□ 민선 2기 여성정책

핵심분야	핵심과제	세부사업
1. 남녀평등의 촉진	1) 여성정책 홍보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	① 여성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② 여성주간행사 실시 및 지원
		③ 공무원 남녀평등의식 교육
		④ 성평등의식 교육
		⑤ 여아출생 기념식수
	2)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확대	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② 서울여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③ 여성 정치의식 교육
2.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1)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①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②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③ 보육시설 운영지원 ④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⑤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① 여성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②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③ 여성 창업지원센터 개설 ④ 여성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단체 및 자원 봉사활동 지원	① 여성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② 여성 리더십 교육 ③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④ 여성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⑤ 여성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3. 여성의 삶의 질향상	1)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①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② 사회교육기관 여성학강좌지원 ③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④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2) 여성의 건강·복지 증진	① 모성건강 증진 ② 여성 특수질환 예방·관리 ③ 여성노인의 복지증진
		④ 여성노인의 복지증진
	1) 편부모가정 및 아동 복지증진	①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② 미혼모보호시설 운영지원 ③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 ④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⑥ 결식아동 지원
	2)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① 여성장애인 센터 개설 ②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개설
	3)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②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③ 상담전화1366과 시설간 연계
4.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4) 요보호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①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사회복귀지원 ② 무의탁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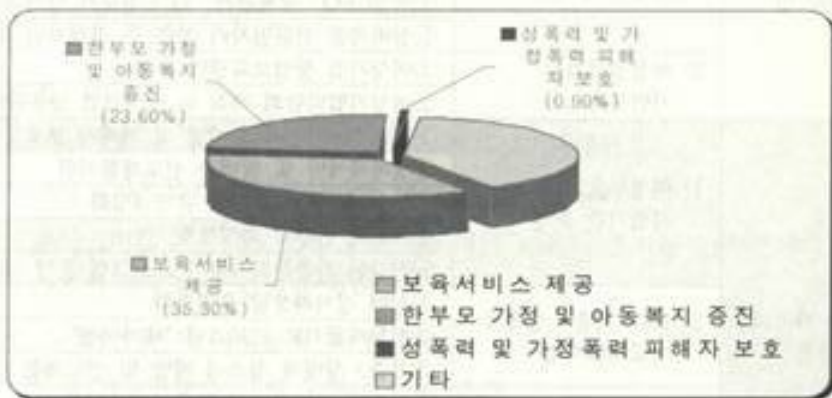
가족정책관련 부분

○ 특징

- 여성정책에 포함된 여러 영역 속의 하나로 존재함.
- 여성정책 계획수립의 배경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는 규범적 차원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현실적 차원을 양측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이 중 가족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 재정운영

- 총 43개 세부사업비 4,999억원
-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 1,767억(35.3%)
- '한부모 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 1,178억(23.6%)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비 4억(0.9%)
- 가족정책관련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9.8% 차지



○ 정리

- 민선 2기의 가족정책은 많은 부분을 여성정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
- 즉,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적 미분리 상태를 보임
- 1998년 시장직속의 정규조직으로 1급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의 신설과 동시에 아동보호기능 등이 보강되어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음.
-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화 도모와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기능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마련은 제한적이지만 가족정책으로서의 기초가 됨.
- 12개 핵심과제중 3개 과제가 가족정책에 해당됨.
- 43개 세부사업 중 12개 세부사업 가족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민선 3기 여성정책

핵심분야	핵심과제	세부사업
1.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1)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확산	①주요시책사업 성인지적평가
		②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학 강좌
	2) 남녀차별 관행개선	③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
		①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3)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②공무원 양성평등 교육강화
		①위원회 여성참여제고 등 시정참여기회확대
	4)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지도자 육성	②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 보직
		③출산휴가·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활성화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1) 여성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①여성단체 육성 및 파트너십 강화
		②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2) 여성창업지원 기반구축	③여성포털사이트 구축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①여성발견센터 운영강화
		②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 추진
		③(재)서울여성 운영 활성화
		④여성CEO·국제관계·IT·전문가 양성교육
		⑤실버계층 전문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립 지원
3.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1)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①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②여성기업박람회의 개최 등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①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②성매매예방 및 탈매춘 선도재활지원
		③무의탁 여성보호시설 운영내실화
	2) 10대 가출·성매매 선도재활사업	④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⑤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①심야 길거리상담 운영강화
		②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테마여행”
		③가출·성매매 청소년 예방 및 선도재활 강화
	4) 여성건강 의료서비스 향상	①성폭력 여성장애인 보호·상담시설 운영
		②여성장애인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③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4.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1) 공보육 기반 구축	①영유아 보호·출산여성 등 모자보건사업
		①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운용
	2) 맞춤형 보육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②보육시설 확충 및 종교시설 보육참여 활성화
		①영아·장애아 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의 확충
		②보육서비스 수준향상
5. 아동복지증진 과 안전향상	1) 아동복지의 증진	③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①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②민간단체참여의 결식아동지원 확대
	2)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 및 환경개선	③학대아동 보호체계 확립
		①어린이 안전의식확산 및 안전시설 개선
②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족정책관련 부분

○ 특징

- 민선 2기 보다 가족관련 정책이 가시적이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정책과제의 세부과제가 아닌 핵심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정책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
- 5개 핵심분야중 3개 분야, 총 14개 핵심과제 중 5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중 13개 사업이 가족정책과 관련이 있음.

○ 재정운영

- 총 40개 단위사업비 3,212억원
-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사업비(관련 정책 4가지) 364억(11.33%)
-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사업비 735억(22.88%)
-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사업비 1,150억(35.80%)
- 가족정책관련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02% 차지

○ 정리

- 민선 2기의 가족관련 정책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됨.
- 아동·가족복지에 광범위한 재정적 확대와 강화.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기 보다 자치하는 비율의 증가는 가족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의 증가를 보여줌.
- 그러나 여전히 여성정책 속 한 분야로 존재하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가족정책을 담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종합

- 민선2기의 경우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을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4개의 기본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4개 정책분야와 동일하게 연결됨.
- 민선 3기의 경우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나 별도의 비전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며 정책방향, 정책 목표와 정책분야가 불일치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양성평등도시 서울'의 경우 비전 혹은 목표로 예측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없음.
- 민선 3기 여성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음. 민선 2기에 비해서 5개 여성정책 분야에서 가족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였음.
-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 3개 분야가 가족정책과 관련이 있음.

〈표 IV-2〉 2기 3기 여성정책중 가족관련 정책 비중 비교

내용	2기(%)	3기(%)	증감
분야	0/4(0.0%)	3/5(60.0%)	60.0% △
과제	3/12(25.0%)	6/14(42.9%)	17.9% △
세부사업(단위사업)	12/43(27.9%)	13/40(33.0%)	5.1% △

- 2기에 비해서 3기 여성정책의 경우 분야, 과제, 세부사업 단위에서 모두 가족관련 정책이 증가하였음.
 - 분야의 경우 2기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 없으나 3기의 경우 가족관련 내용이 3개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음.
 - 과제는 2기는 25%에 해당하는 12개 과제중 3개 과제였으나 3기는 14개 과제중 6개로서 42.9%에 해당하는 과제가 가족관련 과제로 17.9%의 증가율을 보였음.
 - 세부사업의 경우 2기는 43개 사업중 12개로 27.9%이나 3기의 경우 40개 사업중 13개로서 33%에 달하고 있어 5.1%의 증가를 보였음.
- 세부 단위사업에서보다 좀 더 포괄적인 단위에서 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는 세부 사업단위에서 가족정책 관련 사업이 개발되고 있지 못함

을 보여주는 것으로 4기 가족정책에서는 다양한 가족정책 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임.

- 2기와 3기의 차이중 하나는 보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주요한 분야로 전면
에 등장하였다는 점임.
- 2기 3개년계획의 경우 보육서비스는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분야 안에 하나의 과제로서 자리 잡고 있었으나 3기에
서는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아동복지증진과 안정향상'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부각하였음.
-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비교시 서울시의 여성정책에서 가족관련 분야
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수 있음.
- 서울시 가족정책은 여성정책 안에서 → 보육 정책 → 가족정책 기반 마련 → 독
립된 가족정책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구조

2.1.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의 기본구조

정책비전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서울
정책목표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
추진전략	참여 · 균형 · 연계
핵심영역	▪ 가족돌봄의 사회화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2.2. 정책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2.2.1. 정책비전

- 행복한 가족, 함께 하는 서울

2.2.2. 정책목표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

2.2.3.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 균형(Balance) : 성 평등, 세대간의 소통, 다양한 문화의 조화, 지역불평등 배려

- 참여(Participation) : 남성과 기업, 사회와 정부의 참여

- 연계(Network) : 가족원과 가족원, 가족과 가족, 가족과 사회, 기관과 기관,
광역시와 기초단위, 자원과 자원의 연계

2.2.4.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구성

	핵심영역	핵심과제	세부과제
1	가족돌봄의 사회화	1)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확충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③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④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⑤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체계화
		2) 노인·장애인·만성질환 자 가족의 돌봄 부담 최소화	①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 ②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도우미 지원 확대
		3)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①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의 다각화 ②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조성	① 가족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② 가족 문화 공간확대 ③ 가족 친화적 공공 서비스 제공
		2) 안전한 가족 환경 조성	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 ② 안전한 온·오프라인 가족 환경 조성
		3)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① 공공기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② 기업 내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3	건강한 가족문화 정립	1) 평등한 가족관계	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② 평등가족 실천 교육
		2) 건강한 가족여가문화 정착	① 가족시간의 중요성 인식제고 ② 건강한 가족여가의 활성화 ③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3)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가족문화 조성	① 가족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문화 조성 ② 열린 가족네트워크 구축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1)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강화	① 입양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② 입양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2)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①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②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3)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②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4) 노인 가족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	① 노인 가족의 주거·의료 환경 개선 ② 노인 가족의 가사·돌봄 서비스 강화
5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1) 가족정책을 위한 조직정비	① 가족정책추진 전담부서 설치 ②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조정강화
		2)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 확립	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운영 내실화 ③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가족정책 추진 기반 마련	① 가족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②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계획수립촉진 ③ 서울시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육구 조사/연구

V. 핵심영역별 세부과제

1.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

1.1.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서울시는 공보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구체적으로 공보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아동(179,309명) 대비 44%(78,602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 52개 자치구 522개 행정동 중에서 19개 자치구 66개 행정동에 공공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는 이 중 38개 지역을 우선 설치대상으로 보고 이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임(여성정책관 내부자료).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시설 설치, 바닥 난방 공사, 보일러 설치, 놀이터보수, 이중창 설치 등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05년 말 기준 전체 민간보육시설 중 약 34%시설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고, 2006년에 330개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임(여성정책관 내부자료).
- 서울시는 취약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아보육, 영아전담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05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맞춤형 보육시설은 총 791개소(보육아동 10,985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장애아 보육시설은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을 합하여 총 96개소이고 총 886명의 장애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음. 이외 일반 보육시설에는 1,284명의 장애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음. 서울시 0-5세 유아 중 장애유아의 수는 2,406명인데 이 중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총 수는 2,170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영유아가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 장애아통합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05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총 327개소로 1,799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서울시 가족의 다양한 보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더 높여줄 필요가 있음.

2) 필요성

- 서울시 가족들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우선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가족은 누구나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비율이 가장 높으나 아직도 10%정도이므로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일 필요가 있음. 병행하여 나머지 90%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가족이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기본보육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 장애아 등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아동별 보육료지원은 그간 가족의 소득계층 순위를 중심으로 책정되어 왔음. 이외 한부모 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가족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보육료지원 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 가족들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의 취업형태가 다양해졌으므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가족의 요구도 다각화되었음. 그러므로 시간연장제,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주말보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더욱 확충될 수 있어야 함. 이외 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정부나 지자체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기업도 이를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가족들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마련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시설 공개정보에 평가인증 여부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보육시설의 안전, 영양, 건강관리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음. 보육시설의 건물 및 시설설비 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영양

및 급식관리,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울시가 보육서비스에 있어 선진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후시설 등 안전취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1.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1동 1공공보육 시설 확충)
 - 구별, 동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분석 후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으로 국공립시설이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노력해야 함.
- 기본보육료제도의 효율성 제고
 - 구별, 동별 보육시설 지가를 반영한 보육비용의 산출, 이를 통한 기본보육료지원의 현실성 있는 차등지원 제도를 마련을 검토함.
- 보육료지원 강화
 - 저소득층 유아, 장애유아, 다자녀가구의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강화. 향후 5년간 보육료지원을 위한 소득계층별 등위를 높여나감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육료지원 세분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 한 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족, 저소득층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의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체계상 유리하도록 가족관련 factor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개발, 실시

(2)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 야간보육, 주말보육, 24시간보육서비스 구축
 - 야간근무자를 위한 보육, 주말근무자를 위한 보육, 긴급 상황을 겪는 가족의 영유아에게는 한시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보육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 현재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잔여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함.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에게는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양, 건강서비스를 보충하고,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정상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현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하므로 이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확충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가 요구됨.

○ 장애통합보육시설 체계화

- 장애통합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을 확충하며, 순회특수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함.

○ 직장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인건비를 현재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직장보육시설 모범기업사례 발굴 시상,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업의 가족생활 개선수기 공모,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업 대상 각종 가족지원프로그램 우선 연계실시로 보육시설 입소대상이 없는 직장인도 보육시설 설치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가정방문육아도우미 서비스 구축

- 영유아용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육아도우미 프로그램 실시, 가정방문 육아도우미 지원체계, 인력, 재정 마련, 위기가족, 한 부모가족, 장애아 부모 가족 등을 위한 한시적 가정방문 육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함

(3)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 활성화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실시, 노후시설수리지원, 교사교육지원, 대체교사 지원, 관내 인증통과시설 적극 홍보 지원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기준 개발, 관내 보육시설의 운영위원 명단과 위원회회의록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기준으로 삼게 함

○ 보육시설 안전점검 다각화

- 보육시설의 건물 및 시설설비 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영양 및 급식 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등의 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안전점검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기준으로 활용

○ 안전취약보육시설 관리방안 구축

- 노후시설 건물안전 점검, 위해 주변 환경 요소별 점검 관리로 안전취약보육시설로 선정, 선정된 시설은 향후 1년간 집중 관리하여 관련 사고 예방

(4)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표준보육과정에 맞춘 연령별 서울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때 시설유형, 시설규모를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을 확대개발, 보급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우수성을 확보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 포상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을 포상하고 공개함으로써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기준으로 삼게 함.
- 보육교사의 재교육 및 보수교육 다양화
 - 보수교육 내용 미비로 보육교사가 재교육 참여를 꺼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 보육교사재교육프로그램 및 시설을 공모하여 우수 재교육시설로 지정하면 향후 3년간 집중 지원 방안 검토.
- 대체교사 확보와 활용방안
 - 대체교사 투입 시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성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한 대체교사 투입용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대체교사투입 시 영유아의 안전, 영양, 건강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대체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사와 시설장이 안심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한 후 출산휴가를 갖거나 보육교사 재교육을 받으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

(5)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체계화

- 방과후 보육서비스 수요 및 실태조사
 - 다양한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유형별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정보를 체계화 함.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 할 있도록 지원. 아울러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현황, 가정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지원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유형화시킴
- 방과후 보육서비스 내실화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확충함. 자녀의 돌봄 외에 아동의 정서발달, 건강, 영양, 자녀교육, 부모자녀관계 확립 등 가족지원 기능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방과후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 방과후 보육교

사를 위한 아동발달 및 지도 교육, 가족지원 교육을 강화시킨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과후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임

2) 추진계획

(1) 보육공공성의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구별, 동별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국공립시설 현황분석,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중장기 영유아인구동태 예측치 반영,
- 구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서울시 차원의 차등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우선확충지역 선정 및 1동 1공공보육 시설 확대

○ 기본보육료제도의 효율성 제고

- 기본보육료 지원제도 실시에 따른 효율성 분석 및 차등지원제 마련
- 기본보육료 차등지원제 시범사업
- 기본보육료 차등지원제 확대 시행

○ 보육료지원 강화

- 보육료지원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재원확보
-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별 확대 시행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육료지원 세분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 다양한 가족의 영유아기 자녀 보육수요 조사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육료지원체계 개발
- 가족특성 반영한 보육료지원체계 시범실시

(2)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 야간보육, 주말보육, 24시간보육서비스 구축

- 구, 동별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조사 및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서비스 개발
- 가족의 다양한 상황을 공평하게 인식하는 보육내용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보육시설 수 확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통합보육시설 체계화

- 장애아통합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지역사회 연계자원 통합프로그램

-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순회특수보육교사 근무체계 마련
- 순회특수보육교사제 시범실시
- 직장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강화, 직장보육시설 모범기업사례 발굴 시상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업 가족생활 개선수기 공모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업 대상 각종 가족지원프로그램 우선 연계 실시
- 가정방문 육아도우미 서비스 구축
 - 육아도우미 양성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용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 가정방문 육아도우미 지원체계 마련
 -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육성
 - 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족 등을 위한 한시적 가정방문 육아도우미서비스 제공

(3)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 활성화
 - 평가인증보육시설 홍보체계 구축
 -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인증참여 보육시설 시설수리지원, 교사교육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실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 보육정보센터의 관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정보공개 체계 개발, 운영위원회 회의록 양식 개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정보와 시설 평가인증여부 정보의 연계 공개
- 보육시설 안전점검 다각화
 - 보육시설 건물 및 시설설비 안전점검 체계 개발 ←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자원봉사 인력 활용, 일부 인건비 지원
 - 영양 및 급식관리 체계 개발 ← 지역 대학의 식품영양 관련학과 자원봉사 인력 활용, 일부 인건비 지원
 - 종사자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개발 ← 지역 대학의 병원 및 보건, 간호 관련학과 자원봉사 인력 활용, 일부 인건비 지원
- 안전취약보육시설 관리방안 구축

- 노후보육시설의 안전요소 및 주변 위해환경 관리 리스트 작성
- 노후보육시설의 집중관리 시스템 개발
- 노후보육시설 집중관리 사업 시범실시
- 노후보육시설 집중관리 및 개보수 사업 확대 실시

(4)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표준보육과정에 맞춘 연령별 서울시 보육프로그램 개발사업
 - 보육교사 대상 서울시 보육프로그램 교육실시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 포상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 포상 및 공개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 거점 주변 보육시설 연계 지원사업 개발
 - 표준보육과정 선도시설 및 주변 시설간 연계지원사업 실시
- 보육교사의 재교육 및 보수교육 다양화
 - 우수 보육교사 재교육프로그램 공모
 - 보육교사재교육 우수시설 포상
 - 보육교사재교육 우수보육시설 지원확대
- 대체교사 확보와 활용방안
 - 대체교사 투입용 보육프로그램 개발
 - 유아기 대체교사 투입용 보육프로그램 시범 실시
 - 걸음마기 대체교사 투입용 보육프로그램 시범실시

(5)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체계화

- 방과후 보육서비스 수요 및 실태조사
 - 가족의 방과후 보육서비스 요구도 및 이용 실태 조사
 - 지역별, 유형별 방과후 보육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 지역별 방과후 보육서비스 내실화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한 방과후보육서비스 실시
 - 포괄적 방과후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 보육교사 보수프로그램 강화

1.2.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 돌봄 부담 최소화

1.2.1. 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 돌봄 부담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구원이 있는 가족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며, 주부양자는 매우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됨.
- 서울시의 노년부양비는 2000년 7.1%에서 2005년에는 9.5%까지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유병률은 42.5%에 이르고, 실제로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0.4%가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음. 서울시의 장애인구는 2003년 239,647명(전체 인구의 2.3%), 2004년 267,365명(2.6%), 2005년 297,087명(2.9%)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⁷⁾
- 이에 비해 서울시 노인인구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는 인구의 비율이 38.5%나 되어 실제로 노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원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정원은 2004년 현재 3,212명에 불과하여 노인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서울시는 현재 전문요양시설 21개소(무료 12개소, 실비 9개소)와 주간·단기보호시설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정원이 2,262명, 주간·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정원이 1,234명에 불과함.
- 서울시 가족정책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경우,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외부 시설을 사용한 경험에 대하여 19.1%만이 외부시설 이용 경험이 있고, 80.9%는 외부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부양자가 거의 전적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들 주부양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이 외부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외부 요양시설의 경우,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44.7%), '비용부담'(21.1%),

7) 장애인구의 증가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구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인근 시설 부족’(13.2%), ‘당사자가 싫어할까봐’(5.3%), ‘가족·친척들의 반대’(5.3%)로 나타나, ‘필요를 못 느껴서’(10.5%)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주간보호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44.9%), ‘비용부담’(21.6%), ‘시설의 질 불신’(11.2%), ‘당사자가 싫어할까봐’(9.6%), ‘가족·친척들의 반대’(3.5%), 순으로 나타나 주부양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그러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 돌봄 제공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필요성

- 가족의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돌봄 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시설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가족정책 차원에서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대한 것임.
- 외부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시설의 질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통한 가정내 돌봄 서비스 지원과 가족내 주부양자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 연구(박영란 외, 2005)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들이 노인을 수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피로, 시간적 여유, 외출 등을 들어 가족내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서 육체적 피로와 시간적 여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서 간병인 서비스 확대와 지역 복지시설 확대, 보살핌 제공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이 각각 24.1%, 17.8%, 3.3%(2순위 응답 비율)로 나타났음.
- 서울시 복지건강국에서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1.2.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 돌봄 스트레스 완화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 주부양자의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되,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상태에 따른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기관 마련
- 주부양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 마련
- 주부양자들의 육체적 피로를 완화시키고, 육체적 피로에서 신체적 질병으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주부양자들의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어야 돌봄 대상자나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2)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도우미 지원 확대

- 전문 요양시설과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도우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돌봄 도우미에 대한 수요 중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돌봄 도우미 서비스의 전문화·내실화를 기함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에 대한 돌봄 도우미 지원은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질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빈곤층 대상의 저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
-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파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주부양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주부양자와 다른 가족원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2) 추진계획

(1)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 돌봄 스트레스 완화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가족을 위한 콜센터 마련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제공자들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위기 개입 상담 전화 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주부양자를 위한 콜센터 마련

○ 주부양자들간의 자조집단·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

- 주부양자들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양 관련 정보 교환, 부양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마련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 교류 공간 마련

○ 장애인 자녀 부모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 자녀 출산과 자녀의 후천성 장애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관계 기술 개선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 기술 개발 및 위기 대처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 주부양자에게 지워지는 돌봄 부담을 공유하고, 주부양자 부재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기술과 위기 대처능력 교육 제공

(2)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도우미 지원 확대

○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respite(가족일시휴가)제도 실시

- 돌봄 도우미를 돌봄 대상자가 있는 가구에 파견하거나 돌봄 대상자를 시설에 단기간 맡김으로써 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부담 경감

- 서비스 관리 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전달체계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담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파견도우미 교육, 서비스 수요자 사례관리, 파견도우미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전문성 높임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돌봄 도우미 파견 실태 점검

- 기초수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돌봄도우미 전문성 확대 및 지원 교육 내실화

-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에 대한 돌봄 도우미 전문성 확대

-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분기당 1회 이상의 계속 교육 실시

1.3.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1.3.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양육 및 교육비 증가, 자녀 가치의 변화 등으로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의 부담이 과중되어 있어 여성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서울시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00으로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편임.
-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더 많이 관여해오던 임신과 출산을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부모기 전이 과정으로 이해하고 가족들이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또한 사회에서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공유해야 함.
- 서울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는 '2명'이라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많았으나,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뿐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양육·교육비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음. 하지만 향후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출산계획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울시 가족들은 자녀를 2명 정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서울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가족은 취학전 자녀의 돌보기 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양육활동, 즉 밥먹고 옷 입히기 등의 일상적 자녀양육활동 뿐 아니라 보육·교육시설 알아보기, 보육·교육시설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등 보육 및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한다는 응답한 비율보다는 아내가 전담한다는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노동이 주로 아내 쪽에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필요성

- 임신 및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음. 임신 및 출산과정은 부부가 함께하는 비율이 높고 있지만, 막상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활동은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높아 아내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와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되어 가족에서 멀어지는 문제를 초래함. 그러므로 자녀를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및 초기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간의 협력토대를 세우는 제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정책은 임신, 출산 지원과정에서는 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부모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정보를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부모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가족밀착형 서비스로 전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의 임신 및 출산은 더 큰 어려움을 주므로 산전·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그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달되어왔음. 그 결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사회의 양육지원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남. 가족이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가족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어린 자녀의 양육을 아내가 전담하는 데 따른 가족원간의 갈등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간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밀착형 양육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1.3.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의 다각화

- 임신/출산을 위한 가족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임신 및 출산과정의 이해와 임신부 산전산후 우울증의 이해 및 예방법 교육, 임신부를 지원하는 남편 및 가족의 역할 교육, 임신/출산기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육, 임신/출산, 육아 대비 가족의 중장기 가계재무설계 교육, 기존자녀와 부모와의 부모자녀관계 교육, 임신/출산부의 연령별, 생애주기별 모델을 개발하

여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현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서울시에 출생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예방접종 일정을 시기마다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
- 산전 후도우미제도 도입
 -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을 위해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지원 확대. 산전, 산후도우미는 중고령자로 선발하여 교육 후 파견

(2)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 영아의 양육을 위한 부모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영아기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가족의 지원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영아기 자녀양육에 따른 수면부족 등의 신체적 어려움을 부부의 협력 및 가족의 지원으로 극복케 함⁸⁾
 - 부모기 전이 과정에 대한 적응을 위해 청소년시기부터 부모역할 교육 및 실습 훈련프로그램 제공
- 초기자녀양육의 고립감 극복을 위한 지원서비스 개발, 실시
 - 영아기, 걸음마기 자녀, 즉 0세부터 만4세까지의 자녀양육은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 있어 양육자는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쉬움. 초기자녀 양육기를 거치는 부부의 사회적 연대망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관리사무소에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비로 간단한 놀이설비를 갖춘 후, 건강가정사 등이 약 2달 정도 파견되어 주민자치 유아놀이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줌. 초기정착기가 지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주민끼리 자원봉사로 놀이방을 유지할 수 있게 됨. 비슷한 모델을 지역 거점에 몇 가지 사례로 개발하여 주민공동체의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시킴. 주민자치 유아놀이방을 통해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하고, 심리적 지지감을 얻으며, 다른 일을 봐야할 때 시간제 육아도우미역할을 주고받을 수 있음.

8) 미국은 'zerotothree' 재단을 신설하여 0세부터 3세까지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지적발달, 정서 및 사회성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관련 부모양육법을 전 국민에게 교육시키고 있음. 이를 통해 부모는 영아기 자녀양육에 대해 사회로부터 지지감을 얻고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적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본 육아지원센터의 것과 동일함. 육아지원센터는 물리적 공간, 설비비용, 인건비 등이 국가재원으로 지출되나, 아파트 단지 등 주민자치모임과 연계하면 주민자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음. 주민입장에서는 주거공동체가 개선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는 아파트 브랜드가치가 상승하는 반사효과가 있음.

○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유관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 근래 보육시설을 통한 자녀양육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국가의 자녀양육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영아기 등 초기 자녀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이루어지는 각종 유관서비스를 연계하여 부모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추후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함.

2) 추진계획

(1)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의 다각화

○ 임신/출산을 위한 가족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프로그램 개발연구
- 가족지원 관련센터를 통해 시범사업
- 서울시 전체 구로 확대시행

○ 청소년을 위한 부모 역할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 일정 기간 교육 및 역할 실습 후 영아원 등의 자원봉사와 연계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출생 주민등록 시 부모(혹은 양육권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시스템을 갖추
- 보건소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시스템 확보
- 예방접종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시범서비스 실시(2개 구)후 연차적 확대

○ 산전 후 도우미제도 도입

- 상반기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의 산전, 산후 조력요구 조사
- 하반기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의 산전, 산후 조력프로그램 개발
- 2008년 중고령자 산전, 산후도우미 교육프로그램 시범실시
-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을 위한 산전, 산후도우미 파견사업 시범실시 후 확대

(2)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 영아의 양육을 위한 가족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상반기 영아양육을 위한 가족지원요구도 조사
- 하반기 영아양육지원을 위한 가족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영아양육지원 가족협력교육프로그램 시범실시
- 영아양육을 통한 부성에 중진수기 공모전 실시

○ 초기자녀양육의 고립감 극복을 위한 지원서비스 개발, 실시

- 대형아파트단지 1곳에서 시범사업 실시

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형아파트단지(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많은 곳) 선정 ←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내 일정공간 및 설비비용은 아파트 측 자부담/사업을 시행할 전문 인력의 인건비는 지원 혹은 건강가정센터 내 전문 인력 파견근무

나. 주민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도 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다. 프로그램 실시 → 주민 간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밀착형 초기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모델 개발(아파트단지형, 주택가형, 상가지역형 등)

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2.1.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서울시 도시계획의 초점이 양적 성장과 개발우선에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성장 관리로 변경되고 있음. 이러한 초점의 변화로 인해 서울시 주민 일인당 생활복지면적이 확대되고 생활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조성이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임

· 근린생활권의 생활복지축 확장

2000년 일인당 시설공원면적 13.1㎡ → 2010년 14.6㎡

·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

2001년 인구 1만명당 문화시설 수 0.78개 → 2010년 1개

<출처: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주5일 근무제의 실시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생활근린권 내 문화기반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과 기관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문화의 콘텐츠 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문화센터 등을 통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보급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증가하고 있음.

2) 필요성

-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능이 사회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보육시설과 교육기관 등이 아동과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구조화하고 있음. 자녀를 키우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지지적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됨.
- 지역사회는 가족의 휴식, 소비, 종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린생활권에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 집 근처에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가족공간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운동, 놀이,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간을 가족을 위해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시설과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사회가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적 도시만들기에 대한 서울시민의 요구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집근처 공원 조성 및 가족공간 확보(4.3점/5점)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 중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2.1.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 생활근린권 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 휠체어나 유모차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이동의 편의를 도모함.
- 아동전용 시설이나 노인전용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가족구성원의 건강상의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울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2) 가족문화 공간 확대

- 지역사회 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각급학교 등 기존의 시설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있도록 유도하며,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함
- 근린생활권 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책로, 운동 공간, 놀이 공간, 바비큐 공간 등 생활 공원을 확대하고 이러한 공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함

2) 추진계획

(1)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 임산부, 유모차, 노약자에게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구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정도를 검토
 - 노인시설 앞 건널목 보행신호 시간 연장
 -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및 대여유모차 위생 점검
- 스쿨존(School Zone)의 점검 및 효율적 운영
 - 구별로 스쿨존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점검
 - 해당학교, 녹색어머니회를 통해 문제점 및 실태 조사
 - 스쿨존 모범사례에 대해 해당학교, 교육청, 구청 포상

○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 및 친환경 놀이터 제공

- 각 구별로 어린이 놀이터 실태 조사
-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위생 점검
-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에 친환경소재 사용
- 노후 놀이터시설 교체

○ 경로당 환경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 각 구별로 경로당 환경 및 위생상태 점검
- 노후시설 교체

(2) 가족 문화공간 확대

○ 생활공원 확대 및 가족을 위한 공간 확보

- 구별로 근린생활권 내 공원이용 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구별로 근린생활권 내 공원 위생상태 점검
- 공원 내 놀이 공간, 운동 공간, 바비큐 공간 및 시설 마련
- 공원내 화장실 개선
-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회관, 문화의 집 등을 통한 가족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 도서관 확충 및 작은 도서관 설치 권장

- 어린이 열람실, 시니어 열람실, 가족영화관 등 설치 및 운영내실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 각 급 학교시설 개방 및 활용을 통한 가족문화 공간 확대

- 각 교육청별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의 시행여부 점검
-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3) 가족친화적 공공 서비스 제공

○ 보호자가 동반한 미취학 아동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요금 면제

-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및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보호자가 동반한 미취학아동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요금 면제 (단체 제외)

○ 임신부 운전자에게 편의 제공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운전자에게 요일제 면제 혜택 부여
- 등록된 임신부 차량의 공공기관 내 주차공간 별도 마련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성 강화

- 공공기관 내 임시 놀이방 및 휴게실 설치
- 공공기관 남성화장실 내 유아동반 이용 가능하도록 개보수
- 노년층 이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노인층을 배려한 안내 표지판 제작
- 어린이 및 노약자를 동반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제공
-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사례 공모 및 가족친화 기관 인증마크 부여

2.2. 안전한 가족 환경 조성

2.2.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안전한 가족환경 조성은 가족원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정책개발이나 사업의 시행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대부분의 안전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안전의 영역이나 대상 별로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가족에게 적절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책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노인 학대의 다양한 가정폭력 문제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짐. 또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사후 서비스 위주의 대응이 이루어져 예방을 위한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필요성

- 환경오염, 지역위생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사행성 오락시설, 퇴폐업소 등과 같은 아동과 가족에게 유해한 상업 환경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사이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불법 유해정보 등이 가정생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사행성 도박, 오락,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족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물론 가정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차

원에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원의 물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은 가족 외부 환경 뿐 아니라 내부 환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2.8%가 자녀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가정폭력은 가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해체의 주요요인이 됨. 가정생활교육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에 대한 위기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서울시민들은 가족친화적 서울을 만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안전한 가족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을 선택하였음. 야간에도 마음 놓고 다니는 안전한 도시 조성(4.29점/5점)과 학교주변의 폭력문화 근절(4.15점/4.5점), 음란/폭력 사이트, 퇴폐업소 감시 강화(4.03점/5점)에 대해 특히 높은 요구도를 표시함

2.2.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여러 연령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같이 가정폭력 전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을 확대함
- 아동학대, 노인학대, 배우자학대에 대한 통합적 개입을 통해 가족문제의 관점에서 조망하며 해결책을 모색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조훈련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을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

(2) 안전한 온-오프라인 가족환경 조성

-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근린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함. 지역사회 내 사행성 상업기관이나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이나 주민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아동, 여성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근린생활권 내에 다양한 가족공간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을 통한 범죄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2) 추진계획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

-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예비부모 대상 부모교육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의 부모교육 활성화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부모교육 포함
 - 주제별 부모교육 책자 개발 보급(예. 인터넷 중독 예방)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내실화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기관 이용실태 조사
 - 가정폭력 가해자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학대아동의 보호, 상담 등 의료적 치료서비스 체계 확립
 - 가정폭력 피해자 심터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자조 및 직업능력 훈련 강화
-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내실화
 - 신고의무자 대상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신분보장 확인
 - 아동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2) 안전한 온-오프라인 가족환경 조성

- 어린이, 노인대상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 자전거 자격증 제도 활성화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안전교육 강사 양성 및 보급
- 가정환경 안전성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 가족 유해환경 단속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화
 - 부녀회, 주민자치단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기능 지원 및 교육
 - 시민 감시단 우수활동 사례 조사 및 장려금 지원
- 사이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의무화
 - 사이버 유해환경 신고 창구 마련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화
 - 유해광고 차단 프로그램 무료 보급
-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강화
 - 각급 학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 연령별, 성별 적용 가능한 집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캠페인

2.3.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2.3.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5년 52.0%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50.1%보다 높은 수준임.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 높아져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중요한 과제가 됨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데이 참여직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직장 중 참여직장은 2006년 9월 현재 56개임. 그러나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들의 실질적 이용도가 낮은 실정임(2003년 여성의 산전후 휴가 대비 육아휴직 이용률 24%)

2) 필요성

-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1.0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부산(0.9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임(통계청, 2004).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임. 가족친화적 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가족친화적 경영을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일과 가정생활을 분리하고 남성들을 일 중심의 생활세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직장문화는 남성들을 가족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가족 내부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결혼 초기부터 노년기까지 남성들이 가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근무환경과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
- 서울시민들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높은 요구도(3.95점/5점)를 표시하였으며, 특히 출산 전 부부만으로 구성된 젊은 연령층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4.12점/5점).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부부가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과제가 됨

2.3.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마련

-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을 촉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위치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함
-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가족친화적 경영을 위한 인프라와 역량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는 가족친화적 경영과 직원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가 많음.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적용함

(2) 기업 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추진계획

(1)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마련

- 공공기관 내 수유실 설치 확대
 - 공공기관 내 수유실 설치 여부 조사 및 설치 권장
 - 모유유축기구 대여
 - 임산부 휴식 공간 제공
- 남성 및 여성 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장려
 -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 장려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 장려
- 서울시 공무원 가족의 날 제정 및 가족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공무원 가족방문의 날을 제정하여 가족 초대
 - 서울시 공무원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
(늘푸른 성교육-한강 체험 프로그램 참여후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후 함께 귀가하는 프로그램)
 - 가족 요일을 정해 조찬 및 만찬 모임 및 회의 자제

(2) 기업 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육아휴직 사용 장려 캠페인
 -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 장려
 - 남성 및 여성 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장려
- 모유 수유실 설치 장려
 - 모유 수유실 및 임산부 휴식공간 설치 권장
 - 모유유축기구 대여
- 가족친화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의 날을 정해 조찬 및 만찬 모임 및 회의 자제
 -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기업운영 컨설팅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공
-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 컨설팅
 -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가족친화적인 기업 프로그램 사례 발굴 및 시상
-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서울시 인증마크 부여 제도 도입

3. 건강한 가족문화 정립

3.1. 평등한 가족관계

3.1.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주 기제이자 일하는 여성에게 가사와 일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요인임. 가족 내 평등한 성별관계 정립을 위해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남녀 및 세대간 가족 구성원들의 분담이 요청됨.
- 가족 내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가사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부담률은 여전히 높음. 주부가 주도하고 남편이 부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가족 내 가사노동은 여성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서울시, 2006).
- 남성의 경우 집안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 시장보기 등의 영역에 참여가 두드러지며 젊은 세대, 자녀가 없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남성들의 참여가 높음 편임.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식사준비(89.9%), 세탁(87.1%), 설거지(85.3%), 다림질(84.4%)에서는 여성의 부담 비율이 높음(서울시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수요조사, 2006).
- 자녀 양육의 경우도 양육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아내의 부담비율이 높았음. 부부간 자녀돌보기 분담에서도 함께 놀아주기(5.7%), 목욕시키기(6.4%) 정도에 남편이 참여하고 있음. 밥 먹는 것 도와주기(81.0%), 옷 입는 것 도와주기(84.4%), 학교 준비물 챙기기(82.4%), 보육시설 알아보기(81.6%)는 아내의 분담 비율이 높았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의 참여도는 가사노동보다 낮으며 실질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음(서울시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수요조사, 2006).
-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결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부부간 합의하여 결정하는 영역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여성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큰 부분

이 자녀교육 및 가계소비로 가사와 육아 담당자로서의 여성에게 허용된 권한만 가졌다는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 내의 남녀차별과 연장자와 연소자의 차별, 직계와 방계간의 잠재적인 불평등을 유지해 왔던 부계 중심적 가부장적 기제의 해소 가능성이 커짐. 호주제 폐지는 성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및 세대간, 가족원 내의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됨(신희선, 2005).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따라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家)의 개념이 약화되고 이혼,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할 때 재산의 50%를 분할할 수 있게 하였고,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 근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내 세대간의 단절과 가족 의식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베이브 세대, 386세대, N세대, 신세대 등의 등장으로 개방적인 결혼관이나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이 증가하고 있음(김혜영, 2005). 이들 세대가 성역할에 대해서도 평등한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개인주의적 생활 지향, 부모 부양의식, 자녀관 등에서 기성세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큼.

2) 필요성

- 가족은 미래 세대의 사회화과정의 주요 장이므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은 미래 세대의 성평등한 역할 습득 및 가치 획득을 가능하게 함. 남편과 아내 외에 가족원 모두의 평등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호주제 폐지로 법과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남성 우대의 무의식적인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음. 이는 전통과 가족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함.
- 가족원의 평등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족주기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새롭게 부부관계를 구성해 가는 예비부부와 전통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차별화된 평등가족 문화 교육이 필요함.
- 가족원 내의 세대별 이해 증진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 권위주의적 가족질서 및

가족주의의 해체, 개인의 행복추구, 다양한 가족형태와 대안적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家治! 둘이! 함께 프로젝트' 실시 및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시민의 남녀평등한 가족 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서울시는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평등가족 문화 확산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양성평등, 서울가족', '평등가족 사랑대축제', '아빠가 차리는 토요일 밥의 저녁 만찬', '평등가족문화축제' 등으로 성 평등과 가족 화합을 다져왔음(2005 서울여성백서,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서울의제21에서 '가족이 협력하여 가사노동을 분담한다',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한다'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 서울시의 평등가족 문화 확산 정책은 기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수의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함.

3.1.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평등가족 형성을 위한 문화컨텐츠 공모
 - 다양한 가족유형과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컨텐츠 공모를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자료수집 및 축적을 통해 평등 문화를 확산시킴.
- 평등한 가족 문화를 반영한 공공시설 마련
 - 평등한 가족 문화는 가족 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의식 확산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측면에서도 평등한 가족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변경이 필요함.
- 호주제 폐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홍보
 - 호주제 폐지로 사회적으로 부계혈연가족 중심의 가족이 규범적 가족으로 간주되던 데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게 됨. 모계, 양계, 모성(母姓) 가족, 비혼, 미혼의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2) 평등가족 실천 교육

○ 평등가족 교육 실시

- 가족주기별로 평등가족 교육을 실시함. 예비부부에게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유형, 평등한 부부의 역할, 자녀양육의 과정과 양육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세대에는 변화하는 가족 의식과 민주적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시행함. 다양한 가족과 세대가 함께 어우르는 대안적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필요함.

2) 추진계획

(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평등가족 형성을 위한 문화컨텐츠 공모

- 다양한 가족/평등 가족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경진대회
- 초등학교 평등가족 신문 제작 권장
- 평등가족 위반 사례집 발간
(예: '아빠의 안전벨트,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표어를 '부모의 안전벨트'로 수정 요구)

○ 호주제 폐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홍보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따른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 홍보
- 성 평등한 명절문화 보급
 - 부제와 모제 양가에 대한 균형 있는 관계 유지 강조
 -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명절준비 홍보
- 세대간 소통 및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안내하는 영상물 제작 및 활용 보급

(2) 평등가족 실천 교육

○ 평등가족 교육 실시

- 예비부부 교육
- 신혼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평등 부부/부모 교육
- 노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평등 부부교육
-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한 자립 생활 교육
-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평등 부부 및 가사노동 실습 체험 기회 제공

3.2.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정착

3.2.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선택권의 확대는 가족의 형태를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가족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개인이 선택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안에서 유연하고 평등한 가족관계에 기반한 가족 유대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안정성 확보는 물론 개인의 문화적 향수권 증진과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 부처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도 점차 가족을 단위로 하거나 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휴식이나 오락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가족관계와 건전한 사회문화 창출로 발전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핵가족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의 참여가 배제됨은 물론 가족의 폐쇄적 문화나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비의도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세대간, 성별 간 균형 있는 문화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가족여가문화는 어머니의 부담과 아버지의 소외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족문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과 젊은 층과 소비중심적 문화만을 강화할 수 있음.
- 서울시민의 평일 여가활용을 살펴보면, 'TV/비디오 시청'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가사' 49.8%, '휴식' 42.7%(복수응답 결과)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은 평일 저녁시간에 주로 '가사'로 소일한다는 응답이 절반(49.8%)에 달하고, 남성은 'TV/비디오 시청'이 34.4%임(서울시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수요조사, 2006).
- 서울시민의 주말 여가활용 역시 'TV/비디오 시청'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쇼핑' 42.8%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끼리 참여하는 오락 및 문화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23.4%, 6개월에 한 두번이라는 응답도 38.2%에 달함.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전체응답자의 84.8%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평일이나 주말 모두 대다수의 가족여가는 단순한 휴식이나 수동적 여가활동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 5일 근무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의 확대에 개인적 시간과 가족시간의 창출이 가능해짐.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가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5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휴무제(격주 휴무제 포함)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2004년 21.1%에서 54.2%로 증가하여, 토요일 휴무제가 빠르게 도입 확산되고 있음(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5).
-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문화적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지역사회 내 문화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문화센터 등을 통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보급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수동적인 문화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06년도 14개소 → 07년 26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다양한 가족여가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또한 꾸준히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옴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켜옴.

(표 V-1)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이

단위: 개

문화기반시설	2000년	2005년
박물관	81(1999)	83
미술관	17(1999)	26
일반공연시설	27	56
소규모 공연장	61	81
영화관	218	354

자료: 서울시, 『서울 서베이』, 2005:124

2) 필요성

- 이상의 가족여가 현황과 전망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더욱 다양해진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들의 평등한 가족관계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빈부격차를 확인케 하는 소비적인 여가문화를 점차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서의 여가문화 기반조성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다양한 가족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직장중심, 개인중심, 소비중심, 젊은 세대중심의 여가문화를 가족과 공동체중심의 문화, 성찰적 이고 체험적인 여가 형태를 확산함으로써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함.

-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우선시가 아닌 가족문화라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착을 통해 가족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가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통해 열린 사회문화를 지향하도록 함

- 개인주의와 경쟁의 구도가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후기산업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취에 의해 개인의 가치가 결정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소외와 불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세계 속에서의 친밀성, 안정, 유대 등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느끼고 체험하는 여가문화는 더욱 중요해짐.

3.2.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가족시간의 중요성 인식제고

- 과도한 개인 중심, 경쟁중심의 문화를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여 가족간 유대와 안정성 증진을 도모함. 현재 한국사회는 경쟁중심의 문화로 부·모는 직장생활,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우선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정작 가족과 공유하는 문화활동이나 대화시간은 매우 저조함.

- 서울시민의 경우, 평일 가족이 함께 하는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34.6%로 차지하고 다음은 '30분~1시간'이라고 답함(27.8%). 그러나 이러한 시간조차 대다수의 가족에서는 TV 시청이나 가사일, 회사 잔무처리 등으로 가족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가족간의 대화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인 가족시간은 물론 내용적인 가족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모두에게 가족시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음.

- 가족시간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할 가족권을 실현시킬 최소한의 가족 공유시간으로서 단순한 시간적 공유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유대를 증진 시킬 수 있

는 다양한 경험적 내용이 요구되는 개념임.

(2) 건강한 가족여가의 활성화

- 평등한 가족관계와 열린 가족문화를 체험하는 건강한 가족여가 문화 조성
- 단순한 수동적 여가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가족유대를 공유하고 각자의 사회적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확산시킴

(3)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

- 상업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진정한 가족관계와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여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동시에 체험함.
- 나와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성찰적 봉사 및 나눔의 문화 확산

2) 추진계획

(1) 가족시간의 중요성 인식제고

-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가족권 확보 캠페인
 - 가족시간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할 가족권을 실현시킬 최소한의 가족 공유시간으로서 단순한 시간적 공유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용이 포함되는 개념임.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평일 저녁시간에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5.2%에 불과(복수응답처리 결과29.2%). 그러므로 가족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
- 가족 및 부모시간의 중요성 제고 및 가족시간활용방법 및 관련 프로그램 홍보
 - 가구내 TV가 2대 이상인 가구도 많다는 점에서 TV 시청을 할 경우에는 '함께 TV 보고 대화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TV 보지 않기' 혹은 주중에 하루는 '가족과 독서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끄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족과의 눈을 맞추고 함께 공유하는 활동의 양을 늘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홍보함.
 - 가족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대표적인 가족사례를 발굴하여 이들 가족을 표창

하고 이들의 가족여가활용방법을 홍보함.

○ 가족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입 유도

-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가족 친화적 기업으로 서울시 인증마크 부여.
- 서울시 공무원의 늦은 밤 술자리 문화바꾸기, 다자녀 직원에 대한 가족복지 인센티브 강화전략을 정착시킴으로써 서울 지역 내의 일반기업으로의 가족중심적 여가문화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실천함.

(2) 건강한 가족여가의 활성화

○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가족단위 문화행사 활성화

- 가족단위 문화 참여 유도(할인제도 활용)
 - 서울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가족단위 참여시 비용할인
 - 서울시향음악회 가족단위 좌석 구매시 할인
 - 2005년 현재 서울시민의 연주회 참여는 연 평균 0.42회에 그치고 있음(서울서베이, 2005). 따라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 체험의 향유권 제고
 -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문화공간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정례화
 - 5월에 집중되기 보다는 일년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청소년기의 자녀, 학동기 자녀 등 가족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기획
 - 한부모, 조손, 새싹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고려한 문화 기획
 -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회관, 문화의 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 술자리 회식, 접대 등의 관습 폐지를 위한 기업체 참여 유도
 - 육아데이, 가족시간확보 캠페인 각 기업에 확산
 -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및 노인이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마련
- 가족여가 및 문화활동 콘텐츠 개발 및 정보구축
- 서울시 및 서울인근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위락시설을 가족의 관점에서 재분

류하고, 모든 가족성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가족주기별접근성과 이용도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준해 서울시의 등급마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공개함.

→ 서울시 및 서울인근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초중고의 교과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학습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여가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확대가족, 핵가족, 한부모, 새싹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주기별로 이용가능한 위락시설 및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 대중에게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동안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족문화 프로그램 확대.

○ 서울시 문화활동 체험 프로그램의 재정비

-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가족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가족단위의 접근도를 높임

→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부부 혹은 부 또는 모와 자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여 상시적인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문화활동 기획사에게 서울시에 소속된 공연장이나 시설 이용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

(3)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

○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형태의 가족봉사 형태를 확대하고 기존의 자원봉사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구마다 현황과 소식 및 이용방법 등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함

- 서울시민 자원봉사참여 정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서울서베이, 2005:117),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44%가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서울시 가족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2006).

: 특히 환경보전(2003년 참여회수 1.80회에서 2004년 3.02회, 2005년 3.31 회로

증가)와 자녀교육관련(2003년 1.48회에서 2004년 1.98회 2005년 2.42회) 봉사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형태의 봉사이용보다 편리하도록 지원함

○ 지역복지와 자원봉사활동이 연계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봉사를 체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지역구마다 공유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유형과 체험형태를 발굴함으로써 봉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고양함.

: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봉사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나타남 (서울시 가족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2006)에 따라 지역내 관련 복지관이나 해당가구를 연계하여 가족-복지관이나 시설의 개인, 혹은 가족-가족간 멘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모델 개발 및 교육

- 현대인의 바쁜 일정을 고려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족이 봉사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3.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가족문화 조성

3.3.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해 가족구성이 복잡해졌으며, 기존의 가족통념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장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 상호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함.
- 정보화, 세계화가 주도하는 사회문화는 혈연, 지연에 근거한 좁은 관계망이 아니라 소통가능한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다양한 개인적 유대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가족 및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 다소 감소함으로써 이혼율의 감소 혹은 정체 추세를 예고함. 그러나 지난 몇 십년동안 축적되어온 이혼인구와 재혼인구

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 일인가구, 재혼가족, 조손가족, 부메랑 가족(이혼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로 돌아가 동거하는 가족) 등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어촌 여성인구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국, 베트남 여성 등과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인구의 유입으로 외국인 가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새터민 가족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 향후 여러 국가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북한주민과 남한 주민의 결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들 가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우리의 문화적 전통사이의 차이로 인해 적응상의 문제나 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결혼연령의 지연 현상 및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결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따라서 결혼 전 성관계와 미혼 출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미혼출산의 증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의 증가나 친권이 포기된 미혼모의 자녀를 위한 입양 및 가정위탁의 증가로 이어짐

- 미혼모시설거주 미혼모 조사결과, 68.3%는 입양을, 31.7%는 양육을 하기를 원함(미혼모현황 및 욕구조사, 여성가족부, 2005)

○ 가족다양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수가족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편임. 현재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요보호가족 중심의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은 결혼이민자가족이나 저소득 수준에 있는 가족의 일부에 대한 서비스가 유일함

-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서울시 내부자료, 2006)

→ 13,805세대 36,240명 지원(2003년 기준)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

→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가족생활 상담지원

→ 출산·산후도우미 지원

○ 가족을 단위로 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의 가족여가 문화프로그램은 대체로 핵가족 중심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음, 특히 전업주부와 자녀 중심으로 운영될 때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는 반면, 주부의 50%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사회의 유희노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51.2%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가사'와 '육아'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남편들도 증가하고 있음. 전업주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 취업 등으로 연계시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서울여성, 서울시, 2006)

2) 필요성

- 이혼과 재혼으로 파생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분등록제도 및 기타 제도적 장치와 혈연중심의 폐쇄적인 사회문화의 전환이 요구됨.
- 타문화 배경의 가족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우리의 문화적 전통사이의 차이로 인해 상호 이해 부족,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형태상 소수인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 심리적 유대에 관한 욕구,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욕구 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임.
- 취업주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전업주부에 대한 상대적 소외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업주부의 경험과 활동을 사회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공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기혼여성의 50%에 달하는 전업주부는 자녀양육자 역할 등으로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인 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 그룹임. 전업주부의 요구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 취업 등으로 연계시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개인주의와 경쟁구도의 심화를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소외와 불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의 친밀성, 안정, 유대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개방체제로서 가족이 다른 가족 및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개별가족이 갖는 취약성과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가 됨

3.3.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가족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문화 조성

- 개인이기주의와 가족이기주의의 극복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연대와 공동체성 강화
-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회문화 조성

(2) 열린 가족네트워크 구축

- 특정 계층이나 문화, 형태를 넘어서는 가족간 상호이해와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유연한 공동체 문화 형성
- 혈연에 근거한 가족이기주의를 초월한 공동체의식을 통해 소통을 통한 공유와 상호이해의 문화 확산

2) 추진계획

(1) 가족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문화 조성

- 비혈연가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내용 검토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경험을 접수하고, 관련 법이나 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육관행을 모니터링의 과정을 권고하고 시정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배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열린가족문화 체험 기회 제공
 - 가족유형별 프로그램과 통합적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
 - 아버지 참여를 유도하거나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가족 안에 남성의 자리를 넓힌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성가구주 한부모 가족을 배제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음
 - 가족여가문화 중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의 문화행사 기회
 - 국제결혼이민자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세계의 가족생활양식을 소개하고 경험하는 이벤트를 통해 문화는 달라도 가족의 유대와 사랑은 보편적인 가치임을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교육 제공

-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공무원 대상 보수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내용 중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민감도, 사회적 수용 및 통합관련 내용 포함
- 현행 공교육 교과과정 중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차별적 내용여부 검토 및 시정
- 공교육 교과과정 중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민감도, 사회적 수용 및 통합에 관한 내용 포함

○ 다양한 가족(국제결혼이민자가족,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등)을 위한 온라인 고충 처리상담 창구 개설

- 서울시와 각 지역구 자체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한부모, 새싹, 조손가족 등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에서 가족형태가 다름으로 인해 경험한 오해와 불신이나 불편한 사회적 관행을 지적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이 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기된 민원을 분류하여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할 수 있게 함.

(2) 열린 가족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가족형태간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한자녀 가족, 노인부부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국제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쉽게 멘토링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가족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적인 생활상담이나 고충을 공유할 수 있게 함.

- 핵가족이나 소규모가족이 갖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와 이웃, 지역사회로 의 관심을 확장하는 계기가 됨

→ 각 지역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멘토링을 신청받고, 지역활동가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각 욕구에 부합하는 가족을 연계해주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간 품앗이 네트워크 구축

- 바쁜 현대인에게 지역단위의 자급자족적 품앗이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해줌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노동의 물물교환을 통해 이웃 부조의 미덕을 현대적 의미로 재생산함.

→ 일정규모이상의 APT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기존의 부녀회 조직을 이용하여 품앗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지원

- 학교 내 급식 및 청소 당번 등 전업주부의 유효노동력에 의존하거나, 취업부모와 비취업부모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여 시정
- 학부모활동, 가족여가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참여를 유도하여 성별이나 취업여부에 따른 의도적, 비의도적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학부모위원회나 반사회 등에 남성참여 비율 설정 및 권고

-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주부리더십 훈련 및 주부리더를 양성하고, 이러한 과정에 취업주부의 일정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간의 역할공유와 상호유대를 증진시킴. 리더십 훈련을 통해 배출된 주부인력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치활동과 문화활동의 자원인력으로 활용

- 취업주부의 경험과 전업주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생활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품앗이 문화조성
-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 파악을 통해 이들의 취업, 직업훈련, 자원활동 등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여성교실, 주민자치센터 등 현재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적합성 평가

- 전업주부의 인적자본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들의 훈련 및 교육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 내 공평한 역할분담과 자원공유를 강조하는 평등교육과 가정생활교육 확대
- 남성 전업주부의 요구도 파악 및 서비스 지원책 강구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4.1.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4.1.1. 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양아동 수는 2000년 1686명, 2001년 1770명, 2002년 1694명, 2003년 1564명, 2004년 1641명, 2005년 1461명으로 1990년(1647명) 이후부터 큰 변화가 없음.

〈표 V-2〉 국내·외 입양아수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입양아수	4,206	4,069	3,851	3,899	3,562
국내입양	1,770	1,694	1,564	1,641	1,461
해외입양	2,436	2,365	2,287	2,258	2,101

〈표 V-3〉 아동의 건강상태별 입양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입양(정상)	1,756	1,678	1,544	1,634	1,434
국내입양(장애)	14	16	20	7	27
국외입양(정상)	1,693	1,538	1,638	1,553	1,364
국외입양(장애)	743	827	649	705	737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팀)

- 입양 초기에는 기아로 인한 입양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미혼모의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1986년 이후 미혼모아동들의 입양이 전체 입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거의 90%에 달하였음. 2000년 상반기에 미혼모가 출산한 입양아는 전체 입양아의 93%로 추정됨.
- 입양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

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지서비스 및 그 밖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및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함.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여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실시.

○ 입양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시행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시킴.
-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의 입소를 우선시 함.
- 장애아의 경우, 입양 실적이 매년 10여 명에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2002년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 입양휴가제: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2주의 휴가(2007년부터 공무원 시범 시행).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 입양을 추진(2007년 1월 시행 예정).

○ 독신자 가족 입양 허용, 입양가정의 아동 수 제한규정 폐지 등 계획 중.

2)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입양은 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미약하여 결국 입양가정의 비용 부담이 커 국내입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 더구나 현재 비밀입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강력한 혈연의식에 기인하여 입양아와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고자 하므로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

-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입양도 또다른 형태의 출산이라는 인식,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양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입양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 또한 불임부부에게는 입양을 통해 자녀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족의 건강성과 사회 통합성을 강화하는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입양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있음. 잠재적인 입양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입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입양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일단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국내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할 때 지불하는 200만원 이상의 입양수수료는 입양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많은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포기하고 이렇나 비용을 부담하고 입양을 한 입양부모들은 '아동을 사고판다'는 느낌을 갖게 됨. 가능한 한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럴 수 없다면 비용을 현실화하고 지불방식을 바꿔야 함. 즉 입양수수료에 포함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것을 정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 고려해야 함(권지성, 2003).

4.1.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입양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입양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입양을 주저하지 않도록 함.
-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국민들이 입양과 입양절차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조성

(2) 입양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입양 가족이 입양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강화
- 입양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외의 원가족과 입양자녀와의 관계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입양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이 입양 이후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계획

(1) 입양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입양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입양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입양수수료 지원(200만원)
 - 입양 양육수당(월 10만원) 제공
- 입양가족의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강화
 - 일정소득 미만의 입양가족에게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입양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입양의 날(5월 11일) 행사를 통해 입양의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하는 캠페인 실시
 - 입양을 원하는 가족이 입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잠재 입양부모와 입양기관 연계 프로그램 마련

(2) 입양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입양가족의 적응을 위한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마련
 - 입양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자조집단 형성 프로그램 마련
 - 입양가족들간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집단 형성, 운영
- 입양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마련
 - 입양가족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가족 상담 프로그램
 - 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가족에게 상담 out-reach 프로그램 제공

4.2.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4.2.1. 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국제결혼 비율이 점차 높아짐. 외국인 처(妻)와의 혼인 건수는 2001년 2,527건, 2002년 2,649건이던 것이 2003년 4,744건으로 높아지더니 2004년에는 6,565건,

2005년에는 7,637건으로 증가. 중국 처와의 혼인이 이중 약 81%에 달하고, 베트남,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남.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도 2001년 1,787건이었던 것이 2004년 2,920건, 2005년 3,870건으로 증가.

- 전체 혼인 건수가 2001년 77,376건이었던 것이 2005년 71,286건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국제결혼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국, 베트남계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을 통해 결혼 이민 가족이 크게 증가함.
-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급증

2) 필요성

-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언어소통 문제, 생활 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가정·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냄. 대부분 저소득가구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함.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함(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2006).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32.8%), 한글·문화 교육서비스(32.5%), 가족상담서비스(16.2%), 자녀양육·교육 지원 (13.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녀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4.2.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결혼 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모성보호·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방안마련
-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소득원을 위한 고용 안정 방안 마련

(2) 결혼 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체계 구축
- 결혼 이민자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마련

2) 추진계획

(1) 결혼 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주거비·자녀양육비 지원
 - 일정 소득 미만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주거비 보조
 - 일정 소득 미만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지원
-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의료비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받을 수 없는 결혼 이민자에게 입원비·수술비 지원
- 직업·기술 훈련과 고용상담 서비스
 - 취업희망 결혼 이민자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 제공
 - 취업희망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이력서작성·면접 준비 교육 제공

(2) 결혼 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을 위한 성인교육 실시
 -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연계하여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 상시 운영
 - 교육시간 센터(기관)내 놀이방 운영
-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서비스
 - 초기정착, 안정적 체류, 혼인·이혼 관련 법률 문제와 범죄 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할 수 있도록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무료 상담·자문 기회 제공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제공, 자녀 교육·생활 정보 제공
 - 언어 차이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모

국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

- 자녀 교육·생활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자료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 이민자 가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

4.3.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4.3.1. 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비와 보육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 서울시 한부모 가구 수는 270,199세대로, 부자(父子)가족이 51,978가구, 모자(母子)가족이 218,221가구이다. 2000년 당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7%였고,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족의 비율은 19.2%, 모자가족의 비율은 80.8%로 모자가족의 비율이 더 높음. 한부모가구 중 유배우가구 비율은 23.6%, 사별가구 41.3%, 24.1%, 이혼가구 24.1%, 미혼가구 10.9%임.

○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지원 대상인 한부모 가족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가구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23,16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0,067가구로 43.5% 정도임.

○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 모부자복지법상 지원 대상⁹⁾에게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¹⁰⁾ 등의 급여가 주어짐(표 V-4).

9)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모 또는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통과한 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1만원이하	122만원이하	152만원이하	176만원이하	201만원이하

10)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금 대출 등은 서울시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사업임.

〈표 V-4〉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고등학생자녀 학비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동사무소에 신청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2000.1.2.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5만원	동사무소에 신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근로능력 및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	- 용도 : 창업, 주택자금 - 대여조건 :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3% 고정금리	- 신청(동사무소) ⇒ 심사·결/금 용기관통보(구청) ⇒ 자금대여(농협)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무상보육 / 1인당 월 158천원~350천원· 연령별로 차등지급	보육시설에 모·부자 가정증명서 제출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모자보호시설 : 6개소 일시보호시설 : 2개소 미혼모시설 : 4개소 (358세대) 미혼모중간의집 : 1개소	-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 시설기능보강	구청 모·부자복지 업무 담당자와 상담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학용품비, 자녀교통비,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융자, 모자보호시설 운영,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미혼모시설 운영, 직업전문학교 우선 입학, 여성발전센터 일반직업교육 과정 우선 이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표 V-5).

〈표 V-5〉 서울시 자체사업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자녀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중 고등학생 자녀	- 초등학생 : 5,000원/분기 - 중 학 생 : 7,500원/분기 - 고등학생 : 10,000원/분기	동사무소에 신청
자녀교통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 연 240일 : 1,280원/1일	"
임대료 보조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 하여거주하는 최소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모부자 가정	- 2인이하 : 33,000원/월 - 3~4인 : 42,000원/월 - 5인이상 : 55,000원/월	"
임대보증금 융자	임대주택(영구임대제외) 입주자로최초로 선정된 자로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 300~500만원 저리융자 (연리 3%, 7년 균등상환)	SH공사에 신청
모자보호시설 운영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3년 이내 보호(2년연장 가능) - 생계비, 학비 등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동사무소에 상담·입소의뢰
모자일시보호 시설 운영	배우자의 학대를 받는 모자가정	- 6월 이내 보호(3월연장 가능) - 생계비 등 지원	"
미혼모시설 운영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미만)의 요보호 여성	- 6월이내 보호(6월연장 가능) - 생계비 등 지원	"
직업전문학교 우선 입학	저소득 모·부자가정	- 시립직업전문학교(4개소) 우선 입학 - 교육훈련비·기숙사비·식비 등 교육훈련비 무료	직업전문학교에 신청
여성발전센터 일반직업교육 과정 우선이용	저소득 모·부자 가정	- 교육명 : 일반 직업교육과정 - 세부 지원사항·수강료 면제·재료비·교재비 지원	여성발전센터에 신청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2) 필요성

- 정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로서 경험한 어려움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은 '자녀 양육 및 교육'이고, 생계문제, 직업 불안, 주거문제 등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과 교육, 생계,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녀 양육상 어려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료 및 교육비,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 부족 등 자녀 양육상의 경제적 문제, 보육시설 및 도우미 수요가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적 및 학습지도, 한쪽 부모의 역할 부재에 따른 지도 문제, 자녀의 교우관계·이성관계 지도 등의 자녀 교육과 상담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남.
- 한부모 가족은 정부가 자녀 양육수당 지원, 자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건강정보 제공 및 의료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 부모 홀로서기 및 현실 극복 프로그램, 보육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함. 특히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자녀양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상담과 부모 교육과 같은 정서적 지원도 병행해야 함.
- 사별 및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뿐 아니라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2005)에 의하면 미혼모 10명중 7명은 스스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의 37.7%도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양육을 직접 원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족을 다양한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4.3.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양육비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시켜 나감.
- 한부모 가족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용연계방안을 강구하여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 보육시설이 증대되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한부모 가족의 보육에 대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킴.

(2)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남
- 갑작스런 가족해체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절한 상담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

- 한부모로서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정보와 상담 제공

2) 추진계획

(1)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확대
 - 현재 최저생계비 130% 정도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정도까지 확대
 - 학용품비와 교통비 지급 수준 인상
-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시설 우선 배정
 -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 보육시설 대기자 우선 순위 배정
- 직업훈련 무료제공, 고용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저소득 모부자가족에게 한정된 현재 시립 직업전문학교와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무료 수강기회, 대상층 확대.
 - 민간 직업훈련 시설 이용시 교육비 지원.
 - 고용지원센터 등 한부모가족 부모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일자리 우선 연계 서비스
- 미혼한부모 가족을 위한 그룹홈 확대

(2)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한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 건강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마련
 -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놀이방, 공부방 운영
- 가족 스트레스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 기능 중 한부모 가족의 가족스트레스 상담 기능 강화
 - 상담 out-reach program 마련
- 자조집단 형성 프로그램
 -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역할, 교육·양육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상호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집단 조성·운영 지원

-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
 - 가족과의 단절 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
 -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 지원

4.4. 노인 가족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

4.4.1. 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서울시의 노인단독가구 수는 2000년 현재 89,812가구로 전체 가구의 3% 정도를 차지함. 여성 노인 가구의 비율은 79.1%, 남성 노인가구의 비율은 20.9%로, 여성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훨씬 높음(통계청, 2000).
- 서울시의 65세 이상 연령 가구주인 노인가족 수는 2000년 현재 261,514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임. 이 비율에는 노인단독가구도 포함된 것이며, 한부모가족 가구 규모와 유사함.
- 이렇듯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가족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가족에 대한 가족정책 마련이 시급함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독신가구가 24.6%로 1998년도 20.1%에 비해 3.5% 포인트 증가하였고, 노인부부가구는 26.6%로 1998년도 21.6%에 비해 5% 포인트 증가함. 이에 비해 자녀 동거 노인가구는 1998년도 53.2%에서 2004년도에는 43.5%로 9.7% 포인트 감소.
- 노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 경로연금, 교통비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요양시설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 이용 등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노인 가족 정책이 요구됨.

2) 필요성

- 노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현행 저소득층 대상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 있음.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 결과 노인가족에 대한 정책·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의료지원 서비스'가 31.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요양시설/전문병원 확대' 29.2%, '지역의 복지시설 확대' 15.4%, '간병인 서비스 확대' 14.1%, '주거 개선/보수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순으로 나타남.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정방문(간호)서비스가 이용희망률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욕구가 증폭되어 다른 세대·가구에 비해 건강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노인 가족에 대한 예방·치료 차원의 건강 관련서비스는 사회의 의료비 지출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음.

4.4.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노인 가족의 주거·의료 환경 개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가족이 다른 가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 노인단독가구·노인부부가족의 생활상 불편, 건강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

(2) 노인 가족의 가사·돌봄 서비스 강화

- 노인 가족의 가사지원·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층을 확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지원·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사도우미와 돌봄 도우미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우미 교육 내실화

2) 추진계획

(1) 노인 가족의 주거·의료 환경 개선

- 저소득 노인가족 무료 주거 개선 지원사업
 - 노후된 주거 시설, 거동이 불편해집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주거 설비 개선 지원
 -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시하되 점차 대상층 확대
- 저소득 노인가족 방문의 시스템 도입
 - 노인 가족의 건강상의 욕구, 신체 능력 약화에 예방적·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방문의 시스템 도입
 - 노인 질환 전문의-간호사-간병인으로 구성된 방문의 팀제 설치·활용

(2) 노인 가족의 가사·돌봄 서비스 강화

○ 무료·실비 가사·돌봄 도우미 지원

- 기초수급자에게 제공되던 무료 가사·돌봄 도우미 지원,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

○ 가사·돌봄 도우미 교육 내실화

- 돌봄 도우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실시
- 수요자 요구별로 돌봄 도우미와 노인 가족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

5.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5.1.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5.1.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정책 추진 조직 현황

- 2005년 6월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가족정책의 추진 토대가 마련됨.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중임.
-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및 관련 시책 심의를 위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지니고 있으며 2006년 9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칠 예정임.
- 서울시는 2005년 1월 5일 경영시정을 위한 민선3기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복지·보건·여성·보육 등 기능이 혼재되어 비대화되어 있던 복지여성국에서 여성·보육 업무를 분리하고 문화국 소속의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별정1급 상당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청소년 담당관을 둬으로써 여성·보육·청소년 등 가족복지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되었음. 아울러 가족보육담당관에 '미래사회준비팀'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보육담당관의 인력은 다음과 같으며 총 23명의 인력이 근무

하고 있음.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표 V-6〉 서울시 가족정책 담당부서 - 가족보육담당관 - 인력 현황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	20	2	1	23

2) 필요성

- 서울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관하에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청소년정책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보육담당관과 청소년정책담당관을 두고 보육과 가족관련 업무가 가족보육담당관에서 아동복지 업무는 청소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가족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한 대상으로서의 정책이 아닌 가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가족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함.
 - 가족정책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현재 1국 3팀의 체제를 갖춘. 가족정책국은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가족문화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전달체계에 부응하여 서울시에서도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확충하고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가족보육담당관을 보육지원과와 가족정책과로 분리-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기획팀, 가족지원팀, 가족 문화팀, 아동복지팀, 지원센터 운영팀 구성
-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제정에 따른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또한 분산되어 있는 가족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함.
-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포괄적인 가족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건강가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및 설치가 필요함.
- 가족정책의 효과성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광역단위의 행정체계 및 기초단위의 체계를 집행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가족정책과 신설에 뒤이어 자치구 단위에서의 가족정책팀 신설을 통해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관계기관 담당인력을 교육

할 필요가 있음.

-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사업진행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 가족정책의 연계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해 시 및 자치구 가족정책 관련 부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1.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기구 조정

-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정책과 신설
- 자치구 가족정책 전담 부서 설치 권고

(2)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조정강화

- 자치구 및 관계기관 담당인력 교육 실시 및 확대
- 시 및 자치구 가족정책 관련 부서, 가족지원 서비스기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추진 계획

(1)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기구 조정

-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정책과 신설
 - 가족보육담당관의 가족문화 팀 신설
 -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분리
 - 타 부서(청소년 담당관, 노인복지과 등)와의 업무 조정
- 자치구 가족정책 전담 부서 설치 권고
 -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명칭을 가족정책과 및 가족정책팀으로 변경
 - 여성정책팀과 가족정책팀 분리
 - 각 자치구에 가족정책 추진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2)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조정강화

- 자치구 및 관계기관 담당인력 교육 실시 및 확대
 - 공무원의 가족인식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가족정책 과정 신설

- 가족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의 교육 과정 기획, 개발 및 운영
- 시 및 자치구 가족정책 관련 부서, 가족지원 서비스기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 및 자치구 가족정책 관련 부서로 1차 가족정책 협의체 구성
 - 1차 가족정책 협의체 모임의 정례화
 -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파악 및 대상 기관 선정
 -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이 포함된 2차 가족정책 협의체 구성
 - 2차 가족정책 협의체 모임의 정례화

5.2. 가족정책추진 전달체계 확립

5.2.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며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현재 가족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조로 되어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재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음.
 - 2006년 로 확대 예정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 자치구 센터를 평가하며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는 건강가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05년에 '도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표 V-7〉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06. 8. 2. 기준)

설치구	운영주체	주요사업	위치	개소일
종로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한부모·자 자조모임 운영 갈등부부 집단상담 가족심리검사 등	동부여성문화센터	06.07.15
용산	숙명여자대학교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부성격 차이 극복하기 가족봉사단 운영	여성회관·	04.07.01
성북	고려대학교	부부성격 상담 치료 결혼준비교육	사회교육원 1층	06.03.06
강북	성신여자대학교	결혼준비교육 내 아이 리더교육 부부갈등해소	강북웰빙센터 3층	05.07.01
도봉	직영	부모상담 등 노령기 교육 건강가족케어매니저 교육	구청 3층	06.06.30
성동	직영	결혼준비교육 한부모 가족캠프 부부교육	성동문화원 1층	06.04.06
동대	경희대학교	우리가족햇빛 통신 고 3 수험생 부모 전략 가족이 함께 소풍제작	생활과학 연구소	05.08.01
은평	환원학원	지역사회캠프 한부모가정캠프 가정상담	신사동 26-45	06.07.12
마포	직영	부부교육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등 지역아동센터 순회 상담	연남동 사무소	· 06.06.01
동작	중앙대학교	한부모가족캠프 중·노년기 교육 부부교육	보건소 지소 2층	05.07.01
영등포구	대한불교조계종	결혼예비부부 교육 한부모 가족 지원	구청 3층	06.05.01
서초	한국가족상담교 육단체협의회	우리가족 성격유형 알기 부모역할 훈련 바람직한 부모교육	구민회관 2층	05.07.01
관악	서울대학교	이혼위기부부교육 노후 설계교육 사회성교육	생활과학 연구소	05.07.01
송파	(사)아이 코리아	아동·성인·심리검사 올바른 교육 특강 전통문화활동 예절교육	(사)아이 코리아내	05.07.01
강남	밀알 복지재단	부부개신 집단 상담 가정생활 교육 가족영화 및 음악회	가정복지센터 1층	06.01.01

2) 필요성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해야 함
- 서울시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향후 중요해질 것임.
- 서울시민으로서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점차 필요해짐.
- 여성정책과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관점 강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2.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자치구 센터 평가, 서울시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연수 등의 방안 마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과 일관성을 지니면서 서울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자치구 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 및 자치구 센터의 심사 평가 기능 강화

(2)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운영 내실화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보강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의체 모임의 정례화

(3)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업심의)

○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운영

2) 추진계획

(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건강가정프로그램 개발

○ 종사자 성인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위탁교육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 자치구 센터와 연계한 가족의 날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 건강가정 프로그램 모범 사례집 제작 및 발표회 개최

○ 가족관련 전문가 DB 구축

○ 서울시 건강가정 소식지 발간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타 기관 연계 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수준의 가족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파악 및 DB 구축
- 통합 서비스를 위한 one-stop system 구축

(2)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운영 내실화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 2006년 개소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보강 권고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협력체계구축

- 서울시 및 자치구 센터 협의체 구축

(3)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 정례화

○ 자치구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권고

- 서울시 센터에서 구축한 가족관련 전문가 DB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권고

5.3. 가족정책 추진 기반 마련

5.3.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부자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있으며 노인수발보험법이 통과되어 2008년부터는 노인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 있으며 서울특별시건강가정조례를 추진중에 있음. 자치구의 경우 2006년 9월 기준으로 마포, 서대문, 용산구의 건강가정기본조례가 있으며 강북구와 광진구가 추진중에 있음.
- 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족관련 업무는 하나의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조례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이 연구용역 완료 후 공청회를 거쳐 지속적인 수 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1차 기본계획 수립후 중간단계에서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간점검과 평가를 거쳐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각 자치구에서 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인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을 2004년부터 발간하고 있음.
- 서울시가 1999년부터 매년 서울여성백서 발간을 하고 있음 여성정책백서에는 여성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 여성정책추진실적, 보육·아동정책 추진실적을 제시하

고 있음.

- 자치구 추진부서 현황- 자치구의 경우 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음. 가족정책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여성정책, 보육, 아동복지 등에서 나누어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음.

구 분	실국명 부서명	업무별 담당				팩스번호
		여성정책	보 육	요보호/여성보호	아동복지	
종로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731-1323)	가정복지팀 (731-1324)	여성·청소년팀 (731-0491)	가정복지팀 (731-1320)	731-0814 731-0616
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 (2260-1705)	가정복지팀 (2260-1705)	가정복지팀 (2260-1705)	가정복지팀 (2260-1705)	2260-1159
용산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710-3357)	보육지원팀 (710-3359)	여성복지팀 (710-3357)	청소년팀 (710-3358)	710-3677
성동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팀 (2286-5447)	보육지원팀 (2286-5442)	가정복지팀 (2286-5432)	청소년팀 (2286-5437)	2286-5924
광진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450-1359)	가정복지팀 (450-1356)	여성복지팀 (450-1359)	청소년복지팀 (450-1358)	450-1691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2127-4356)	가정복지팀 (2127-4242)	여성청소년팀 (2127-4356)	여성청소년 (2127-4254)	2127-5109
중랑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90-3491)	유아복지팀 (490-3490)	여성복지팀 (490-3491)	유아복지팀 (490-3490)	490-3779
성북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920-3290)	가정복지팀 (920-3276)	여성복지팀 (920-3494)	청소년복지팀 (920-3288)	920-2936
강북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901-6490)	가정복지팀 (901-6491)	사회복지팀 (901-2249)	청소년복지팀 (901-6493)	901-6112
도봉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2289-1492)	가정복지팀 (2289-1521)	건강가정팀 (2289-1366)	청소년팀 (2289-1494)	2289-1732
노원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950-3492)	민간보육팀 (950-3277)	여성복지팀 (950-3285)	여흥복지팀 (950-3284)	950-3494
은평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50-1617)	가정복지팀 (350-3687)	여성정책팀 (350-1617)	청소년팀 (350-3436)	350-1704
서대문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330-1492)	가정복지팀 (330-1490)	여성복지팀 (330-1492)	청소년복지팀 (330-1492)	330-1624
마포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팀 (330-2656)	가정복지팀 (330-2653)	여성팀 (330-2658)	여성팀 (330-2658)	330-2650
양천구	복지경제국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2650-3325)	보육지원팀 (2650-3328)	여성정책팀 (2650-3325)	청소년복지팀 (2650-3327)	2650-3462

구 분	실국명 부서명	업무별 담당				팩스번호
		여성정책	보 육	요보호/여성보호	아동복지	
강서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2600-6491)	유아복지팀 (2600-6493)	여성복지팀 (2600-6763)	청소년팀 (2600-6764)	2600-6332
구로구	생활복지국	여성정책팀 (860-2843)	유아보육팀 (860-2842)	여성정책팀 (860-2843)	청소년팀 (860-2846)	860-2655
금천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890-2260)	보육지원팀 (890-2261)	여성복지팀 (890-2262)	청소년팀 (890-2263)	890-2283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2670-3354)	보육지원팀 (2670-3360)	여성복지팀 (2670-3354)	청소년팀 (2670-3647)	2670-3647
동작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820-1491)	어린이복지팀 (820-1490)	여성정책팀 (820-1491)	여성정책팀 (820-1491)	820-9988
관악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880-3642)	가정복지팀 (880-3619)	-	청소년복지팀 (880-3624)	880-3776
	보 건 소 복지사업과	-	-	복지운영팀 (880-0277)	-	880-0295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570-6490)	가정복지팀 (570-6490)	여성복지팀 (570-6490)	청소년복지팀 (570-6490)	570-6148
강남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2104-1650)	가정복지팀 (2104-1642)	여성복지팀 (2104-1648)	청소년팀 (2104-1655)	2104-2423
송파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10-3490)	보육지원팀 (410-3491)	여성복지팀 (410-3492)	청소년보호·육성 (410-3493)	410-3835
강동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80-1256)	유아복지팀 (480-1253)	여성복지팀 (480-1357)	청소년복지팀 (480-1261)	472-3987

2) 필요성

- 서울시 건강가정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자치구의 건강가정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족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가족/보육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정정책을 위한 성별분리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여성통계에 가족/보육 분야를 확대 보완하여 통계를 발간할 수 있으나 성별분리뿐 아니라 가족통계에서는 연령(혹은 세대) 구분된 통계도 필요하므로 분리 발간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가족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형태별 가족특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결혼이민자가족과 같이 서울시 전 가족을 모집단으로 하는 가족실태

조사에서 표집되기 어려운 가족형태의 경우 별도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임.

- 가족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1999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여성백서에 가족과 보육 분야가 확대된 여성/가족백서 발간이 필요함.

5.3.2. 세부과제

1) 추진방향

(1) 가족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 가족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2)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계획 수립독려

- 서울시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 자치구 가족정책기행계획 수립을 유도함

(3) 서울시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육구 조사/연구

- 서울시 가족형태별 가족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함
- 가족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정기적으로 생산함.
- 가족정책추진 및 성과를 정리할 수 있는 가족백서를 발간함.

2) 추진계획

(1) 가족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 가족관련조례 제 /개정 및 시행
 - 제반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 자치구 가족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시행
 - 자치구 가족관련 조례 제/개정 권고

(2)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계획 수립독려

- 서울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1차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이행 중간 점검 및 평가

- 2차 기본계획 준비

○ 자치구 가족정책시행계획 수립 유도

(3) 서울시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연구

○ 가족실태조사 실시

- 주기적으로 서울시 가족실태조사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가족관련 통계 생산

- 가족/보육통계 발간

○ 가족백서 발간

- 서울가족백서(여성/가족백서)발간

2) 필요성

참고문헌

- 고정민. 2006. 여가트랜드 . 2006국민여가조사 발표 및 여가트랜드 분석.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 고정민·정연승. 2005.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경. 2003. KLIPS Research Brief 4, 1-5
- 김진선, 이온현. 2001.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고찰: 국의 휴식서비스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제16호.
- 김혜원. 2006. 한국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호(20호), 41-58
- 노동부. 2005. 노동부 보도자료, 2005. 10. 27.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새로마지플랜, 2006.
- 문숙재, 윤소영, 차경옥, 천혜정. 2005. 여가문화와 가족. 신정
- 민승규·김용기·이갑수·김근영·손민중·양준호·최희갑·최홍·심창섭.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박미석·이유리. 2003. 한국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 보건복지부. 2005. 국내외입양현황보고
- 서문희 외. 2004.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특별시. 2005.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2005. 서울도시계획.
- 심상민. 2002. 문화 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72호
- 양정호. 2004.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

모형분석. 제 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윤주현 · 강미나 · 송하승. 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 사회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미숙. 2004.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 이론의 적용과 뿌리찾기.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3,3, 477-484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각년도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각년도.

여성가족부, 새싹플랜: 중장기보육계획, 2006.

여성가족부. 200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5. 5. 29

여성가족부. 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

일본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2003. 인구통계자료집.

장혜경, 김혜영 외. 2006.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장재철 · 전영재. 2006.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전영옥. 2005. 웰빙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슈 페이지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2005)」

차별시정위원회. 2006.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2001:29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00)」

통계청. 2005. 「가계조사」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개발원. 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제안



